

# 第198回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7號

國會事務處

日 時 1998年11月25日(水)

場 所 第2會議場

## 議事日程

1. 1999年度豫算案

## 審査된案件

1. 1999年度豫算案(계속) ..... 1面

(10시09분 개의)

○**委員長 金鎮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오늘까지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중 아직도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는 오늘이 綜合政策質疑 마지막 날임을 명심하셔서 오늘 중으로 성실히 제출하여 모래부터 시작되는 部別審査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 1. 1999年度豫算案(계속)

(10시10분)

○**委員長 金鎮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年度豫算案을 계속 상정합니다.

○**李信範委員** 위원장, 議事進行發言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鎮載** 예,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부측에 대한 政策質疑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綜合政策질의 최종일로서 오후 답변시 國務總理께서 출석하시어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되어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도 예정된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를 하신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되 국무총리의 답변부터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李信範 委員님, 의사진행입니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李信範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安企部 豫算중에서 이른바 204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경비라고 해서 각 부처에 숨겨진 예산총액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또 고문관련자인 박재훈 수사1단장과 성종환 과장을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免責特權을 가지고 직무상 국사에 관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기부는 '이것이 판결을 앞두고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李議員의 정치공세 내지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다'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안기부는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또 정치기관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 할 말이 있으면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든지 아니면 검찰에 나가서 수사중인 고문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일이지 공개적으로 정보기관이 국회의원을 비난하고 나선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기부장은 한나라당에 公式謝過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논평을 한 公報特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보기관이 공보특보를 두고서 언론에다가 대고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물의는 안기부가 搜查權을 가지고 고문을 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수사권을 포기하고 별도의 대공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도 고려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기 혁신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정부당국에 대해서 豫備費의 총액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97년도 예산에 財經部 豫備費 204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돈은 약 4,020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심의하는 예산에는 5,000억 내지 6,000억원의 안기부가 쓸 돈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공작에 이 돈이 사용될 일이 없다면 국가가 어려운 이 마당에 적어도 반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李鍾贊 安企部長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고문을 한 자들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豫備費 豫算은 동결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안기부에서 전기고문도 당해 봤고, 잠 안 재우는 고문도 당해 봤고, 별의별 협박과 회유를 다 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안기부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번도 자신들의 人權侵害를 시인하거나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관련자를 처벌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安企部 拷問關聯者를 색출해서 수사하라는 주장은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버릇을 못 고친다면 이 나라에는 인권이 다시 한번 침해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싶고 李鍾贊 部長이 과거에 그 분이 어떤 정치적 경력을 가졌든 또는 공작기관에서 한 때 몸 담았던 적이 있더라도 안기부를 쇄신하는 일에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앞장선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安企部가 국회의원의 職務上 發言에 대해서 참으로 방자하게 참으로 협박성의 이런 논평을 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회로서 안기부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당국은 豫算規模를 공개를 해서 납

세자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을 공개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言論社들의 負債規模가 어떻다는 것은 본위원이 대강 윤곽을 파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5,000만원이상의 법인세를 낸 언론사가 조선일보를 빼놓고는 없다는 것이 거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의 경영상태를 물론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비밀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공개해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言論自由에 대한 내외적인 위협요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法人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못 내면 왜 못 내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름을 밝히기가 곤란하다면 숫자라도 밝혀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鎮載 李信範 委員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각 교섭단체 3당 간사들하고 한번 의견조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연합의 吳長燮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長燮委員 자유민주연합의 충남 예산 출신 吳長燮 委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99년도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밤잠을 설치시면서 고생 많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국회의원의 입장과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생각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막대한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여해서 국민의 바람 그대로를 얼마만큼 이해와 편입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豫決委의 位相이 얼마만큼 현실에 입각해서 역할을 하느냐가 큰 과제입니다마는 15분이라는 하나의 발언을 통해서 의지를 표명하고 참여하는 데는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치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라고 평가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하는 정치상황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표출되지 못 하는 그 부분 때문에 政治不信으로 인해서 우

리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 하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豫決委員會는 최소한도 常設化되어야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국무위원들이 하는 역할과 집행하는 모든 부분을 늘 감시 내지는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첫째 조건이라는 생각속에서 아쉬움속에서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위원장님 그리고 재경부장관님, 97년도 결산을 하면서 99년도 예산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고 어떤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위원은 部處別 總額 豫算을 우선 설정하는 방법이 최선의 과제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총리와 기획예산위원장, 재경부장관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構造調整은 인원을 몇 천 몇 만명을 퇴출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이라고보다는 구조조정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구조조정의 정의를 새롭게 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덧니가 난 것을 뽑아내는 것은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미관적인 차원에서 덧니를 뽑을 뿐입니다. 사람을 퇴출시키는 것보다는 있어야 될 조직과 없어야 될 조직을 다시 재편해서 투자한 재정의 효율성과 투자할 여건을 만들어내고 없앨 조직은 없애 버리고 있어야 할 조직은 더욱 더 증대시켜서 바로 구조를 편성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본연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YS政府가 개혁중에 가장 못 하고 失機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구조라고 생각합니다. 行政構造改革입니다. 행정조직개편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등등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까마는 결국은 국민과 거리를 좁히지 못 했고 예산절감과 효율적 통치나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혁은 손도 대지 못 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국민의 정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 출범 12개월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로 필요한 조직과 퇴출이 되어야 할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출되어야 할 조직이 2000년 아니 2001년으로 연구검토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개혁과 구조조정이 국민의 바람

에 마음을 안착시키지 못 하는 부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뜻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의 바람과 국민의 정성이 무엇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시고 계십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그룹이 변하는 모습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늘 언론에서 보도되는 5대그룹 형성을 질의하고 있습니까마는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5대그룹이 혹시나 개인의 재산이나 사적인 재산을 축적하는 계기로 삼고 있지 않나 하는 말없는 다수의 목소리가 이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尹鐵相 委員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유사성격의 예산편성체제를 조성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연금이나 기금이나 정부출자·출연기관, 조합의 형태 모든 부분이 새롭게 국민의 혈세를 보이지 않는 곳에 돕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형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연금이나 기금이나 정부출자·출연기관 또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적으로 도와주지 않더라도 조합의 형태가 너무 난무해 가지고 국민의 소비성향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현실은 구조조정의 첫째의 과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李麟求 委員께서 99년도는 '노인의 해'라고 재경부장관께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지보다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이 기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 측면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합니다.

재경부장관님, 지금 도살장에서 잡는 소머리 하나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웃지 마세요.

소머리 하나가 거의가 버려지는 상태고 이게 만원입니다. 이것을 정치인들이 갖다 노인들을 모시고 싶어도 정치적인 입지이기 때문에 選舉法 관련 등등 해서 모시지 못 하는 심정이고 현실입니다.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정부에서 노인을 모실 수 있는 動機賦與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천억이니 몇 백억이니 자금을 투자하기 보다는 동기부여를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건의드리면서 대안을 촉구합니다.

개혁, 구조조정, 예산, 정책질의, 효과, 역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마는 현제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국민의 바람과 바로 반세기 50년 속에서 우리의 변한 모습을 만들 수 있는 제도형성이 안 됐다는 것을 저부터 책임지고, 국회부터 책임지고 국무위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전문성이나 국제적인 감각이나 시류를 보는 판단력이나 또 여러 측면에서 볼 적에 관료적인 입장이나 각료적인 입장이나 모두가 우월하십니까라는 사회적인 봉사적인 측면이나 국민들과 대화하는 측면이나 민의를 접촉하는 측면은 저희보다 좀 부족할 것입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行自部長官, 行政組織 改編, 도·시·군, 읍·면·동 구조조정이 첫째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 법무부장관, 辯護士 附價稅關係는 국민의 혈세이고 국민 구조조정 차원의 한 측면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사건의 집중성을 보면서 하나의 조직폭력배 등등 개개인 등등을 보면서 큰 사건과 이 대낮에 넘나드는 큰 조직들은 그대로 숨어들면서 조그마한 사건 가지고 하나의 효과성을 요구하면서 실적위주의 법무부 집행형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부장관, 部處別 總額豫算制度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무사의 부가세제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합, 협회, 국민이 부담하는 조합, 협회의 기능과 역할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복지부장관, 노인정책, 보건소, 지금 약값이 폭등하고 폭리가 증대하는 이 즈음에서 우리의 보건행정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교사의 활동동기를 부여하는, 교사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영역을 돈 몇 십억 몇백억을 주지 못해 가지고 교사의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부장관, PCS남용, 국민들이 그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림부장관, 構造改善을 통해서 42조를 투입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은 푸대접 받고 있고 멸시한다고 이렇게 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구조개선, 배수개선사업 이것을 제대로 했으면 오늘과 같은 홍수기에 무난히 평년작을 넘었을텐데 이것조차 불과 몇 천억에 불

과한 배수개선사업, 얼마나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그대로가 적합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不法漁業을 통해서 허가난 어업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대기업에 편향된 공정거래부분과 일반 중소기업과 개인의 공정거래부분의 그 겹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감위 위원장님, 銀行金利가 이번 IMF로 인해서 폭리, 폭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중간과정에 금리가 국민경제에 얼마만큼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農工團地가 늘고 있습니다. 권역별 산업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 포항제철이나 광양만 이 모든 것이 아산만이 가장 적격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치적으로 밀려갔는데 그 당시 牙山灣에 했더라면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줄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건교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私有財産權을 보호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상수도보호지역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관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일들이 모두가 구조조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세입전망 신뢰 의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전망을 너무 낙관하여서 99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감을 가지면서 기획예산위원장과 재정경제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정부의 稅收推計方式은 전년도의 세입전망에 예상증가율을 곱하고 세법개정에 따른 증감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증가율로는 보통 경제성장률과 세목의 지난 5년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년간 평균 또는 그 세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결정변수의 3년 평균 등 대략 세 가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稅收推計의 誤差는 첫째는 전년도의 세입전망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문제와 두 번째

는 세 가지 유형의 예상증가율 전망이 합리적이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세법개정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였느냐 하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와 부가세 수입분의 경우에는 수입액과 환율에 대한 전망의 정확도에 의해서 오차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위원은 99년도 세입안을 재정경제부의 추계모형 그대로를 바탕으로 재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세수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99년도 세입예산의 기본이 되는 98년도 稅收展望의 正確度에 대한 의문입니다.

98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예외적으로 2회에 걸친 追更을 실시하였고 주원인인 세출확대도 있었지만은 세수부족도 큰 원인이 있었으며 이는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회의 추경에 의해서 이미 세수추계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재경부가 내놓은 98년의 세입전망의 정확도 자체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재경부장관, 현재의 세수진도를 감안할 때 98년도의 세입은 전망치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98년도 세입전망을 근거로 만들어진 99년도 세입안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둘째, 세입전망에 이용된 각종 成長率 및 增加率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내년 경제성장률을 보면 1.8%의 불변성장률과 4.2%의 경상성장률 그리고 5%의 물가상승률예상을 바탕으로 세입안이 마련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상성장률은 대개 불변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을 합한 수치이며 GDP 디플레이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경상성장률은 불변성장률 1.8%와 물가상승률 5%의 합인 6.8% 정도가 되고 오차를 상하 2% 내외로 보더라도 정부예상치인 4.2%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주로 보여지는 不變成長率은 과도하게 잡혀 있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경상성장률은 낮게 잡으신 것이 아니십니까? 현행 재정부의 세수추계모형에서 경제성장률의 변화는 사실

세입변화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으로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때 재정부의 세수추계모형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입이 2,000억원, 특별회계 세입이 300억원 감소하여 총 국세가 2,300억원 정도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결국 경기부진의 한 가지 현상에 불과합니다. 즉 경기부진은 세수추계에 사용되는 모든 성장률이나 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과연 이런 점이 고려되어 있는지 본위원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수추계는 주로 그 세목의 과세추계나 다른 결정변수의 과거 추세로 설명됨으로써 경기부진이 세입예산안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자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원천분, 주세 등은 이들 세목의 세율이 되는 저축성예금증가율, 소득증가율, 주류출고율 등의 설명변수를 전망하여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변수들의 추정이 과거의 추세를 통해 구해지고 있고 또한 자산재평가세나 전화세, 교육세, 금융분과 보험분, 농특세 국세분 등은 이들 세목의 과거 증가율을 토대로 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財經部の 시각입니다.

물론 경제는 추세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97년말부터 시작되는 경제위기는 우리 나라 경제의 구조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경제변수들이 과거의 추세에서 이탈해서 전혀 새로운 추세를 형성한다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수정되지 않은 과거의 추세를 그대로 원용하여 세입전망을 하게 되면 세입추계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재경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부장관! 아직도 경제를 정확하게 예측할 모형이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視界에 의해 飛行하는 현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視界에 의해서 재경부장관이 여러 가지 이끄는 사항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걱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어떠한 計量模型도 완벽하지는 못하고 최종단계에서는 업무담당자의 직관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급격히 변화해서 바로 1년 전의 경제와 판이하게 다른 경제상황이 전개되는 마당

에서 구태의연한 推計方式을 고치지 않는 한 이것은 문제로 도출될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십니까? 다른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무리 조직슬림화가 필요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세입추계 부분만큼은 담당인원을 증원하고 가능하면 보직이동도 최소화하고 경제전문가등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과 참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稅收差跌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세와 부가세 수입부분의 세수추계는 수입액과 환율에 대한 전망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환율이 달러당 100원 하락한다면 관세는 4,150억원, 부가세 수입은 9,650억원이 감소하여 총 1조3,8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수입액을 정부예산액 1,151억불 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 관세 4,850억원, 부가세 수입분 1조2,530억원 등 총 1조7,38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은 99년이 시작되기도 전에 며칠 전부터 1,300원 밑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金利引下를 단행한다면 달러약세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수입액의 경우 금년 수입액은 930에서 94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되는 부분에서 99년에 1,151억달러에 도달하려면 20% 이상 증가해야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 경기부진으로 인해 유보된 수입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원유가등 原資材의 國際價格 下落勢, 일본 및 동남아시아의 景氣不振등을 감안하면 수입물량이 늘더라도 수입단가의 추가하락으로 수입액이 20%까지 증가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법개정에 따른 효과와 세입규모가 적은 대부분의 세목들은 정부안 대로 수용하고 예측이 까다로운 환율을 논외로 하더라도 낙관적인 경기전망과 수입의 과대예측에 의해 세수가 過大計上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예측보다 경제성장률이 1%, 수입액이 5% 정도가 하락한다면 대략 1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과거 추세치에 근거하여 산출된 세목들까지 합한다면 상당액의 세입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景氣活性化를 위한 재정적자규모 확대 용의는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실은 금년 우리 경제는 침체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IMF체제에 經濟主權이 상실되고 걱정을 하고 있고 우울한 가운데서 국민의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반기 5.3% 성장감소가 되어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반기 금융·외환시장 안정세나 소비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상태속에서 어떤 경제지표를 가져야 할 것인지도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은 외부 여건이 호조되어서 엔화강세라든지 先進國 金利引下라든지 油價引下로 인한 輸出增大가 우리의 바람이고 정부가 추구하는 상황으로 믿고 있습니다.

景氣浮揚의 정책기조 유지나 국민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감내 의지도 우리 경기부양의 최고의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 경상수지 400억달러 흑자예상되는 부분도 우리 정부의 바람이고 국민의 바람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外換危機는 넘겼느냐, 넘길 수 있느냐, 앞으로 향후 외환위기가 초래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외환위기는 우리 경기침체와 기업부도, 실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위기 가능성을 상존시키면서 우리의 걱정을 가중시키는 부분일 것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內需를 창출할 수 있는 財政支出을 늘려 GDP의 4.96%인 재정투자규모를 더욱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財政赤字規模를 GDP의 10% 수준으로 늘린다고 해도 아직까지 적자재정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향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재정지출 억제를 통해서 정부 부채를 줄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이하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대체하고 아니면 부별심의 때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鎮載 다음은 한나라당의 李應善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應善委員 한나라당의 李應善 委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또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로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特定事業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며칠 전에 정부에서는 법안 하나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름하여, 대단히 길군요, 政府出捐研究機關등의設立·運營및育成에 관한法律案을 지금 政務委員會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아시겠지만 각 부처별로 대개 한 두 개 출연연구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출연연구기관은 전부 합해서 38개가 되는데 이것을 몽땅 떼어서 국무총리 산하로 보내서 국무총리가 각 연구기관의 감독기능을 國務總理室로 一元화한다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각 연구소에서 쓰는 금년도 예산은 약 1조원이 되는 것 같고 인원은 연구원 약 1만명 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이동이지요.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출연연구기관이 총리실로 이관되면서 또 총리실 산하에는 5개 연구회, 그 연구회는 아시다시피 각 출연연구기관을 칠팔개로 직능별로 묶어서 이것을 관리하는 5개 연구회, 즉 經濟社會研究會, 産業技術研究會 등 연구회를 두어서, 법인으로 두어서 그 법인이 각 출연연구기관을 관리·감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총리실로 이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떼어서 이것을 총리실 산하에 갖다 놓겠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 각 부처의 간섭을 배제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견 대단히 타당한 이유이기도 하고 또 출연연구기관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이냐 또 이것이 잘 될 것이냐, 나라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出捐研究機關이 제일 처음에 생긴 것은 1966년도 KIST가 제일 처음에 시작된 곳입니다. 이 KIST의 설립은 60년대 초 존슨 미국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앞으로 한국이 발전하자면 頭腦集團을 어느 한 군데 형성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국의 나라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연구소를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연구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연구소의 특징은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법안의 주요골자같이 신축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연구소라야지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에서는 출연을 하되, 그 출연이라는 표현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서도 미국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랜트(gran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나라 말로 그랜트에 가장 적당한 말은 寄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기부를 해가지고 간섭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그런 정신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KIST를 한·미합작으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 나라의 소위 이야기하는 출연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KIST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研究活動을 시작하게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성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감사원에서 거기에 政府豫算이 나갔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하니깐 또 주무부처, 첫 번째 주무부처는 이것이 시간관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는데 경제기획원이 KIST의 주무부처였습니다. 왜 기획원에다가 KIST를 두었느냐, 모든 업무는 그 당시의 상공부에서 육성하는 업무와 가장 가까운데…… 기획원에 두었는데 그것은 지금 총리실로 이관하자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때문에 경제기획원 산하에 KIST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깐 또 주무부처의 감사실이 있으니깐 거기에서 또 감사를 한다 말이지요. 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깐 또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에서 行政指導를 한다고 또 KIST에 간다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정부의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하게 되었고 또 그 항의를 해도 말이 잘 안 되니까 대통령에게까지 이것을 항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朴正熙 大統領께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미국 사람들 이야기가 맞는 것이란 말이지요. 정부에서 간섭을 안 한다고 해놓고 왜 간섭을 하느냐 그래서 대통령 지시로 감사원 감사, 일체 감사를 하지 말아라 그 대신 '그 KIST내에는 정부가 임명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를 통해서 KIST 내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되는 행정부처에서는 참고를 하고 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라'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KIST에 대한 정부의 간섭 이런 것은 일체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반드시 그 결과뿐만은 아니지만 연구 분위기가 좋아지고 우리 나라의 썩크탱크로 이것

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KIST가 이렇게 出捐研究機關으로 또 頭腦集團으로 나라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또 거기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자기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많은 해외에 있는 우리 나라 지식인들, 과학자들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KIST에 몸을 담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이 KIST가 발단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잘 되니까 각 부처마다 또 研究所를 두게 되었습니다. KDI도 그 이후에 생기고 교육개발원연구원도 생기고 각 부처마다 연구소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랄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박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미국의 원조는 한국이 自立基盤이 튼튼해졌으니까 원조가 필요없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감사원이나 또 관계되는 부처에서 KIST에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의 간여가 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관련되는 모든 출연연구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에서는 그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관여가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출연연구기관에서는 이 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연구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또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각 부처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特別法을 하나 제정해 가지고 이번에 국회에 내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出捐研究機關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우리 나라에 많은 지식인들이, 외국에 나가 있던 지식인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구라과를 비롯한 많은 선·후진국의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미국사회에 학문의 자유나 또 연구분위기가 지식인들이 살기에, 지식인들이 자기의 생을 영위하기가 가장 편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두뇌유출, 브레인 드레인(ing)(brain draining)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한국과 이스라엘 몇 개 나라는 逆頭腦流出, 그러니까 리버스 브레인 드레인(ing)(reverse brain draining)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 두뇌들, 자국 지식인들을 자기나라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출연연구기관이 큰 몫을 했습니다. 혹자들

은 현재 미국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 이러한 위치까지 가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 세계의 知識人들이 미국에 모였다, 이 사람들이 미국 발전을 위해서 또 사회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큰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발전했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 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지식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에 주로 있고 그 다음에 연구소에 있을 것입니다. 이 지식인들이 이번에 대이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不實機關이 어디나 하면 국회에서도 여러 번 논란이 있었지만 銀行하고 大學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다루었다가는 이번에 지식인들의 집단인 研究所가 부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이러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몽땅 떼어다가 總理室에 갖다 놓겠다 하는데 이것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 모든 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해가지고 총리실로 가져가는데 이것을 반드시 總理室로 이관을 시켜야 하지만 이것이 보장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이 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데 또 간섭을 배제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두면서 대통령지시나 또는 총리지시로 넉넉히 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30여년 전에도 그렇게 대통령지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법에서도 신축성과 자율성이 보장한다고 그랬으면 신축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모든 大統領令이나 施行令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총리가 지시해서라도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 정부는 무엇에다가 씩니까?

그래서 이것을 總理室에 이관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자율성과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과거에 KIST를 제일 처음에 만들 때도 그러한 생각을 정부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지 않다고 그때 결론을 낸 것입니다. 결론을 낸 배경은 研究所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



한 것은 뭐냐, 연구소로 하여금 어떠한 연구를 시켜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연구를 연구소에다가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각부 장관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갖고 있는 각부 장관이 나는 내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 대해서 이러한 연구를 시키겠다 하면 그 사람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뚜렷한 연구목적 가지고 연구를 시켜야지만 그 研究成果를 이것을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사람이 각부 장관입니다. 여기에서 그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사람이 研究費를 주어 가지고 그 연구를 시켜야지 다른 데 있어 가지고는 이것 불편해서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총리실로 안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바로는 각 총리실 산하에 각 研究所를 별도로 두어 가지고 거기에 상근이사장이 연구소를 관리하겠다는, 屋上屋입니다. 제대로 협조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의 주인만 둘이 있게 되고 더 원활한 연구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는 줄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하는 것이 저의 1차적인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研究所의 주인이 둘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이것도 배제시켜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소를 몽땅 떼어다가 총리실에 다행히, 또는 불행히 가게 되면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정부의 간섭을 배제시키는 방법 또 주무부처에서 연구를 수행하게끔 예산을 줄 때 주무부처의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방법 또 연구소의 주인이 둘 있게 되는 이런 방법 등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있게 이것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이외에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 또 각 부처의 다른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部別審議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의 이야기는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鎮載 李應善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 李相洙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洙委員 새정치국민회의 李相洙 委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地方財政問題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가 배포해 드린 質疑文을 참고해 주시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國政監査를 통해 지방재정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98년6월 현재 부채총액은 18조5,545억원으로 99년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의 59%에 달하였습니다. 98년도 한 해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해도 1조5,496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負債負擔 이외에도 IMF관리체제로 인한 경제위기로 또 다른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출측면에서 실업자구제, 경제구조조정 비용 등 새로운 財政需要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세입측면에서는 부동산가격 폭락과 지역경제기반의 붕괴로 인해 당초예상보다 4조1,132억원의 세수가 격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정상황이 어려운데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外債를 동원해서라도 계획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며 경쟁적으로 장미빛 사업계획을 펼쳐 보였습니다. 과거 재벌들이 大馬不死의 신화를 만들고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펴던 모습을 다시 보는 듯했습니다.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재정통제가 없이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제2의 IMF위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였습니다.

지방재정이 이렇게 심각한 危機狀況에 처해 있는데도 중앙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너무 안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총리에게 묻습니다.

지방재정이 이처럼 惡化된 원인이 무엇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전망과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垂直的인 從屬關係를 넘어서서 水平的인 協力關係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기초로 지방재정의 打開策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그동안 중앙집권적이며 권위주의적인 官僚體制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말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하면서도 가슴으로는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수직적 종속관계의 틀속에서 이해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도 중앙재정의 한 부분내지 從屬變數로 생각할 뿐

그 자주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財源은 중앙정부의 주어진 고유한 몫인데 중앙정부가 이 중 일부를 지방정부에 나누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財源配分問題도 지방정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재정력의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지 못하고 지방이 더 가져가면 중앙의 몫이 줄어든다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의 틀속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도 아니고 대립적 관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긴밀하게 연계된 협력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수평적 협력관계에서 바라 보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존중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地方自治權 특히 地方財政權을 과감하게 신장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중앙정부의 권한을 언제 어떻게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國家的 統合성의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통제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통합성과 지방의 독립성은 우리가 조화시켜야 할 불변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조화로운 추진은 지방정부의 自主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 통합성을 위해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를 하더라도 그 통제는 事前的·權力的 統制에서 事後的·非權力的 統制로 중심이 옮겨가야 하며, 직접통제보다는 간접통제의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의 해결책은 지방재정의 健全성과 自律성을 제고하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재정의 확충이 요구되는 바 地方交付稅率부터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율은 內國稅의 13.27%인데 지방자치 실시 이전인 83년부터 변하지 않은 채 고정되어 있어 지방자치 실시 이후 확대된 지방재정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정감사시 99년에 지방교부세율을 15%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우선 99년에 지방교부세율을 15%로 인

상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 재원은 追更豫算 편성시 계상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 일각에서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配分現況을 다른 선진국과 단순비교하여 교부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단기적 재정수요 증가분만 해도 연평균 1조9,855억원에 이릅니다. 이 추가적 재정수요를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원할 경우 法定交付率을 17.57%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은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면서 地方財政力을 향상시키는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稅制의 改編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金鎮載委員長, 趙洪奎幹事와 사회교대)

國庫補助金制度의 改善과 관련하여 재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지나치게 영세하고 事業用途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불편은 물론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包括補助金制度의 도입이 검토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基準補助率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差等補助率制度가 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데도 실제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96년 舊 內務部가 差等補助率制度를 시행하려고 했다가 재경부의 반대로 시행을 유보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현재의 地方財政의 不均等を 고려할 때 差等補助率制度를 단기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IMF 이후 지방세입의 감소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장기 계속사업의 경우 地方政府 負擔分의 미집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繼續地方事業이 차질없이 수행되기 위해 年度別 매칭펀드 지원방식을 事業別 매칭펀드 지

원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地方稅制의 改編과 관련하여 재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國稅 및 地方稅의 조정 및 신설을 통한 자원배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재경부에서는 所得稅, 法人稅, 農地稅에 부가되는 소득할 住民稅를 國稅에 통합한 후 10%를 地方自治團體에 귀속시키는 地方所得稅를 신설할 계획이나 法人稅割 住民稅分은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부분을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밝혀주시시오.

法人稅割 住民稅의 28.7%를 서울시가 징수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세수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새로운 稅源을 마련해주지는 못할망정 왜 주어진 稅源을 가져가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國稅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분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地方消費稅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인데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有形·無形의 公共財를 이용하며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應益原則에 따라 이를 지방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地方消費稅를 도입할 경우 消費關聯稅의 비중이 강화되어 지방재정의 安定性 確保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地方稅制에 走行稅를 도입 자동차 보유관리 수단인 自動車稅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체 개편 등에 따른 세수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取得稅 登錄稅의 대폭 감소로 지방정부의 세수보전을 위한 地方走行稅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稅인 電話稅는 세수가 안정적이고 세원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地方稅로 이양하기에 적합한 稅目입니다.

현재 전액 地方讓與金 財源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지방재정

의 자립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므로 地方稅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재정의 확충 못지 않게 지방재정의 不均衡 解消도 긴요한 과제입니다.

서울시와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市稅인 담배消費稅와 區稅인 綜合土地稅를 교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답변은 행자부장관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한 지방재정 확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은 지출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地方財政 管理方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이는등 公共部門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방만한 地方事業의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화,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찾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정부는 재정의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大型事業을 벌이고 있습니다. 벤처산업이 각광을 받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모두가 대규모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만일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한국은 테크노파크의 共和國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방재정 관리체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운영은 전무하거나 지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운영만 보더라도 이 점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地方財政 分析·診斷制度는 94년 法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다가 98년3월에 가서야 그 실용화 방안에 대한 研究用役이 KDI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98년10월에야 地方自治團體에 실시규정이 시달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제도가 그 동안 시행되지 못한 채 死藏된 이유가 무엇인지 행자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각종 地方財政 管理制度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 구체적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적 統合性과 지방의 獨立性의 조화는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할 불변의 과제입니다. 이 두 가

치의 조화는 지방정부의 自主性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趙洪奎 李相洙 委員 잘 하셨습니다.

이어서 金浩一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一委員 한나라당소속 馬山 合浦出身 金浩一 委員입니다.

저는 豫決委員을 여러 차례 역임한 일이 있습니다. 마는 누가 예산결산 심사과정을 통해 느낀 점을 한 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과연 자신의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自愧感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바로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한푼한푼이 하늘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돈이라면 좀 낭비하고 쓸데없는 데 쓰더라도 크게 나무람을 당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라 돈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낭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덩이처럼 투자비가 늘어나도 얼마를 더 들여야 완공될지 모르는 京釜高速鐵道, 황폐화되어 농민이 밭더미만 떠안게 된 農業投資, 수십억 수백억 들고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廢水處理施設, 막대한 돈을 들고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始華湖 投資, 그리고 외국의 武器商에게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를 구입하고도 변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 등 일일이 들자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위원 그리고 각급 공직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만일 내 돈이었다면 京釜高速鐵道事業이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만일 내 돈이라면 완공하고도 가동하지 않는 시설이나 허울만 번지르르하고 빛만 쌓여가는 유리온실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였겠습니까?

만일 내 돈이었다면 발주후 공사진행과정에서 여러 차례 設計變更을 해서 사업비를 두세 배씩 늘려 주었겠습니까? 만일 내 돈으로 하는 사업이었다면 이렇게 妥當性 調査를 제대로 하지 않고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벌였겠습니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타당성 조사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불가결한 先行節次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돈이었다면 따지고 또 따지고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으려고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먼저 企劃豫算委員長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妥當性 調査조차 이렇게 소홀히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충대충 사업을 추진해도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본위원은 이 나라의 모든 公職者들의 國家豫算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따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귀중한 血稅를 제대로 잘 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여기에서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豫算價値 極大化事業을 소개하며 우리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국사람들은 money for value라고 하는데 저는 이를 예산가치 극대화라고 번역해 보았습니다. 英國의 會計監査院은 국가예산이 얼마나 가치있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합니다.

첫째, 최대한 절약한 것인가, 더 이상 절약할 데는 없는가? 그들은 이를 economy 즉 節約目標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spending less, 낮은 지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둘째, 들어가는 비용보다 거기에서 나오는 편익이 더 크게 되어 있는가? 즉 efficiency, 效率目標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spending well, 효율적인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돈을 쓰고 냈을 때 그 목적은 성과를 거두었는가? 즉 effectiveness, 效能目標입니다. 만일 농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으나 오히려 농민의 부채만 늘어나게 했다면 그 돈은 낭비된 것입니다.

英國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pending wisely, 현명한 지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예산을 자기 자신의 돈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기준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고 오히려 다소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豫算編成과 執行狀況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과연 몇 점이나 맞을 수 있을까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정 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 돈을 쓰는 자세가 이렇게 한심하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企劃豫算委員長!

본위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위원이 소개한 英國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의 예산운용은 몇 점이나 맞을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도 豫算價値를 극대화하는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예산위원장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科學技術部長官께 묻겠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政府 出捐研究機關과 기업의 연구소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 과학기술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大德研究團地에서는 금년들어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만 고급두뇌 450명이 연구단지를 떠났고 이미 떠난 사람 숫자가 민간연구소 研究員까지 합하면 1,000여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문을 닫거나 조직을 축소한 기업연구소만 올들어 52개나 달한다니 실로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보다 앞선 기술인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수요침체로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앞선 기술로 값싼 제품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수출을 늘릴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과학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科學技術 投資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는 逆說이 정설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본위원은 지금의 경제현실에서 연구개발 의욕마저도 사라져 버린다면 재도약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高級頭腦들이 안심하고 하던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것이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研究開發 投資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科學技術部長官은 어떠한 견해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99년 예산안에 의하면 道路豫算이 6조1,041억원으로 사회 간접자본투자의 50.5%나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17.1%의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중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鐵道는 사회간접자본투자의 10.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 나라의 경우 도로확장만으로는 폭증하는 交通需要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대기오염 등 環境問題에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작금의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공해 물질을 많이 유발하는 자동차보다는 環境親和的인 鐵道에 의한 교통수요 해결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교통정책을 보면 彌縫策에 급급하여 국가 전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교통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접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우리 나라 교통은 鐵道網에 입각한 基幹路線과 도로에 의한 接近性을 높이는 이른바 멀티 모델 시스템, 다자간 모델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鐵道投資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釜山交通公團의 移管方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의 釜山交通公團은 88년 발족 당시 국내 최대의 항만 물류도시인 釜山이 지하철 건설로 인해 막대한 財政負擔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釜山市의 財政難을 덜어주고자 지하철 負債를 국가가 인수하고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부산의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국가가 담당한다는 政策的 措置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釜山交通公團 부채의 3분의 1에 달하는 부채와 함께 공단을 釜山市로 넘기려고 하는 釜山交通公團法廢止法律案이 정부주관으로 입법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IMF사태 이후 높은 실업률과 부도율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IMF사태 이후 30% 이상의 세수격감으로 범국가적 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 관련시설 항만 배후도로 건설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충당할 可用財源 마련도 어려운 현 시점에서 公團이 부산시로 移管된다면 부산시의 재정과탄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므로 釜山地下鐵 建設을 희생시켜 타도시와의 형평을 맞추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交通改善問題는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서 국내 최대의 수출항이라는 타지역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港灣 物動量 처리를 위해 항만 배후도로 건설 등 釜山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부담도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부산시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할 때 특별법으로 제정한 釜山交通公團法의 입법취지를 살려 부산교통공단을 당초 법정시한인 2007년까지 국가공단으로 존속시키든지 負債 全額을 국가에서

인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97년말 國民醫療保險法을 제정하여 227개 지역조합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금년 10월부터 國民醫療保險管理公團을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난 2월 제1기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직장조합 지역조합 및 공무원의료보험을 모두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시대 社會安全網 構築 차원에서 내실있는 의료보험을 위해서는 의료보험 재정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합 규모를 대형화하여 가입자들의 부담의 衡平性を 제고하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가입자간 所得 種類와 形態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가 가능한 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自營者 所得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현실에서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도시자영자 농민간 保險料 負擔상의 不公平 問題가 야기될 것이며 특히 의료보험 통합시 근로자와 자영자에게 통일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所得把握率의 차이가 보험료 부담을 좌우하게 되어 근로소득자 성실신고자 및 상대적으로 소득노출률이 높은 농어민 등이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금년 10월부터 통합한 地域醫療保險의 경우에 있어 지역주민들 간의 소득형태가 유사한 집단인데도 보험료 부담사의 불공평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더군다나 보험가입자간에 소득종류와 형태가 다른 직장조합, 지역조합 및 公務員醫療保險을 일률적으로 통합할 경우 그 문제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형태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 부과기준개발은 의료보험 통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福祉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가 금년 追更豫算에 1,000억원의 실직자자녀 학비지원 자금을 반영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빠진 다수의 학생들을 구제할 것은 매우 時宜適切한 조치로 평가되며 일선학교 및 학부모들의 반응도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4분기 실업률이 7%에 이르고 실업자수도 150만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일시적인 失職者는 당분간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失職 家長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물론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앞날에 대한 희망마저도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본위원회는 올해 수 조원이 투입된 여러 가지의 失業對策중 실직자자녀에 대한 학비지원만큼 실직자들과 그 가정에 피부에 와 닿는 실제적 도움이 된 실업대책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失職者子女 학비지원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다수의 실직자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거리를 배회하거나 어두운 길로 빠져들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이는 크나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직자자녀 학비지원 사업이 國家豫算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학비감면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본위원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도 교육청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실직자자녀의 학비감면을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失職者子女 등 학비조달이 어려운 중·고교생이 약 25만여명에 이르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학비지원은 당분간이나마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실직자자녀 학비지원 자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經濟狀況이 더욱 나빠져 학비지원 소요가 더욱 크게 늘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재경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답변에서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올해 集中豪雨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로 농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노후화 된 배수장시설과 배수능력 부족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排水改善事業을 위한 정부의 99년도 예산은 올해보다도 오히려 16% 삭감된 1,375억원만 배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침수피해를 겪었고 내년에도 엘니뇨, 라니냐 등 기상이변이 계속될 것으로 기상 관계자들은 예견하고 있어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豫算削減은 향후 농경지 침수 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회성이고 소모적인 豫算編成보다는 앞으로의 농경지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배수개선사업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관련예산이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오히려 排水改善事業을 축소할 이유는 무엇인지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95년 도·농통합으로 인해 도시로 편입된 농촌지역이 사실상의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도시로 되어 있어 농촌지역보다 각종 지원사업의 優先順位에서 밀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書面으로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趙洪奎 金浩一 委員 잘 하셨습니다.

○李信範委員 위원장, 간단한 자료관련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委員長代理 趙洪奎 자료요구입니까?

○李信範委員 예.

본위원이 아까 재경부장관께 재경부예산중 204 業務推進費를 총액을 요구했는데 安企部法 제12조 3항에 의하면 安企部の 秘密活動經費는 다른 부처 예산에 總額計上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안기부 정보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명목으로 204 業務推進費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기부가 통제하는 예산입니다. 또 안기부의 秘密活動經費는 203 特殊活動費라는 명목으로 部處豫算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경부장관께서는 204 업무추진비에 더해서 203 특수활동비의 총액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洪奎 다음부터 자료는 審議官이나 調査官한테 서면으로 제출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盧武鉉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새정치국민회의의 盧武鉉 委員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장관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회 豫算決算委員會를 운영하면서 참 장관님들이 딱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總括質疑할 부분 질의하고 각 부처에 해당되는 부분은 따로 떼어서 部別로 質疑하면 전원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긴 시간 지금 3일째, 결산 포함하면 5일째 이렇게 고생을 안 하셔도 될텐데 國會運營을 하던 대로 하는 바람에 너무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안쓰러운 생각이 들고 총괄질의를 하다보니까 아무리 깊이 연구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서 공부한다 해도 역시 중복이 부득이한 것 같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자꾸 나오고 그래서 운영이 좀 더 효율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豫算決算委員會가 常設化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거듭 가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료를 쌓아놓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사무실로 들고가려니까 혹시 불 일이 있을까 싶어 쌓아두고 있는데 部別審議할 때에도 자료를 거의 못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처럼 쌓아놓고 발언하러 나오려니까 자료에 갇혀서 의자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참 비능률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電算資料로 해서 제출하고 그것을 활용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컴퓨터를 들고 와야 되는 불편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무실에 두고 그날그날 질의할 때 部別로 필요한 자료들만 골라가지고 자료를 가져와서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입장에서는 자료를 電算化해 놓으면 질의하고 싶은 위원들이 여러 각도로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해놓으면 골이 아픈 그런 면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골이 좀 아파도 국회의원이 여러 각도로 자료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것이 국회책임이다 정부의 책임이다 이것 하기 전에 꼭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13대때 질의를 제

법 잘 한다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豫決에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수준이 하도 높아서 이해하기도 바쁘고 따라가기가 참 힘들다 할만큼 위원님들이 충실한 질의를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긴장되고 한편으로는 國會議員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문제를 구석 구석 잘 지적하시고 새로운 대안도 참 많이 내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 연구하고 발언하시는데 대해서 거듭거듭 존경심이 솟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감이 좀 있는데 91년도 제가 豫決委 할 때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똑같이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가 개선을 참 게을리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국회도 스스로 입법하면 될 것인데 예결위 때마다 질의만 해놓고 그 뒤에 制度改善을 국회도 소홀히 한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예결위에서 다루어졌던 많은 문제가 國會制度改革委員會에 인계가 되어서, 여기서 다루었던 문제가 그냥 예결위 끝나면 끝나버리지 말고 제도연구를 깊이 계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국회 쪽에 대한 바람이라면 국회가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좀 부족한 편이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제도개혁을 열심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유감으로는 發言內容이 예산이나 또는 예산편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정책에 관련된 것 말고 단순 政治攻勢를 위한 공세같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발언같은 것이 제한을 많이 받고 그런 시기에 야당이 많이 써왔던 관행이기는 한데 이제 국회도 달라지고 '세상도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예결위도 질의가 豫算을 중심으로 해서, 꼭 政策을 중심으로 해서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달라졌으면 싶은데 안 달라지면 국회가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國策事業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증언부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도 기가 차서 한 가지 수치만 제시해 보겠습니다.

90년 이후 사업이 시행된 100억원 이상의 施設工事事業費 變更內譯을 한 번 내봐주시시오 했더니 18개 부처에서 제출하셨는데 그 중에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거나 한참 진행중인 것들을 따로 모아서 해보니까 대체로 당초 예산이 44조2,551억원이던 것이 변경 후에 76조2,700억원으로 32조가 증가했습니다. 108개 사업을 추출한 것인데……

증가율을 따지면 평균 72% 정도가 됩니다.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200%도 넘고 100% 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전철같은 경우는 215%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의 부실같은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妥當性 調査는 각 부처에서만 하고 있는데 94년도부터 98년까지 44건의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진행중인 것 11건을 제외하고 나면 타당성 없다 이렇게 보고 나온 것은 11건밖에 없으니까 어쩐지 자꾸 의심이 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결과를 놓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效率性 評價를 하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반영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중요한 정책분야에만 하고 구체적인 國策事業에 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수립과 타당성 조사, 그리고 사후평가, 성과주의에 근거한 어떤 평가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부 내부에서 단일 부서에만 몽땅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 내부의 상호견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綜合的인 調整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틀림없이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중복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계획같은 것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기금문제는 여러번 지적되었기 때문에 基金, 特別會計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地方財政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李相洙 委員님께서 지방재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려 보겠습니다.

廣域自治團體의 負債總額이 자꾸 증가해 갑니다. 95년에 13% 정도, 96년에는 11% 증가하더니 97년에는 16% 이상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증가율도 문제지만 高金利負債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10% 이상의 고금리부채가 96년 7.3% 정도이더니 98년에는 1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상환기간이 장기인 부채가 점점 줄어듭니다. 16년 이상의 長期負債가 94년에는 16.31%이더니 98년에는 10%까지로 떨어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단기부채가 많아지고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니다. 특히 단기부채가 대구, 부산이 아주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불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地方自治團體가 負債가 많아서 흔히 말하는 不渡같은 사태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한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가 인수하는 것인지 옆동네에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계속 빌려주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 제도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地方自治團體 負債比率이 광역자치단체로 따지면 예산총액 73조중에서 약 32.9%가 되는 24조를 넘고 있습니다. 이 부채비율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지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채가 많은 것이 위험하다면 地方債라든지 지방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지금은 行政自治部長官의 承認까지를 받게 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라는 전체 재정의 규모와 맞물려서 경제정책이라든지 재정의 건전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될 텐데 地方의 債務負擔行爲를 통제하는 부처가 행정자치부만으로는 불안하지 않느냐, 경제부처 예산담당부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地方基金이 참 많습니다. 96년까지 1,149개에 4조4,000억 정도 되더니 97년에는 1,411개에 5조8,000억으로 갯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자꾸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중에서 地方自治法을 위반하는 條例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치기관에 관한 문제라든지 기금운용계획의 확정이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만들어 놓은 條例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중앙정부에서도 豫算不用額이 발생하는 합니까라는 중앙정부 예산은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예산대비 한 3.3% 정도 불용이 발생하는데 地方財政의 不用額은 10.15%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얼른 보면 불용액 7조8,000억이 은행에서 잠자는 한편 地方自治團體는 부채가 많아가지고 1조5,000억의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이런 것은 혹시 財政損失과 연결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등등 포함해서 地方自治團體 不用額이 많은 점에 관해서는 혹시 어떤 대책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라는 어떻든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를 포함해서 기금의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분류에 있어서 違法性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었는데 基金까지를 포함한 통합재정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까지 포함한 統合財政運用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地方財政을 통합한 종합적인 운용이 없으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재정을 포함한 통합재정구조가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올해 혹시 무슨 法案이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이 증대되고 점차 사무가 지방으로 위임되면서 행정업무가 증가되면 행정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재정의 세입구조가 옛날하고 아주 똑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은 李相洙 委員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따로 質疑 안 하겠습니다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趙洪奎幹事, 金鎮載委員長과 사회교대)

대체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처 장관님들께 물어도 좋을 일인 것 같습니다만 이걸 전체 제가 묻는 것은, 잘못 됐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기 때문에 우리 企劃豫算委員長님께서 답변을 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변 시간이 너무 늦어지거나 할 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鎮載 다음은 한나라당의 鄭亨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亨根委員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갑 鄭亨根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서론은 빼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정부 5년 내내 현안문제로 시비에 걸릴 제2건국위원회에 대해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동안 역대 정부가 정권 초기에 政權安保를 위해서 각종 관계 관변단체를 만들어 온 것은 사실이고 또 비판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제2건국위원회는 이것들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에 민주평통이나 사회정화위원회는 비록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평화통일이나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뚜렷한 단일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2건국위원회는 정부 위의 정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

을 가집니다. 즉 입법 행정 사법 모든 행정조직 위에 군림하는 괴상한 괴물 단체가 바로 제2건국위원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에는 국무위원과 장·차관을 추진위원과 상임위원 기획단에 포함시키고 지방에는 민선 단체장을 총괄자로, 부단체장을 책임자로 하고 심지어는 시·도의회 의장을 고문으로, 부의장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고 교육공무원과 경찰공무원까지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관제니까 관선 단체장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민선 단체장 민선 시·도의원 무슨 상임위원장까지 포함시킨다는 발상은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즉 국정의 모든 것을 여당 주도하에 통합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제2건국위원회라고 규정합니다. 중앙 본회의의 위원 427명을 제외하더라도 시·도 추진위원회 1,600명, 시·군·구 추진위원회 1만2,000명, 1만3,600명 외에 시중에서 전부 지금 홍위병이라고 하는 무슨 홍보위원 1만명까지 포함시키면 2만3,600명의 정권 친위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산만 하더라도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행자부 예비비로 38억2,3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다가 또 홍보위원 예산 600억원을, 그 밖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무슨 지원명목 20억원, 무슨 관변단체 지원 150억원, 이렇게 책정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예비비로 얼마나 예산을 숨겨놓았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새마을운동 등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국민운동 거기 일꾼들 전부 다 빼 가고 다 흘뜨려놓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란 해괴한 신관변단체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관 주도로 제2건국운동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건전한 시민단체나 누구나 참여를 하지 않으려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맹렬히 성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신 시절이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이런 독재적 발상은 없었습니다.

이는 一黨主義 國家에서나 있을 법한 발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확고한 견해를 묻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가겠는데 공무원의 인사 복무를 총괄하는 行自部長官이 제2건국추진위의 企劃團長으로,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 정부수석이 부단체장으로 참여하는 등 官制國民運動이 분명한데도 국민의 뜻은 물어보지 않은 채 국민운동이라는 이름까지 붙여 가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려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단위까지 전국적 조직으로 확대하려는

것과 관련, 이것이 장기집권에 목적을 둔 전국 규모의 新黨創黨 조직작업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고 또 행자부장관이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제2건국추진지침의 중요추진사항을 보면 시·도 및 시·군·구별로 부단체장을 책임자로 하여 전담부서 지정, 인력확충 등 總力推進體制構築이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제2건국위원회는 분명히 관이 주도하고 친여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長期執權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우리는 모두 가지게 됩니다.

총리는 차제에 제2건국의 개념을 명확히 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제2건국이라는 용어를 고집한다면 제2건국은 무엇인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2건국운동을 기획하는 인물이 지금 한창 이념시비를 벌이고 있는 崔章集 정책기획위원장이라면 이 운동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의구심과 의심이 더욱 증폭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조직화는 2000년 16대 총선을 겨냥한 여당의 전국창당의 정치작업이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제2건국의 推進體系를 볼 때 본회의 427명과 상임위원회 58명, 기획단 28명 등은 또 모르더라도 대통령 아래에 차관이 총괄책임관이고 기획관리실장이 반장인 中央部處推進班을 두고 그 아래에 부지사 와 행정부시장이 총괄, 행정관리국장이 반장이 되는 市·道推進班 그 아래에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총괄, 소관실국장이 반장이 되는 市·郡·區推進班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조직을 여당 하부조직화함으로써 관을 여당의 정책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며 나아가 차기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자부장관은 지난 23일 中央은 大統領諮問機構이나 地方組織은 대통령자문기관과 별개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위 지방자치단체 第2建國推進指針이라는 문건을 행자부에서 작성하여 내려보냈으며 내려보낸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장관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 온다는 것이 안 가져 왔는데 행자부에서 만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제2건국추진지침이라는 문건을 우리 당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강력한 관 주도의 推進機構라는 것이 명확함

니다.

이 문건이 지방자치단체제2건국추진지침인데 행정자치부에서 10월26일자로 만들어서 각 시도에 시달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의 當然職 委員은 행정부시장, 구청장, 군수 및 시의회 부의장, 부교육감 등이며 顧問에는 시의회 의장, 교육감, 대학총장을 두게 하고 常任委員會 幹事는 자치행정과장이 맡도록 하고 있고 常任委員은 시장이 지명토록 하고 있으며 또 제2건국업무를 전담할 推進班을 행정관리국장소속하에 설치하고 있고 5·6·7級 公務員을 사무에 종사토록 하고 있고 추진반에서 제2건국업무총괄지휘 및 위원회활동을 지원케 하고 있습니다.

區·郡 推進體系를 보면 심지어 당연직위원은 구·군의회 부의장·상임위원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구청 학무과장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고문은 구·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구청장 등이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망라한 公務員政治組織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운동인지 관제친위조직운동인지 행정자치부장관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추진위원회의 條例制定을 둘러싸고 嶺南쪽에서는 반대하고 湖南쪽에서는 참여자가 많아서 골치이고 이래서 잡음이 끊이지 않아 동서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동서화합을 한다고 돈도 내고 하는데 오히려 행정자치부장관은 東西의 葛藤을 조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정부의 기구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갖다가 조례로 만드는데 이것은 명백한 不法行爲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행자부장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자부는 崔章集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大統領政策諮問企劃委員會에 16억1,600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고 또 지금 행자부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자문기구이기 때문에 靑瓦臺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명확한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관주도의 국민운동추진의 책임을 물어서 헌법 제63조와 65조의 규정에 의거 行政自治部長官에 대한 解任建議案을 제출할 것을 오늘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련해서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민

회의의 참으로 해괴한 발상입니다.

전국 지구당조직을 가동해서 일선 행정기관의 개혁추진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공무원도 상시 감독한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것이 언론사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 중심의 社會主義國家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발상인데 민주국가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행정을 총괄하는 총리께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러한 위헌적인 작태인 국민회의의 이같은 경악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金剛山觀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829명, 2차 653명, 3차 361명 등 갈수록 관광객이 줄자 정부는 장·차관 인사들의 금강산관광을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관광객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직원들을 강제동원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長·次官級 人事觀光推進은 우리 정부의 위상실추는 물론 자칫 우리 정부를 회화화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통일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의 금강산관광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통일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은 금강산관광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북한의 향후 6년간 들어갈 돈은 현대측에서 제공하기로 한 9억4,200만달러와 1인당 300달러씩의 입산료로 연간 2억달러, 모두 21억달러이고 우리 돈으로 2조7,600억, 北韓과 우리의 經濟力의 차이를 20대 1로 보면 약 57조 정도가 북한에 들어 가서 북한을 강성국가로 만듭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우리 정보당국이나 통일원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13kg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습니다. 核技術이 발달하면 약 3kg에서 5kg으로 핵무기 하나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면 12내지 13kg으로 핵무기를 하나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 1개 내지 2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에 핵무기 미사일 기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당국도 현대에서 주는 이 돈으로 바로 러시아 핵기술학자들을 아주 적은 돈으로 불러가지고 아주 고단계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대해서 굉장히 당혹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현대가 이면계약한 9억4,200만 달러를 앞으로 허가할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만약에 허가하거나..... 이미 300달러씩 돈이

스위스 구조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돈이 러시아의 핵기술과학자를 불러서 핵이라든지 미사일개발하는 데 쓰여질 수 없도록 장치를 해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에서 대단히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련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21개 땅굴을 파놓았는데 우리가 4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개를 더 발굴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는지, 없다면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관련예산은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 核疑惑에 대해서 현장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94년 제네바협정이 파기되고 그렇다면 다시 북한과의 戰爭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을 갖고 있고 또 미국이 간접적으로 그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核危機가 닥치고 戰爭狀況이 발생했을 때 초전에 우리의 민간피해, 아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이고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방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은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또 지상에서 박격포, 야포, 방사포, FROG-5/7, 스커드 등 많은 화력지원력으로 폭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와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釜山經濟의 실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釜山經濟는 최악들의 집합소라고 하고 있고 IMF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업률도 작년말보다 2.6배 증가해서 전국의 최고로 16만6,000명, 실제는 20만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부양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99년 예산안 중 SOC사업예산이 올해에 비해 다소 증액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형신규 SOC사업이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충남 중부권 광역상수도, 광양 공업용수도, 아산 공업용수도, 전주공항 등 대부분 집권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라선개량에 1,000억원, 송정리-목포 복선화사업에 900억원, 충북선전철화 200억원 등과는 달리 부산-울산 복선전철화사업이나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은 내년예산에 아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SOC사업이 지역적으로 편중된 심각한 현

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측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산은 제2도시로 800만 정도가 부산권역에 있는데 마산에서 부산으로 들어가려면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에 대해서도 시급한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이나 부산-울산 복선전철화건설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부산광역시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건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新港灣에 대해서는 96년에도 질의했고 작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광양과 부산을 양쪽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질이 오고 부산에서는 부산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광양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정치논리가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서는 兩港體制가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낙동강수질개선대책문제라든지 예산재정 전반에 걸쳐서 준비한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鎮載 鄭亨根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잠시 停會하였다가 오후 2시에 續開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鎮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연합의 李在善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善委員 자유민주연합소속 李在善 委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年度 豫算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財政改革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統合財政 基準으로 중앙정부에서만 연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국가적 위

기상향을 벗어나기 위한 財政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지금 재정 운용방식과 예산 회계제도에 대한 개혁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러 위원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복되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운용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방식의 세분화를 억제하고 특히 總括 經常費制度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통합 예산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基金制度를 전면 개편하여 유사 기금을 통폐합하고 모든 기금을 公共 基金으로 전환해야 하며 날로 비중이 커지는 地方 財政 부분 또한 統合財政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재정운용의 시계확장을 통해서 대형사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 하는 중기재정계획 또한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재정지출 구조 측면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外資 導入을 확대하거나 SOC 채권발행을 활성화하는 등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장기 대형사업의 예산 지출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편익비용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평가지침을 시급히 마련하는 동시에 國庫債務負擔行爲를 활성화하여 집중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企劃豫算委員長께 묻겠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 基金制度의 改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기금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방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기타 基金의 公共基金화와 일반회계의 전출 비율이 높은 공공기금을 일반회계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 또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國民年金基金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께 물어야 되겠지만 年金運用의 실질적인 권한은 財經部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財經部長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후 財政의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바로 國民年金입니다. 국민연금은 2030년경부터 엄청난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연금문제의 해결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97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總負債는 148만1,020원뿐이며 연금보험료 20조5,855억 원은 자본금으로 기록되어 있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상태가 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

나 연금을 포함한 보험사업은 속성상 보험계약 초기에는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고 일정기간 이외에는 반대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부분을 미래의 초과지출에 대비하여 積立해 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립금을 責任準備金이라 하며 민간 부문의 보험회사들은 이를 재무제표에 負債로 기록하여 현재의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하고 미래의 지출에 대비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기금은 수령한 보험료를 전액 자본금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미래의 지출예상액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미래에 궁극적으로 재정이 부담해야 할 규모,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수령 가능성,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연금요율, 현재의 연금제도의 유지 가능성 등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연금운용의 불확실성이 높아 국민들의 年金基金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연금기금이 현재 책임을 져야 할 年金保險料를 부채로 計上하여 기금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고 미래의 연금수입과 지출규모에 대해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財經部 간섭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98년도 7월말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株式에 투자한 금액은 1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의 시세로 환산하면 약 6,310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이러한 株式價 下落으로 인한 손실액이 최소한 4,00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88년부터 97년말까지 公共部門에 투자한 금액은 총 21조 1,93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를 금융부문으로 운용했다면 수익률의 차이로 인해서 8,700억원의 이득을 국민연금측에서 더 보았을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누구의 돈입니까? 이것은 바로 국민이 정부에 맡긴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投資損失로 인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묻고 싶습니다.

현행 國民年金法에 의하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그리고 또 기금운용의 3단계인 기금운용계획의 협의단계에서 재정경제부가 기금운용계획을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실질적인 결정은 재정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경부의 압력에 의해서 현재까지 基金運用計劃이 작성되었고 이 때문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면 이러한 기금의 損失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재경부장관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大都市 廣域道路 豫算支援과 관련하여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화되어서 교통·환경문제의 효율적인 대처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문제의 경우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통근권역이 급속히 광역화되고 있음에도 교통계획과 대책, 교통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통분야 투자가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97년4월 大都市圈 廣域交通管理에 관한 特別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동법의 적용범위를 수도권에 제한시켜서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대명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시급성과 국가재정여건을 이유로 지방 대도시권을 동법의 적용지역에서 배제했다고 하나 사실 수도권은 그간 여타지역에 비해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10년 동안 자동차 증가추세는 오히려 지방이 더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 대도시권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간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고 지방 대도시권의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방대도시권으로 廣域交通特別法의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부양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金融構造調整이 하루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경부장관께서는 부실채권규모의 산정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算定根據와 內譯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구조조정비용이 상승할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研究中心大學 育成事業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교육예산 중 특기할 만한 것이 바로 신규사업으로 2,000억원이 계상된 연구중심대학 육성관련 사업입니다.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 사업이 어떠한 기준 아래 예산이 배정될 것이며 또 예산을 배정한 이후에 事後管理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失業問題와 관련하여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별히 대졸취업자들을 중심으로 사회 초년생들의 新規就業 問題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이면 전국 150개 대학에서 약 18만명이 졸업을 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기존의 미취업 대졸자 25만명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년에는 정부발표로만 43만명이 취업전쟁에 나서야 하는데 금년 하반기 중 30대 주요 그룹 60여개 社와 공기업, 금융업체 전체의 채용규모는 1,100명에 불과하고 내년에는 얼마나 新規로 채용할 것인지 분명한 계획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를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5년내에 대졸실업자만 100만명이나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취업대책도 없이 대학만 설립하고 고등실업자를 양산하는 것이 현재의 대학교육이라면 차라리 大學教育政策 자체를 재검토하여 實業教育 위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턴사원 訓練 活性化對策에 9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부 및 재계는 대졸실업자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턴사원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과연 인턴사원제가 실업대책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턴사원제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인턴사원 採用規模 자체가 대졸자들을 소화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사실상 고급인력을 싼값에 흡수하는 노동력 착취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인턴사원을 채용한 기업에서는 인턴사원들을 전

공과는 무관한 업무에 흡사시키고 있어 專門性을 잃게 하는데다가 과중한 업무로 다른 구직활동조차 봉쇄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인턴사원제에 대해서 실제로 의도한 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히 점검하여 한편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인턴사원제와 같이 실질적인 고용창출과는 관계없는 미봉책에 매달려 9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대졸자의 취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地方銀行의 退出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위원장께 물겠습니다.

충청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등 주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담당하던 지방은행의 퇴출로 지방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50개 내지 100개 가까운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엇그저께 金映宣 委員께서도 중소기업 문제를 많이 짚고 넘어가셨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다시 짚습니다.

퇴출은행을 포함해서 16개 시중은행 및 26개 일반은행의 대출금 중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년도 말에는 시중은행 50.6%, 일반은행 54.8%이던 것이 98년도 6월말에는 각각 37%와 41%로 격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金監委에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주로 담당하던 지방은행을 대안 없이 퇴출시킴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地域經濟를 빈사상태로 몰고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서는 첫번째로 退出銀行 選定 過程에서 평화은행이 근로자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실을 평가에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지방은행의 퇴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鎮載 李在善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李在昌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昌委員 한나라당소속 경기 파주출신 李在昌 委員입니다.

본위원은 내년도 豫算審議에 앞서서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라살림을 짜는 큰 의미를 가진 예산심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흉년에 훌륭한 살림꾼이 나오는 것과 같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참으로 나라살림을 잘 꾸리는 살림꾼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정부 각 부처에서 정말 예산을 잘 운용해 주십사하는 간절한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經濟展望을 다소 낙관적으로 봤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 내외의 플러스성장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IMF에서는 내년도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볼 뿐만 아니라 대우라든지 우리 국내의 우수한 경제연구기관에서도 마이너스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 평균으로 0.68%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정부예산은 2% 성장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금년도보다 4.6%나 증가한 71조 6,343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낙관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99년도의 歲入에 있어서도 公企業 賣却收入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도의 매각실적을 보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이 예산 그대로 집행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의 특징의 하나는 赤字財政을 運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긴 말씀은 안 드립니다.

우선 내년에 13조5,000억원의 國債를 발행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國債利子만도 2조 3,961억원이나 물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적자재정의 운용은 흔히 현지 IMF기준에 의하면 GDP 對 5%이내는 괜찮다 그렇기 때문

에 국제발행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서 부득이하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우리 경제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일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림을 꾸려간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볼 때 이런 낙관적인 견해보다는 정말 赤字財政의 후유증, 부작용 그리고 악순환으로 인해서 우리보다 일찍이 이런 적자재정으로 해서 70년대이후 계속 적자재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선진국의 예를 볼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특히 우리와 같이 國際信認度가 선진국만 못한 나라에서 국가재정마저도 만약 적자재정으로 만성화될 때 과연 우리가 필요할 때 외화를 도입한다든지 정부의 지급보증이 국제경제사회에서 얼마만큼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는 外換危機 같은 것을 만날 때 우리의 소위 대응경쟁력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 속에서 해소방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위원장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64조원에 달하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보증채권 외에도 98년말에 약 50조원에 가까운 國債發行이 누적액수가 될 것이고 또 99년 한 해만 하더라도 30조원이나 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빛이 누증되는 이런 상황에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금년내 中期財政計劃을 세워서 이에 근거해서 일관성있는 재정운용체제를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함은 물론 이것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철저히 국채관리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 24일 3당 합동 경제협의회에서 보고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2000년까지 재정의 경기대응능력 제고에 힘써서 2001년부터는 財政赤字規模를 줄여나가 2006년에는 재정을 GDP 대비 0.3%의 흑자로 바꾸어서 2006년부터는 國債償還에 들어가고 2015년에는 全額償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로는 2000년에 우리 나라의 經濟成長率이 7.8%, 2002년에는 9%로 보고 있는, 소위 고성장을 내다 본 이런 중장기재정계획을 마련했

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실상, 물론 앞으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무리하게 우리의 경제성장을 예측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는 소위 근거를 어떻게 잡고 이러한 高度成長의 바탕위에서 中長期財政計劃을 세웠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경제부장관께 묻습니다.

사실 빚더미 재정을 건전한 재정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뼈아픈 정부의 構造調整과 효율적인 財政運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歲入基盤 擴充方案으로 음성탈루소득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각종 조세감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150만이나 되는 실업자가 실의에 빠져있는데 반해서 일부 소위 高所得層, 음성 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도 내지 않고 오히려 이 IMF 체제를 즐기는, 그래서 이대호가 좋다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한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장관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음성 탈루사범에 대해서 어떻게 추적과세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풍토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와,

둘째, 불요불급한 事業費, 낭비가능성이 있는 經常費가 관행적으로 예산 집행되지 않도록 사전, 사후 철저한 평가심사제도를 마련하고 기관별 세출 증가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셋째, 赤字財政의 解消를 위한 제도적인 방법으로 재정적자액 대비 GDP 비율이나 국가채무 대비 GDP 비율을 재정지표로 간주하고 3 내지 5년간의 목표치를 설정해서 이를 엄격하게 관리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미국에서 사용했던 소위 沒收方法, 시퀀스 트레이션(sequestration)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 적자해소 목표기간을 정하고 목표에 미달한 회계연도에서는 전체지출을 일정하게 삭감하는 이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豫算制度의 效率性과 透明性에 대해서 재정부장관께 묻고 또한 행정자치부장관께도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 예산제도는 일반회계 22개, 특별회계 35개, 공공기금과 39개 기타 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회계간 예산의 중복, 복잡성으로 투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직적이고 또한 基金은 막대한



예산을 편성·운영하면서도 國會의 審議도 받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전면 개편하고 대폭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께 묻습니다.

현재 地方財政交付金과 財政融資特別會計에서 인수하는 地方債 事業에 대해서 투명성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묻겠습니다.

사실 지방재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서 현재 13.27%로 되어 있는 율을 17%까지 올려야 된다는 데는 본위원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地方交付稅法에 의한 地方交付金이 소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普通交付金의 경우 11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액수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고 또한 투명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特別交付金, 전체교부금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로 보면 내년에 약 6조6,469억원의 교부세중에서 11분의 1인 6,043억원이 소위 시책사업 또 재정보전, 재해대책, 지역현안수요 이런 명목으로 해서 사실상 행정자치부장관이 통제없이 집행하는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점에서 오히려 이것을 보통분으로 전환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것은 일정한 기준을 국회에 제출해서 사용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特別交付稅制度를 폐지하고 豫備費制度를 운영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만약 필요하다면 현재 11분의 1 제도를 500분의 1 정도로 해서 재해대책비 등 긴급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특에서 내년 예산에도 1조원을 地方債 引受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국회에서 심의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려 豫算統制權 밖에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러한 방식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失業對策과 관련해서는 여러 선배·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問題點은 제가 지적을 하지 않고 改善方案으로 본위원 생각은 이제 그러한 소위 그냥 나가서 이름이나 걸고 들어와도 3만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년에 책정한 2조원을 생산적인 데 써야 되겠다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管内 中小企業중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데에 간접지원을 해서 취업을 시키도록 한다든지 또는 건설 SOC사업 이런 부분에 인력부분을 일정부분 할당을 해서 실제 취업으로 인한 소득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失業者對策이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실업자의 실태 자체를 지방에서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대책을 쓰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사업장의 선정, 그리고 공공취로사업에 대한 준비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農漁村 支援問題와 관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사실상 농업구조개선사업의 비중을 낮춰서 감액을 하고 유통부분에 증액을 했습니다. 타당한 정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농업구조는 취약하기 때문에 기반조성사업도 유통사업 못지 않게 강화해 나갈 때만이 농업생산에 경쟁력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갑자기 이렇게 구조개선사업을 줄이고 유통사업만 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農業構造改善事業에도 앞으로 적어도 한 5년 동안은 꾸준히 지원을 하면서 유통구조개선을 하는 이런 병행적인 정책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財經部長官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에 농림부장관께서는 지금 구조조정 개선사업으로 농지개량조합과 농업진흥공사를 통합하는 계획 그리고 농협 수협 축협 임협 등 농어촌조합을 모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상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마는 각 조합이 소위 생명체가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인 조정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과연 이렇게

조정을 하는 구체적인 시기와 또 이에 관련된 정부 예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이 문제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로 인한 농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추정하고 있는가 또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鎮載委員長, 趙洪奎幹事와 사회교대)

다음 第2國民建國汎國民運動推進委員會 問題에 대해서는 선배·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 예산에 책정된 문제가 온당치 못 하다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과연 이런 국민운동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소기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직접 관장했던 경험이 있는 본위원으로서 조직은 개성과 생명체를 가진 그런 조직으로 소위 조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전부 통합해서 그것도 정부의 소위 뜻대로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소위 관 주도형으로 했을 때 이것은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불을 피워보면 불씨를 붙일 때는 누군가 불을 붙여야 됩니다. 하지만 빨리 타라고 자꾸 뒤적이면 불이 꺼집니다. 이 국민운동도 바로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너무 정부가 이렇게 성급하게 일시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趙洪奎 李在昌 先輩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金台植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台植委員 국민회의 金台植 委員입니다.

저는 바다를 끼고 살지 않기 때문에 어선의 종류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하면서 바다고기를 잡는 배, 어선 이런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질의를 늦게 하다보니까 마치 底引網 트롤어선으로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려가지고 작은 잔챙이 고기도 안 남은 것 같은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교롭게도 사물을 관조하는 시각이 저와 비슷한 李在昌 先輩 委員께서 제 질의순서 바로

앞에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나라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신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교과서적인 평가를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豫算은 歲入과 歲出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역시 赤字財政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일반회계 13조5,000억에 상당하는 세입결손분을 국채로 발행해서 메꾸고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로 보면 22조가 넘는 이러한 적자재정을 짜 가지고 정부는 국회에 내놓았습니다. IMF 管理經濟體制 이후에 정말로 불가피한 선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부측에서 아까도 李委員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GDP 5% 수준은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유일한 변명을 내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정부예산이 세입내 세출로 均衡豫算 均衡財政을 짜는 것이 이상적인 모델로 되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그 원칙이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아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외상살림이라는 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마약과 같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중독이 되면 결국 빚살림으로 계속해 나가는 관성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깊은 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총리이하 국무위원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드리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이 예산안에 대한 적자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표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歲出部分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IMF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財政需要가 팽창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몫의 예산을 짜는데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躍如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財政赤字下에서 복지성 수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정학의 ABC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절대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비 예컨대 생계비 보호 지원 3,682억원이랄지 한시적 생활보호 4,872억원 같은 것은 論外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로사업 2조원은 저로서도 무언가 한 두 마디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 勞動生

産性和 연결되지 않는 자원의 낭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것입니다.

어제 정부측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공공 근로자들이 1조원을 쓰면 11만명이 수혜혜택을 받는데 SOC사업을 하는데 1조원을 쓰면 3만명의 수혜밖에 받지 못한다는 계수를 지적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量的인 것보다는 質的인 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어차피 개인 입장에서 보면 가처분소득의 수준을 높여주거나 기초생계비의 기준을 충족시켜 주는 그런 수준이 못된다면 이것은 좀 어떻게 생산과 연결되는 예산으로 쓸 수 없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정부측의 제안설명을 보면 産業聯關效果가 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찍이 러시아의 레온티에프가 산업연관론을 말하면서 전후방 연관효과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內需景氣를 진작시킬 수 있는 후방 연관효과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없겠는가 그것이 꼭 SOC사업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전후방 연관효과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단일산업으로서는 철강산업이고 복합산업으로 보면 자동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건설산업이 후방 연관효과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수경기를 살려서 경제를 일으킬 몫을 한 쪽에서 한다면 質的인 豫算運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큰 질의로 두 번째, 총리께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개혁의지와 그 속도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懸案인 金融構造改革과 5대 財閥의 빅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어제도 대통령께서는 애타는 마음으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내각에 대해서 금융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傳聞받고 있습니다. 내각과 그 당사자인 금융기관 재벌들 사이에 대응하는 어떤 간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市場經濟 原理下的 마찰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각이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인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입만 열면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우면서 왜 정부가 개입해서 構造調整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빅딜을 하라고 하는가 하는 反論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항 때문입니까? 이런 저항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 은행을 부실덩어리로 망쳐놓아가지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IMF사태가 일어난 97년11월부터 99년까지 134조원의 國民稅金으로 이것을 메워서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원리입니까? 선단식 문어발 경영으로 주력우량기업마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한계기업은 다 잘라버리고 業種 主力化를 통해서 하나라도 쓸만한 기업으로 살아남아라, 그렇지 않으면 동반자살할 수밖에 없다 하는데 이들에게 救濟金融으로 살려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는 것은 무슨 원리입니까? 이것은 市場原理입니까? 反市場原理입니까?

이 국민의 정부는 분명히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經濟政策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소에 믿고 있습니다. 지난 번 결산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디라마는 시장경제원리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市場經濟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질서있는 시장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시장경제질서를 잡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있는 自由市場經濟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오더 리버러리즘이라고 하는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생기는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인 타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GATT 체제하에서는 比較優位論으로서 버티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WTO 체제 시대에는 절대적인 우위가 지속되지 않는 한 버티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흔아홉 마리를 가진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나서는 牧歌的인 餘裕를 허락치 않고 있다 이것이 엄연한 國際經濟戰爭의 현실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리!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南北關係를 平和의 經濟學으로 풀고자 하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未來學으로 본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손자병법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上之

策 중에 上之策이라고 했습니다. 총리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또한 국방부장관, 행여 햇볕정책 때문에 安保態勢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었는가 하는 물음을 함께 드립니다.

총리!

第2建國運動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저는 1910년8월 한일합방을 통해서 庚戌國恥를 겪은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1997년11월21일 우리는 IMF 經濟信託統治를 당하면서 丁丑國恥를 마음 속으로 겪었다 이렇게 봅니다.

무너진 韓國 經濟를 다시 일으키고 빼앗긴 國家의 自尊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제2건국하는 운동을 갖자는 것 아닙니까?

經濟는 누가 일으킵니까? 사람이 일으킵니다. 사람은 무엇이 움직입니까? 意識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國民運動으로 조직화해서 승화시켜 나가자는 것이 第2建國運動의 요체가 아닙니까? 본질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명을 못합니까?

官이 주도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일부의 걱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官도 民도 함께 참여해서 그래서 國民運動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國民 속에는 官도 있고 民도 있는 거예요. 官 속에는 與를 지지하는 官도 있고 野를 지지하는 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第2의 政治圈 勢力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우를 갖고 있다면 갖고 있는 측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켜 주어야 할 정부측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확고부동한 소신있는 입장을 지켜나가 주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하는 주문이 그것입니다. 改革은 시간을 낭비하면 절대로 成功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왕조시대 우리의 역사에서 보면 훈구파의 개혁도 사림파의 개혁도 마치 물 속에 빠진 사람 구해내듯이, 불에 타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구해내듯이 이렇게 速戰速決로 해야 한답니다. 개혁의 시간이

한 달 늦어지면 개혁을 통해서 희생하는 나라의 몸살이 1년이 연장되고 1년이 늦어지면 10년의 몸살이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려 두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언론에서 봤습니다. 金大中 政府가 들어서가지고 改革의 분위기가 국민들 사이에 크게 共感帶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은 마치 골키퍼와 1 대 1로 대치하는 상황과 같다, 1 대 1의 노마크 찬스에 슈팅을 못하면 골인할 수 없다, 시간을 끌면 수비수들이 10명이 다 골키퍼 앞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을 하고자 하는데 시간의 낭비는 없었는지 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많습시다마는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趙洪奎 金台植 委員, 내용도 좋으시고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朴源弘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源弘委員 서울 서초갑 출신의 한나라당 朴源弘 委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띤 國政論議에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프로가수들이 노래를 잘 부른 다음에 아마추어가 나온 셈입니다마는 이제 겨우 넉 달된 국회의원의 첫 발언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金大中 大統領께서는 건국50주년을 맞은 지난 8월15일 경축식에서 우리 나라의 총체적 개혁을 다짐하면서 제2의 建國宣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 제2의 건국운동 기초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결론부터 말해서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이 시대에 國力을 낭비하는 정말 쓸데없는 일이며 금쪽같은 국민의 세금을 헛되게 쓰는 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고집을 꺾고 당장 포기하셔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國民意識改革運動,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더라도 方法論이 문제입니다. 운동의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합니다. 오해를 사게 되면 안됩니다.

이 운동과 관련된 豫算은 단 한 푼도 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운동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 공동정권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와 이 운동의 기획단장으로 있는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법무장관은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 청와대나 새정치국민회의를 바라보지 마시고 소신있고 양심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정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있을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의 진술자료에서 서울대 김동건 교수는 외국의赤字財政運用事例를 살펴볼 때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다, 성공한 사례의 전형적인 성공요인은 소비성 정부지출 축소 등 과감한 정부개혁,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한 것에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신뢰성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국가들은 미국과 영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이 실패할 근거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입니다. 관계 국무위원들의 반론과 견해를 구합니다.

첫째, 諮問機構로 설립되어서 어떻게 집행기구 역할을 합니까? 官 주도의 냄새가 물씬 납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해서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1980년 당시에 정부가 國保衛를 이런 식으로 법적 근거없이 추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18년이나 지난 지금 헌법의 근거도 없이 법률도 만들지 않은 채 大統領 施行令이라는 초법·탈법적인 조치로 시작하려는 이 제2건국운동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지금은 21세기를 코앞에 둔 1998년 말입니다. 열린 세상입니다. 국민은 더욱 현명해졌습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일을 정부가 요구하면 국민은 호응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중에서 나도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즉 김대중 정권이 자민련과의 內閣制 改憲約束을 지키지 않게 될 것이며 그 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제2건국운동으로 그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는 이야기들, 여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經濟回復과 統一準備를 위해서 國民和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을 중시하면서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말은 지방자치라면서 국민운동의 지침은 중앙에서 내려오니 그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려 하십니까? 정부와 여당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제2건국운동으로 인해서 자치단체내에서도 화합과 단결보다는 오히려 불화와 갈등이 증폭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갈리고 동서가 나뉘어지며 운동참여자와 방관자, 비판자가 서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남·북지역과 대구, 부산 등 야당지역에서는 이에 따른 조례통과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條例制定으로 인한 자치단체내의 불협화음 이것은 지역발전을 앞당기기보다는 이를 저해하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둘째, 개혁의 遂行主體가 정부인지 제2건국위원인지 누구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제2건국위가 밝힌 7대 국정과제는 이미 정부 각 부처들이 추진키로 한 것입니다. 이 제2건국위와 정부 기존조직의 조화로운 협력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가 나타난다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지금까지의 정부정책 시행과정들을 돌이켜 본다면 이것은 국정수행에 혼선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옥상옥입니다. 정말 누가 이 운동의 주체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第2建國 汎國民推進委員會는 과거의 부정적인 그림자를 쉽게 벗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의 실천기구의 일선에 정부기구들이 또 공무원들이 배치된다면 이는 결국 실적주의하고 구호만을 부르짖는 전시성 운동으로 끝나서 다음 정권과 후세에 빛과 상처만 남겨줄 것같은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推進委員들의 면면을 보아도 걱정이 앞섭니다. 중앙단위에서 이미 선정된 추진위원들은 실질적인 능력보다는 사회적 인지도가 앞선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중앙의 경우 운동의 상징성에 비추어 볼 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방단위까지 추진위원들을 선정한다면 이들은 이름만 걸어놓은 채 자신의 사업지키기나 정치적 도약발판으로 삼는 등 이 운동을 악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고학력실업자 실업대책이라는 명목하에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6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현 정권의 청년국정홍보 전위대 1만명을 양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중권 청와대비서실장도 지난 9월 29일 대구의 강연에서 제2건국운동에 미취업대학생 1만명 정도를 활용할 계획이고 국정홍보 등의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한 자와 自意건 他意건 참여하지 않은 자들과의 괴리감, 갈등, 불협화음이 증폭되어서 國民和合이 저해될 위험성이 큰 것입니다. 제2건국운동은 국민들 마음에서 개혁의 열정을 끌어내서 스스로

불타오르게 유도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관리들의 선창이나 독려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대부분의 기존 市民團體들도 정부가 민간차원의 의식개혁을 주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시민단체들은 국민과 함께 이 운동의 동기를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도 눈을 이제는 크게 뜨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제주의 경실련, YMCA, YWCA 등 제주지역 7개 시민단체연합의 발표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주도의 제2건국위는 거대 新黨創黨을 위한 사전조직, 제2의 관변조직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순수성, 자발성을 생명으로 하는 市民運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사과나무 밭에 가서 갓끈 매지 말고 오이밭에 가서 신끈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16대 總選이 불과 1년4개월 남았습니다. 內閣制 改憲論議를 길게 보아 1년 남기고 왜 이런 오해받을 운동을 서둘러 개시합니까? 아무리 정부가 민간단체들을 지원하는 선에서만 그 역할을 다하고 그 밖에는 민간단체의 자율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누가 이 말을 그대로 믿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시민단체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것만 보아도 시민단체들의 自律性과 獨自性을 해치고 있어서 정부의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다섯 가지가 명쾌히 풀리기 전까지는 제2건국운동 관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권을 잡았을 때 너무 큰 업적을 빨리 남기려는 욕심을 하루빨리 버려야 할 것입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큰 정치를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할 일을 더 늦기 전에 그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이 바로 그때입니다. 국무총리와 행자부장관께서는 본위원의 견해가 틀렸다면 비판해 주시고 답변하실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길록 전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의 비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대답해 주십시오.

오씨는 국민회의 민원실장 재직시부터 민원처리 과정에서 여성 민원인과의 추문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해 11월말에는 장학로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비리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장씨의 전처로부터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사실

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선 직후인 지난 1월에는 검찰에 선거수사의 공정성을 시비삼아서 안하무인격인 전화통화로 심한 구설수에 오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온 이제까지의 관행을 파기한 것입니다. 더구나 여성 청탁인과 부도덕한 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사건 말고도 자신이 개장한 강원도 평창군 유스호스텔의 地目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과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수뢰설, 축재과정 등 여러 가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인물이 어떻게 지금까지 집권여당의 주요보직을 맡고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오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전국구 의원후보를 사퇴시켜야 합니다. 그런 분하고 함께 국회의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국민회의 전국구 예비후보 서열 4위로, 의원직 승계 1순위까지 올라섰습니까? 야당시절 야당의 안기부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여권의 뒷조사에 탁월한 솜씨를 발휘했던 오씨에 대한 論功行賞입니까? 검찰은 오씨의 불구속 이유를, 받은 돈의 액수가 적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항경찰관 한 명이 지난 18일 서울지검에 전격 구속기소된 사건과 크게 비교가 됩니다. 공평하지 못한 일입니다. 고위직 불구속, 하위직 구속 원칙입니까? 有權無罪 無權有罪原則입니까? 이것이 국민정부의 부패척결기준입니까? 이것이 바로 현정권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金大中 大統領 자신과 측근들만 깨끗한 척 행동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는 집권여당 주변에 狐假虎威하는 세력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례로 불과 얼마 전에도 국민회의 한 핵심 당직자의 측근이 자신이 모시는 간부의 이름을 팔아서 경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같은 세태는 집권여당인 국민회의가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21일 긴급 전체당직자회의를 소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길록 전 부위원장과 관련된 비리사실을 단순히 한 개인의 비리차원으로 치부하고 사표수리 그리고 불구속수사로 끝내겠다는 것은 국민정부임을 자처하는 金大中 政權에게 부패비리척결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라고 하

겠습니다.

法務部長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오길록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전 부위원장의 비리사실들을 밝혀주시시오. 그리고 이 파렴치한 인물을 拘束搜查해서 餘罪를 발힐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광주 화신상호신용금고관계입니다.

최근 광주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16일자인데 광주 화신상호신용금고가 부실화되어서 破産節次를 밟을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화신의 수신고는 740억원이고 고객은 8,400명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실질적 소유자로 알려진 박용권 광주남구청장이 최근 100억원대의 不法貸出을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자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검찰조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목포의 政界 實力者가 공천해서 구청장이 되었다는 박용권씨의 불법대출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목포시 20개 金融機關의 長 즉 支店長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금융결제원 이무홍 지점장을 제외한 18개 지점장이 전남과 광주출신 그리고 한 명이 전북출신으로 충원되었습니다. 근무지가 목포라는 점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고도 하겠지만 이처럼 거의 전원이 湖南出身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목포지점장 전원을 타도시와 형평에 맞지 않게 3급지에서 1급지로 격상시켰다는데 이는 金融의 自律性을 무시한 정부지침에 의한 조치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李憲宰 委員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예결위위원장께서 본위원이 노트북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허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趙洪奎 朴源弘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李聖宰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聖宰委員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失業者가 170만을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실업은 곧 절망입니다. 그 동안 경제부처는 거품경제를 조성하는 데에는 온갖 노

력을 기울이면서도 社會安全網 構築에는 냉담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재정경제부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산을 보면 社會開發費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이 9% 정도입니다. 그중 순수한 사회보장 예산은 전체예산중 6.52%에 불과합니다. 반면 경제개발비는 매년 25%이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OECD 국가들중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가장 적은 말레이시아도 17%, 멕시코도 28%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50%를 넘고 있기에 아예 비교할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사회환경이 어려워질수록 고통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또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社會保障豫算을 매년 1조씩 증가시킨다고 가정하더라도 OECD 선진국가 수준에 이르려면 2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당장 올 예산부터 복지부, 노동부, 행자부, 보건처, 교육부 등의 사회보장부문 예산을 늘려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IMF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우리는 高失業時代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완전취업, 휴직, 잠재실업 등을 합치면 실업자수는 200만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실업대책은 예산 규모의 확충에는 초점을 두어왔지만 지원사업의 타당성 및 고용창출 효과 등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실업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업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위 타겟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실업정책을 펴는데 아무런 統計資料 없이 탁상행정으로 실업정책을 마련했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정책의 난맥상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업자중 40% 정도가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10% 정도는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중간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30%가 중산층이고 나머지 20% 정도가 기타 자발적 실업자라고 합니다.

이 통계에 따른다면 실업자의 절반 정도는 生計

安定對策이 우선되어야 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전반에 걸친 정밀한 조사를 위한 예산이 이번에도 편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밀한 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公共勤勞 對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비실업가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일부 중산층 실업자까지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저소득실업자에게 정부보조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순으로 보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低所得層 生活安定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미라든가 가져야 할 것인데 현 공공근로사업은 단순노동, 소모성 사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공근로사업은 그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비실업자라든가 중산층 실업자들보다는 저소득층이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노동부장관, 행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저소득층의 참여가 보장될 수 없다면 차라리 SOC등의 公共事業으로 전환확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社會福祉 서비스 傳達體系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대상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수한 통계에 따르면 실업자중 30% 미만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고 이중 저소득층인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는 저소득층보다는 비실업계층, 중산실업자가 대거참여하고 저소득층은 오히려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부재때문입니다. 傳達體系의 不在는 실업정책과 실업정책 관리의 분산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정책효과를 감소시켰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3,000명에 불과한 社會福祉專門要員을 7,000명까지 대폭 증원하고 이들을 일반 행정직으로 직렬화한 뒤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하여 실업대책 및 사회복지업무의 원스톱서비스의 창구로

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행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실업자들의 심리상태가 불안단계에서 분노단계 그 다음에는 우울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실업이 1년이상 장기화되면서 벌써 많은 실업자들이 분노와 우울의 단계에 이르고 있고 통계에 따르면 많은 수의 실업자들이 失業示威가 있을 경우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년 豫算執行은 심각한 고민과 평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공공근로사업의 2조를 포함한 실업대책 8조원이 허공에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저는 내년에 실업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집행에 유연성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99년 豫算總則에 실업대책 관련 예산의 이용·전용에 관한 特例條項을 두어서 기민하고 현실감 있는 실업예산 집행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이 공적부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든가 실업대책사업이 부진하고 효율이 떨어져 조기에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部處間의 移用이나 事業間의 轉用을 허용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만한 공공기금에 관해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영 부실의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98년 현재 76개의 기금, 운용규모는 126조원으로 일반회계 75조6,00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를 예를 들면 97년, 98년 예산중 國庫 대비 基金의 비율이\* 91.8%, 98년에는 89.1%입니다. 즉 노동부는 국회로부터 예산심의를 받아 집행하는 예산보다 10배나 되는 기금을 국회로부터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재경부장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企劃豫算委員會에서 추진하는 개혁을 보면서 때로는 무분별하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의 보존도 함께 고려되어 펼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위에서는 젊은 경제학도들이 국민의 정부를 개혁한다면서 온통 경제적 가치만으로 판단하고 경제적 가치만으로 가지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국립의료원을 에이전시(Agency)체도로 운영하겠다는가 국립결핵병원을 민영화하겠다는가 문화관광부의 국립극장을 민영화하겠다는 식의 발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國樂은 흥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립극장 같은 국립시설이 아니면 연주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밀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립극장은 국립극장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립의료원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가는 병원입니다. 다른 큰 병원의 경우 醫療保護患者가 1%도 안 되지만 국립의료원은 10% 이상이 의료보호환자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경영행정기관으로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숙자의 10%가 결핵환자입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결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국립목포결핵병원을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고 민營化하겠다고 합니다.

이윤만을 추구해서 이런 기관들을 칼질해버린다면 어려운 사람들은 누가 보듬겠습니까? 기획예산위원회가 해야 될 改革은 힘없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곳에 앞서서 이 땅에 위기를 가져온 構造的矛盾들 즉 財閥改革, 言論改革, 政治改革에 그 칼날을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방만한 인력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국민들의 다가운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획예산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직개선에 더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앙부처 등의 해묵은 部處利己主義에 대해서 대대적 개혁의 칼날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고난에 빠지고,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아직 정신차리지 못하고 자기 부처 살리기에 급급하는 현실, 힘있는 부처의 공무원들은 살아남고 힘없는 부처의 공무원들은 먼저 퇴출되어야 된다는 식의 개혁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改革은 숫자놀음이 아니고 왜곡된 현실의 正常化입니다. 필요한 곳이라면 지원을 늘리고 필요없

는 곳이라면 지원을 줄이는 합리적인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기획예산위의 개혁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위원장의 앞으로의 개혁방안과 철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趙洪奎 李聖宰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시간을 5분이나 아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金東周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周委員 먼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본의 아니게 他意에 의해서 몇 사람들의 장난에 의해서 6년 동안 國政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참여를 하게 해 준 여러분들과 부산 시민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간단히 몇 마디 질의만 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서니까 상당히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12대, 13대 의원 생활할 때는 野黨이었습니다만 이제 執權與黨의 한 축으로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더욱더 심도 깊은 국정을 같이 논하게 된 것을 아주 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단히 훌륭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좋은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에 간단히 몇 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와 건교부장관 그리고 기획예산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몇 사람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京釜高速鐵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98년7월31일 4차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90년6월부터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한 서울과 부산간의 경부고속철도사업을 건교부장관의 자문기관인 평가자문위원회에서 10차에 걸쳐서 25명의 자문위원이 10시간40분, 합계 회의시간이 10시간40분입니다. 이 회의록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존경하는 기획예산위원장과 부위원장인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그리고 국무위원급 25명 중 23명이 참석했습니다. 불과 몇 분 동안에 이 중대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京釜高速鐵道라면 서울에서 부산 가기 때문에 경부고속철도인데 이것을 부산에서 대구로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 하기로 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2004년까지 1단계 서울에서 대구까지 하는 고속철도 건설비가 18조원이 듭니다. 그 동안에 만일 그 밑에 있는 부산, 경남, 경주, 울산, 대한민국 국민의 약 40%가 2004년에 서울에서 대구까지만 고속철도가 달리고 그 외에는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해서 다닌다면 그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관 이하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질타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金大中 大統領께서 대통령이 되어서 지역감정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하는 판에 소위 국무위원급이 25명이나 모인 훌륭한 사람들의 회의체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아마 600억인가 부지매입비를 상정해 놨을 것입니다.

정부가 또 정책을 다루다 보면 잘 하는 수도 있고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위원장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에 참여할 때와 국정에 참여할 때와 또 밖에서 볼 때와 조금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요즘 상당히 어려운 직무를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大行政改革을 합시다. 시·도간에 통합을 해야 합니다. 또 시·군간에 또 구청과 구청간에 통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숫자 몇 사람 줄이고 이렇게 한데서 무슨 큰 예산절감이 되고 큰 변화가 오겠습니까? 일례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예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위원님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정도는 합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큰 틀을 한번 짚 보자 이것이에요. 부산의 경우에 수영과 남구, 중구와 서구 또 옛날 우리가 비포장되고 통신시설 안될 때 시·군이 그렇게 많았지 지금은 도와 도가는데도 한 시간 이내에 다 가지 않습니까?

이런 大行政改革 이것은 아마 엄청난 충격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국가를 위하고 미래를 위한다면 이런 큰 행정개혁을 金正吉 長官은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지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 우리 公務員의 姿勢問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신정부가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실세니 허세니 하는 이야기나 나오고 힘있는 부서니 없는 부서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힘있는 사람이 있고 힘없는 사람이 있고 실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대통령이 네 사람이나 바뀌는 것을 봤는데 실세라고 해서 憲法과 法律을 잘 지키지 않고 월권행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뒤끝이 다 안 좋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법률을 지켜야 됩니다. 상대를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국회를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또 일례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경제기획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해당 각부 부서의 장관이나 그 부서의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우리 위원님들이 밤잠 안 자 가면서 하는 말씀 잘 듣고 즉각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요즘 상당히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데 권력을 가진 부서나 돈을 가진 부서나 전부가 각부 장관들이 다 한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上水道 部分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부산·경남에서는 여당후보로서는 제가 지역구로서 처음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문제를 하나 말씀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난 번에 대통령께서 國會 施政演說에서 수도권 상수원을 위해서 팔당을 앞으로 2004년까지 1급수를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환영합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2도시인 부산하고 경남, 울산 상수원인 낙동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낙동강은 앞으로 향후 5년동안에 2급수 수준을 만든다 이래서 약 3조원이상 정부가 출자를 한다 이렇게 사업계획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1급수를 먹어야 되고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에 사

는 사람들은 2급수를 먹어야 되는지 또 2급수를 만드는 계획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하면 1급수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무총리나 혹은 환경부장관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指摘事項이 좀 있습니다마는 하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각 부서 부서마다 전부 한두 가지는 제 나름대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또제가 늦게 제일 마지막날 질의를 하는 의미에서 書面質疑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趙洪奎 金東周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 오히려 구두질의보다도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權琪述 委員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琪述委員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특세사업과 관련해서 國務總理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현정부는 農漁村 構造改善事業의 투자기간을 연장하고 농가부채를 탕감하겠다고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농촌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정부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는커녕 거꾸로 농업말살정책을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서 농림부 예산을 7,200억 원 삭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농림 예산안의 규모도 8조689억원으로서 올해의 예산 8조5,264억원보다도 오히려 4,575억원씩이나 또 삭감편성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개방화에 대비해서 42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15조 농특세사업을 마련해서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

으로 늘려 왔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부실과 비효율문제 등 부작용도 많았습니다마는 농업생산기반이 확충되고 영농의 규모화, 전문화와 시설현대화가 진전되어 왔습니다.

農漁村 構造改善은 그 성과가 단기간내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려 했던 제2단계 농어촌 투자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촌 투융자의 비효율성과 재정운용의 경직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조개선사업이나 농특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저하게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과 부작용이 지적된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농업인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농촌을 외면하고 농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농업은 경제적 잣대로 잴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방위산업이며 민족의 생명에너지산업입니다. 농정을 발전시키지 못한 나라는 결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의 지원도 없이 농업, 농촌 제도약 운동을 구호로만 외치고 있습니다. 豫算이 뒷받침되지 않고 구호만 외친다고 성사될 수 있는 사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난 大統領選舉에서 농어촌지역에서의 득표상황을 현정부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李會昌 候補가 농어촌에서 28%를 득표한 반면 金大中 大統領은 48%를 득표했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농업인은 현정부가 農漁家 負債를 탕감해 주고 농어업을 활성화시켜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농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선거를 다시 한다면 농어촌의 지지표는 뒤바뀔 것입니다. 현 정부의 農政抹殺政策이 바로 지지표가 떨어진 그 원인입니다. 정부에서 제2단계 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에 대한 투융자계획을 금년중에 수립해야 합니다.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정책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99년 예산안에 農業構造改善과 농업 제도약 사업을 위한 예산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경부장관과 기획예산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租稅體系簡素化 차원에서 農漁村特別稅를 폐지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농특세는 UR협상이 체결된 뒤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만든 목적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농어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정부에서는 지금 농어촌의 경제가 活性化되었다고 보십니까?

감사원장과 기획예산위원장, 재경부장관과 국무위원 여러분!

빛더미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는 農漁業人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농산물 가격의 불안과 소값 폭락으로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농어촌의 비참한 현실을 정부에서는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만약 농특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농특세를 신설해서라도 농어촌을 살리고 농어업을 살려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특세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정책적 과오가 될 것입니다. 농업을 말살하고 농어업인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에도 農特稅를 존치하겠다고 정부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정부는 농가부채를 탕감하겠다, 제2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계속하겠다, 농특세 사업을 계속해서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4지방선거에서는 농특세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농어업인들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파기하고 있습니다. 농특세를 당초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존치해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농어촌을 살려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강력하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과 기획예산위원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農家負債 輕減對策의 일환으로 재정에서 利差補填額 853억원과 자금지원 3,750억원을 합해서 4,603억원을 부담하고 농협자금 1조2,000억원을 지원해서 내년말까지 상황이 도래하는 정책자금 중에서 1조6,603억원을 지원해서 선별적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2년간 연기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부채중 이자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相互金融資金에 대해서

는 정부에서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상환기간도 연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單位組合은 별도의 법인입니다. 중앙회하고도 별개입니다. 그런데 단위조합에서 어떤 자금으로 2년 동안 상환을 유예하고 금리를 부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금융기관의 構造調整을 위해서는 64조원의 채권발행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64조원에 대한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99년도 예산안에도 7조8,000억원의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농협의 相互金融 금리인하에 대한 利子差額 補填豫算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협의 상호금융 금리인하 차액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이차보전액을 99년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농협의 상호금융 이자 2% 인하에 대한 이차보전액이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과 기획예산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에 대한 政策資金 金리가 당초에는 5%였으나 올해 3월 시중금리의 상승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6.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중금리가 올해 3월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고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도 5%로 다시 인하조정해서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農漁家 負債償還 연기와 관련된 정책자금 금리를 6.5%에서 5%로 재조정해서 99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과 기획예산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조합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非課稅 時限과 관련해서 재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租稅減免規制法에 규정되어 있는 목돈마련저축과 종합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시한이 올 99년도말로 종료됩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99년 가입분부터 24.2%의 일반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종합예탁금과 출자금은 99년에 5%, 2000년에 10%, 2001년후에는 24.2%의 일반과세로 전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農漁業分野에는 오히려 지원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어서 농어업인들의 불평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동안 지원했던 혜택을 박탈해 버린다면 농어업인들은 지금의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도시근로자의 비과세 저축상품인 근로자 우대저축은 존속시키면서 농어업인에 대한 비과세저축을 폐지한다는 것은 형평을 과기하는 農漁村差別政策입니다. 비과세 시한을 추후 5년간 더 연장해서 농·수·축협 등의 농어업지원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한도액도 도시근로자 우대저축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도시와 농어촌에 대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蔚山-釜山 複線電鐵豫算과 관련하여 재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동해남부선의 울산-부산간 복선전철은 98년도 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부산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100만명이 훨씬 넘는 울산광역시민과 온산공단 및 기장, 고리원전 등지에서 400만 시민이 거주하는 부산광역시를 왕복하는 유동인구를 수송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울산공단 및 온산공단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엄청난 산업물동량을 수송해야 하는 화급을 요하는 노선입니다.

철도청과 건교부에서도 9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에 곧바로 착공을 해야 할 구간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99년 예산안에는 복선전철화 사업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선전철화 사업비 400억원 이상을 99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울산공단과 온산공단, 부산항의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여객수송 애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一般國道豫算과 관련하여 재경부장관과 기획예산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제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생활의 질이 향상되면서 일반 국도를 이용하는 산업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적체 구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교통애로구간을 특별관리하고 연차적으로 도로를 신설·확장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99년 예산에는 일반국도건설 사업비가 올해보다도 오히려 9%가 감소되었습니다. 전국의 국도상 교통애로구간은 3,140km로서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그런데도 99년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비는 1조4,500억원으로서 올해보다도 오히려 1,391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국도의 건설은 국가의 간선도로망을 확장해서 지역개발 효과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로 인한 실업대책 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투자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일반국도건설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될 상황에 이르러서 단순노무직을 포함한 대량 실업사태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1,700억원을 편성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99년도에도 똑같은 전철을 또 밟아서야 되겠습니까?

사업의 추진실적을 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황소개구리 잡기 등으로 낭비되는 公共勤勞事業費 2조원을 삭감해서 일반국도건설 사업비를 3,000억원 증액하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되고 확실한 실업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과 기획예산위원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趙洪奎 權琪述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劉容泰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容泰委員 劉容泰 委員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는 가운데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시간이 초과하면 나머지 부분은 書面質疑를 통해서 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97년4월 정부와 국회는 최첨단 기술대결의 장이 될 21세기를 대비해서 국가과학기술을 향상시켜야만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함 속에서 科學技術革新을위한特別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이 법안의 핵심골자라고 할 수 있는 동법 제3조 다시 말하면 科學技術革新5個年計劃을 수립하고 또 제5조에 따른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서, 과학기술부, 교육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4개 부처가 공동으로 1997년부터 2002년에 걸친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을 만들어서 국민앞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편성시에 정부 豫算增加率보다는 일정비율을 연구개발예산에 더 투자하도록 해서 2002년에는 R&D예산을 정부

총 예산액의 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기부는 이 부분의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연도별 수치를 科學技術長官會議를 통해서 국회에도 보고했다시피 97년에 정부 총 예산액의 3.9%, 98년에 4.1%, 99년에 4.3%, 2000년에 4.5%, 2001년 4.8%, 2002년 마지막 해에는 5%를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IMF체제하에서도 금년 4월 열린 과학기술 장관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 추진계획에 따라서 99년 R&D의 擴大 目標值를 당초 목표인 정부 총 예산의 4.3% 보다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4% 수준까지는 제고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도 이 수치는 꼭 관철하겠다고 특히 과기부장관께서는 이 부분을 관철하겠다고 국회에 몇 번씩 다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7년도에 정부 총 예산액의 3.9% 다시 말하면 2조7,677억원에 달하는 R&D예산은 98년도에 두 번에 걸친 追更豫算 편성을 거치면서 당초 예정치인 4.1%에서 3.4%로 내려가고 금액면에서도 오히려 97년에 비해서 334억원이 감소된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정부 총 예산의 약 3.2% 밖에 안되는 2조7,396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 수치는 국가전체 연구개발예산의 약 78%를 차지하는 정도의 수치이고 그 동안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던 民間部門의 연구개발투자 또한 98년도에 전년 대비 최저 약 11.4% 내지 최고 21%까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목각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법안의 취지는 21세기 초에 우리 나라 科學技術力을 G7 수준으로 제고시킨다는 목표 아래에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늘려나가야 된다는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던 것입니다.

설사 일이년 후에 경제가 회복되고 2002년에 가서 당초 계획대로 정부 총 예산액의 5% 이상 R&D투자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과학기술력의 향상은 하루아침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IMF사태를 맞고 경제가 어렵다손치더라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豫決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과학기술부를 위시한 행정부처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83년 자국의 經濟危機를 맞이해서 오히려 정부예산의 30%를 R&D 예산에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눈부신 경제성공을 거두었던 이스라엘의 사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위상강화와 정부출연연구소들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금번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개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설치, 出捐研究會의 설치 등 일련의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이 R&D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모두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國政監査 기간중에 大德研究團地를 비롯한 과학기술계의 출연연구소들을 감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있는 모든 위원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과학기술 관리구조 변화와 그들의 움직임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과학기술계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연구개발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까지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投資擴大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국무총리와 재정부장관님 그리고 과학기술부장관께서도 함께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權琪述 委員님을 포함한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특히 어제는 農林部長官과 모 위원께서 52조를 퍼부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장관께서 답하시기를 52조가 아니라 42조입니다라고 해명하시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지방과 농촌에 이 정부는 퍼부었고 또 그와 관련된 效果擧揚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특별시 수도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이 정부는 단 한 푼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시간의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財政與件이 양호하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각종 정부지원에서 항상 차등을 받거나 소외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

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서 본위원은 정부의 불합리한 地方財政支援制度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행 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행 지방재정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地方交付稅요, 두 번째는 地方讓與金 그리고 세 번째, 國庫補助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째,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매년도 내국세 총액의 13.7%를 재원으로 하면서 그 11분의 10은 普通交付稅 그리고 11분의 1은 特別交付稅로 편성됩니다. 현행 지방교부세 지급기준은 보통교부세의 경우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未達額을 기초로 해서 지급하고 있고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확정 이후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의 25개 自治區의 경우, 地方交付稅法 제6조 보통교부세의 교부제1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합산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충족도가 100% 미만인 22개 區도 교부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同法 제7조에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의 산정기초가 되는 施行令 제5조 測定項目 및 測定單位 자체의 지하철건설 등 대도시 특수행정수요가 반영되어서 결국 서울시는 지하철건설과 그 운용으로 인해서 98년3월말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총 채무액이 5조5,547억원인데 약 90%에 달하는 4조9,953억원이 바로 지하철과 관련된 빚입니다.

결론적으로 地方交付稅 부분은 그 기준산정시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를 분리 산정하여 충족도 100% 미만인 自治區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지원하고 普通交付稅의 측정항목에서 지하철건설등 대도시 특유의 행정수요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財經部長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地方讓與金입니다.

지방양여금은 國稅에 해당하는 매년도 電話稅 및 酒稅의 100%, 土地超過利得稅의 50%, 農漁村特別稅의 150분의 19를 재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하는 道路整備, 水質汚染防止, 靑少年育成 및 기타 地域開發事業 등의 특정사업에 충족하도록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讓與하는 재정지원제도의 하나로서 98년도에 3조977억원의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96년도 讓與金 재원 총 3조8,066억원중에서 37%에 달하는 1조4,077억원이 서울시에서 모두 징수된 액수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地方讓與金 제2조2항 地方自治團體의 定義에 따라서 讓與金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양여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同法 제4조 讓與金の 對象事業에 비추어봐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례로 동법 제4조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靑少年育成事業의 경우 우리 나라 전체 청소년의 20% 이상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他 시·도에 비해서 각종 위해환경이 극심한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서울이 他지역에 비해서 청소년육성에 대한 재원을 더욱 필요로 하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地方讓與金の 재원인 酒稅등 特定稅源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되어지는 세금이므로 서울시와 25개 서울시자치구를 포함한 全 地方自治團體가 그 受惠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고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自治區는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대도시 특수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讓與對象에 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國庫補助金입니다.

國庫補助金은 地方自治團體 기타 法人이나 개인의 事務 또는 事業에 필요한 施設資金이나 運營資金에 대하여 國家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개념이 바로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補助金の 豫算및管理에 관한法律 제10조 差等補助率의 적용에 따라서 他 市·道는 70% 내지 80% 이하로 적용받는 基準補助率은 50% 이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基準補助率의 일정률로 감하는 引下補助率은 他 市·道가 10% 내지 15%인데 비해 서울시는 20%를 차등적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서울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財政自立度 算定方式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은 特別會計를 제외한 一般會計만의 재원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依存財源을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즉 負債性 財源을 포함하는 재원의 비율로만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상태와는 전혀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지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결정되는 모순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는 매년 막대한 재원을 부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 98년3월말 현재 부채규모가 5조5,000억에 달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적은 관계로 인해서 재정자립도는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우리 수도 서울은 향후 세계화 정보화를 구축해야 할 막중한 소임이 있는 지역인 관계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中央政府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불합리한 법률을 고치지 아니하고는 1,000만을 수용하고 있는 수도 서울,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수도 서울의 새롭게 변모되는 모습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재정부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서면질의할테니까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매일같이 여의도 바닥은 데모군중으로 시끄러운 것이 요즘의 실정입니다. 枯葉劑患者들이 국회 앞을 가로막는가 하면 농민들이 몇만 명씩 몰려와서 시위를 하고 팔당 수원치 주변에 있는 여주, 광주, 남양주 시민들이 국회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과천에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업자들이 종합청사 앞에서 데모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고 바로 며칠 전 2만5,000명에 달하는 전국의 교원들이 敎員停年制와 관련하여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거기에 가일층 전국에 있는 수많은 택시노조 조합원들이 택시요금을 月給制로 해달라는 아우성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 또한 건교부장관께 서면질의할테니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趙洪奎 劉容泰 委員 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朱鎭吁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洪奎幹事, 金鎭載委員長과 사회교대)

○朱鎭吁委員 한나라당소속 慶北 高靈·星州의 朱鎭吁 委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국무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내년 豫算政策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農漁村豫算과 負債對策, 新韓·日漁業協定 締結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 예산안이 지향하고 있는 財政政策의 기본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갈피를 잡기 어려운 산만한 예산편성 논의속에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고심한 흔적도 엿보이기는 합니다. 景氣浮揚과 실업의 완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반대할 이유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방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失業對策에 대한 것입니다.

내년도 失業對策豫算은 금년 대비 4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업대책이 지금처럼 失業者生計對策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제대로 된 일자리 늘리기 대책으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목만 就勞事業이라고 붙이고는 작업과 그 성과는 뒷전에 돌리고 생계를 위한 日當만 지급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나라가 공히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련의 큼지막한 社會間接資本 建設工事를 신규로 개시하여 여기에 참여하는 企業活動으로 하여금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직업훈련에 있어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더라도 기업체의 생산활동과 연결되는 분야에 중점을 두거나 아예 企業體主管으로 시행하는 등 수요의 連鎖效果를 통해 다른 산업활동으로 수요가 번지게 하고 일자리의 개울물이 조금씩 커져 강물이 되도록 도모하여 실질적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金融構造調整費用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金融部門이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IMF사태 훨씬 이전부터 여러 사람이 주장해오던 터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금융구조조정 비용으로 金融構造調整 債權에 대한 이차지원액 7조8,000억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부실채권매입에 대부분 사용될 금융구조조정 채권 64조에 대한 支給保證도 역시 정



부가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금융기관 부실책임을 온 국민이 떠맡아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이고 64조원을 국민부담으로 따지면 가구당 66만원이 됩니다.

재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막대한 국민부담을 무릅쓰고라도 金融構造調整이 성공을 거둔다면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화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官治金融의 잔재와 금융 및 기업부문에 만연하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마는 이를 재정이 부담한다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不實債權問題를 해결하면 다시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보장이라도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높은 이자를 누려온 고리스크상품 투자자들의 손해를 왜 가난한 납세자가 보상해야 되는지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貸出梗塞을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기관들이 여유자금을 가지고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해 주지 않는 기현상의 근본구조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銀行·投信은 시중 여유자금으로 재테크를 하지만 企業·家計들은 돈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힘들고 게다가 기존 대출금까지 강제적으로 회수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물론 대출경색은 은행을 강압해서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져야 할 대출 부실화 위험을 정부가 대신 안는 것도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銀行 資本金의 재충전과 한은의 還買債 利子率 인하 이후에도 대출경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은행이 대출 부실위험을 무릅쓸 責任機構와 金融技術이 없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경부장관, 貸出危險 管理方法은 무엇입니까?

2단계 農村構造改善事業 投融資計劃을 조속히 수립하고 農漁村特別稅는 존치시켜야 됩니다. 현 정부는 농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등 농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처럼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政權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금년도 追更豫算을 통해

서 농림예산 7,200억원을 삭감했을 뿐만 아니고 내년도 전체 예산 6.2% 증액에도 불구하고 農林豫算은 금년 대비 13.1% 삭감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投融資 事業費豫算은 물경 37%나 깎여서 전 부처중에서 최악의 예산감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예년과 달리 단순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현 정부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하던 농업에 대한 사랑과 의지를 豫算과 投資라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확인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신정부 들어 처음 세운 예산과정을 통해서 40%에 가까운 최악의 예산 감축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변명한다 하더라도 현 정부의 農業에 대한 박대와 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農村 投融資事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부실과 非效率問題가 지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보조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부적격사업자가 선정되든지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에서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례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서 보완 발전시켜야 될 과제이지 이것을 핑계로 投資財源을 대폭 縮小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투융자 실적을 기초로 볼 때 농촌에 한번 정도만 더 中·長期 投融資計劃을 수립해서 지원하면 우리의 농업 농촌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추진하는 농업·농촌제도 약운동은 그냥 말로 그치는 구호에 그치든지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심화되는 農產物 市場開放에 대비,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식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나라의 근본인 농업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농촌에 대한 투융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고로 농업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선진국에 이른 나라가 없습니다. 이는 政權次元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의 42조원 구조개선사업을 이어서 추진할 제2단계 農村 投融資計劃을 금년중에 조

속히 수립해서 농업인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부의 입장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農特稅 廢止와 농어민의 貯蓄所得稅 非課稅 廢止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租稅體系 簡素化를 명분으로 2000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여 本稅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農特稅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초 UR농산물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조기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합의된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농특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농어촌에 대한 투자가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특세가 폐지되고 豫算配定方式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농·축산 부분에 투자할 예산을 세우는 절차가 까다롭고 심하면 완전히 없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농특세를 폐지한다면 결국 농업투자를 포기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재정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폐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행 農特稅에 상당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같이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稅收增大를 목적으로 농어민들의 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 근로자의 비과세저축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은 존치시키면서 농업인에 대한 비과세저축을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 맞지 않으며 組合 預託金과 出資金의 課稅轉換은 농업인소득 감소 뿐만이 아니고 농·축협 등의 저축 경쟁력 상실로 농업자금 조달 애로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非課稅時限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당연히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정부장관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農家負債 對策과 관련해서 政策資金金利의 환원이 필요합니다.

농가의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갚아야 될 元利金은 19조에 달합니다. 그러나 政策資金의 연체 비율은 지난 해 동기보다 0.7%가 늘어난 4.1%에 달하고 있고 특히 6개월 이상 연체된 惡性債權도 지난 해 동기 대비 1.3%가 늘어난 2.4%로 농업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

다.

또한 相互金融資金의 延滯比率도 전년대비 5.15%가 증가한 12.87%로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IMF이후의 농가 경영여건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부의 負債對策은 내년말까지 상황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중 1조5,000억원을 선별해서 원리금 상환을 2년간 연기를 하고 농가부채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호금융자금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책임하에서 金利를 내리고 償還期間도 연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대책을 보면서 정부가 농촌에 대해서 소홀해도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IMF관리체제에 직접 책임이 있는 金融企業 構造調整을 위해서는 65조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금년에도 13조5,000억원이라는 국채를 발행해서 赤字豫算을 편성하면서 IMF관리체제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은 전혀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정부장관과 예산청장께 묻습니다.

지난 3월 IMF관리 체제하에서 시중금리의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政策資金 金利를 5%에서 6.5%로 올렸습니다. 이제 시중금리가 IMF이전 수준으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5%로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임에도 농업인단체나 농민들이 그토록 애원해 온 政策資金의 金利인하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농·축·임협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는 자세로 相互金融金利를 2%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는 최근의 시세로 볼 때 그대로 두어도 2.3%는 하락하게 되었을 뿐 아니고 相互金融資金도 정부의 자금도 협동조합 자금도 아닌 농민의 貯蓄資金이기 때문에 결국 상호금융자금 금리 2% 낮추는 것을 협동조합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결국 조합의 경영악화와 부실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동 대책을 보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정부장관과 예산청장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재해의 源泉的 防止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의 조기정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엘니뇨 현상 등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재해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금년에는 集中豪雨로 농경지 15만여ha가 침수

되고 수리시설 3,900여개소가 파손되는 유례없는 재해가 발생해서 그 어느 때 보다 災害対策 關聯事業에 대한 투자요구가 절실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침수 농경지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은 총대상 면적 20만7,000ha 중에서 98년말까지 8만5,000ha를 완공해서 추진율이 42%로 부진한 데도 99년 예산안이 금년보다 16.4% 대폭 감액된 것을 보면 정부의 재해대비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예산청장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대부분이 소규모의 시·군 관리시설인데 시·군에서는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시설관리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地域特化事業으로 지원되는 정부보조도 형식에 그치고 있어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된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바라겠습니다.

農事用電氣料 적용대상 확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나라 전기요금은 농사용,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의 다섯 가지가 있고 농사용은 갑·을·병의 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갑이 그 중에서 가장 싸며 벼농사 관개시설의 電氣使用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갑·을·병 구별 중에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갑의 비중은 전체 농사용 사용량 중에 불과 18%에 불과하고 혜택이 가장 적은 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구조가 과거 벼농사 위주에서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원예, 축산으로 바뀌었고 특히 시설농업에 전기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 묻습니다.

농업에 제대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최근 電力需要가 늘고 있는 원예, 축산 등의 전기요금을 병에서 갑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농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많은 농산물 유통과 加工施設을 실제로 농업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용으로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를 농사용으로 전환함으로써 農業人의 부담경감과 경쟁력제고를 지원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근자에 말썽이 일고 있는 新韓·日漁業協定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재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어업협상에서 일본의 제1차 목표와 전략은 獨島 領有權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와 대등한 지위를 얻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실력으로 독도를 탈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어업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는 有人島이며 현재 한국의 점령하에 있지만 사실상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독도를 일본의 EEZ의 기점으로 삼고 독도와 울릉도 중간선으로 경계선을 확정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獨島는 섬이 아닌 암석에 불과한 즉 무인도라고 해석을 하면서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삼아서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 중간선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를 하나의 암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한·일간 EEZ협상에도 惡影響을 미치고 한·일간 영토분쟁의 발미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독도가 과연 암석에 불과한지 아니면 섬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독도는 이미 接岸施設과 등대 등을 갖추고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번 어업협정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하나의 암석으로 규정해서 스스로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의 근거를 포기했습니다.

獨島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향후 우리의 領有權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獨島開發事業 設計用役費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海洋水産部長官과 豫算廳長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新漁業協商案은 우리 漁業人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훼손시키는 협상안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황금어장인 대화퇴어장의 50% 이상이 中間水域에 포함되어 일본의 양보를 얻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획이 훨씬 풍부한 북동쪽어장은 포기했습니다. 또 북해도어장에 대한 1만5,000t 쿼터확보도 사실상은 일본의 수산업법에 명시된 각종 금지구역과 규제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목쿼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외 조목조목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시다라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 漁獲量을 획득을 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단순히 22만t 대 11만t이 아니고 등량 대 등가의 원칙으로 보았을 때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확신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海水部는 우리의 어업피해를 불과 1,390억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수산경제연구원은 5,019억원, 본위원이 수산업계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1조800억입니다. 근래 가파르게 오르는 어가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도 1조3,000억은 넘는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확보된 營漁資金 1,250억원을 피해업종에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被害漁民에 대책은 전무합니다. 피해어민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예산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여쭙고자 합니다.

또 기존 어장이 크게 변화되기 때문에 漁業戰爭이 예상됩니다. 漁業協商이 타결된다면 일본쪽 어장을 상실한 1,400여척의 우리 나라 어선들이 제주도 남서부와 東中國海에 몰려들면 좁은 어장에 조업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沿近海漁業 構造調整은 말할 것도 없고 원양오징어 등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어장축소에 따른 감척이나 전업지원 등 漁業支援對策에 대한 신규예산은 전혀 내년예산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청장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政策資金金利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 水産支援金利는 연근해영어자금 6.5%, 원양영어자금 7%, 해외자원 생산지원자금은 8%에서 10.5%로 차등화되어서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조업경쟁대상국인 대만 일본의 경우의 3%와 비교해 보면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조업경쟁대상국과 비교해서 매우 불리한 조건에다가 현재의 삼원화된 금리체계는 국제경쟁력강화뿐만 아니라 타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금리를 하향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과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鎮載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 元裕哲委員長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裕哲委員 새정치국민회의소속 京畿 平澤出身 元裕哲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景氣浮揚對策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SOC투자에 올해보다 5% 증가한 12조700억원을 책정했고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에 2%가 증가한 4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하였습니

다. 또한 金融 構造調整을 위한 64조원의 국·공채이자지급 예산으로 7조7,866억원을 투입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하여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부양은 어디까지나 기업부분의 투자가 살아나야지 財政支出을 늘리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의 극심한 內需沈滯주된 원인이 되겠지만 시중에는 전혀 돈이 돌지 않고 있고 기업이 부도직전에 허덕이고 있다보니 이것이 景氣沈滯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에는 여유자금이 남아돌면서도 기업에 자금이 융통되지 않는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기가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고생들 했지만 시간만 끌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보니 은행에서는 어떤 기업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쉽게 기업에 돈을 내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은행에다 대고서 기업에 대출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대 그룹에만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政策의 信賴性이 상실되어 있지 않나, 그런 데에 원인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가 개입해서 부실기업 정리에 나설 것이라면 하루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信用梗塞 回復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 퇴출시킬 기업은 빨리 퇴출시키고 살릴 기업은 빨리 살려서 은행이 돈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서는 신용경색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金融構造調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朱鎮旻 先輩委員長님께서 자세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따 답변시에 재정경제부장관님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SOC投資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社會間接資本 豫算은 올해보다 5% 늘어난 12조7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SOC투자로 약 55만명의 고용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SOC사업의 높은 고용유발효과와 경기진작효과를 감안할 때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 중에 집행해서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자칫 무리한 집행으로 졸속 不實工事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SOC투자와 관련해서 경부고속철도 인천신공항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등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 완공위주로 지원하고 예산을 1/4분기에 집중배정하기로 했는데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財政赤字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金台植 委員님께서 자세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본위원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豫想 財政赤字幅은 22조1,000억원으로 GDP대비 5%, 일반회계 예산대비 27.4%에 달하고 있습니다. KDI 연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한 재정적자는 최소한 2006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번 적자재정 편성을 하면 단기간에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은 저보다도 장관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정적자 편성에 따른 국공채 발행으로 이자부담이 늘게 되고 막대한 이자를 재정에서 갚아 나가려면 또다시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미국이나 몇몇 유럽 국가들이 적자재정에서 탈피하기까지 엄청난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향후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歲出減縮努力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정균형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의 效率化 方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特別會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 특별회계는 98년 현재 4개의 기업특별회계와 18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22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원칙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이 豫算統一의 原則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정부의 특정사업에 대한 재정수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둘째, 예산 집행기관의 행정적 자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國家豫算에서 特別會計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재정통제가 어렵고 사실상의 예산팽창을 가져올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보완적인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회계예산이 중앙정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90년도에서 93년도까지 30%를 유지하다가 94년도에는 43.9% 99년도에는 44.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순계기준으로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특별회계예산의 비율을 보면 90년도에는 40.1%에 불과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99.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규모면에서 特別會計는 一般會計와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이처럼 비대해지고 있는데 따른 전반적인 검토와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유사한 목적과 기능인 特別會計와 基金을 통폐합하고 사업의 특정성이 결여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재정운용상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경부장관께서는 22개 特別會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稅負擔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歲入豫算案을 보면 국세에서 직·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접세가 41.4% 간접세가 58.6%로 98년도에 비해 직접세는 4.2%가 줄어든 반면 간접세는 같은 비율만큼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國稅에서 間接稅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IMF사태이후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그 이전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의 기반인 中産層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득격차의 확대는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안정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해서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所得隔差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失業對策豫算과 관련해서 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國民年金基金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鎭載 元裕哲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金光元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元委員 한나라당 영양·봉화·울진 金光元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지독한 감기가 걸려서 며칠째 시달리고 있는데 아마 약을 잘못 먹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영똥하게 말도 잘 안되고 귀도 멍멍하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IMF를 겪고 한 1년이 지났는데 혹시 우리 경제 체 몸처럼 약을 잘못 먹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지, 외국에서는 우리 경제를 또다른 한국의 제2의 위기가 오고 있다, 한국경제는 나선형으로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혹시 오진 때문에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짚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GDP 성장율을 2%로 봐서 歲入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런 낙관론이 아닌 0% 정도로 봐서, 제로로 봐서 예산을 편성하고 1조5,000억 정도를 삭감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모험을 감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재경부장관께 짚막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부장관, 북한에 있는 핵문제입니다. 우리 당의 金德龍 議員이 금창리에 핵이 있다고 그랬고 또 이 핵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조야에서는 영어로 표현하면 바디 오브 에비던스(body of evidence), 또 컴펠링 에비던스(compelling evidence), 서브스텐셜 에비던스(substantial evidence) 이렇게 했고, 카트먼 특사는 분명히 핵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의심스러우나 명백한 증거 없다' 그러면 명백한 증거는 뭐냐? 인공위성이 사진 찍고 뭐 한 것도 못 믿는다면 명백한 증거는 가서 흙을 파 가지고 시험을 해서 확증을 잡는 이외에 다른 명백한 증거가 있느냐, 미국이 얘기하듯이 시 비짓(see visit) 관계로 확인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정부가 이 햇볕정책 때문에 핵문제에 대한 너무 비밀주의가 문제 되는 것 아니냐, 이제라도 핵문제는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햇볕정책을 고수할 경우에 미·북이 우리를 제외하고 어떠한 합의 가능한 우려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미 공화당의 압력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이 5월까지 핵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될 때 제네바협상의 파기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면 햇볕정책의 한계가 바로 우리에게 내년 5월경에 또다른 위기설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국내문제입니다. 지금 安保의 不感症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느냐, 제가 지방감사를 하면서 여러 군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간첩 잡겠다고 하는 안보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 간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다행이지만 국민의 정부 수립 후에 간첩 잡았다는 얘기 좀체로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장학금 주고 실업대책 세우는 그것밖에 사회안전망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건물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국내에 간첩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지난 8월15일에 준법서약서 쓴 未轉向 장기수 풀어놓고, 그 외에 요새 퇴출 당한 실직자, 막 가는 노숙자, 한총련, 강성노조를 전부 합법화 안해 줘니까. 제도권 안에 합법화 하는 강성노조, 거기다가 취직 못한 既 졸업 대학생, 내년 봄에 졸업할 대학생, 이것 인턴 사원 취직시킬 대책도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력들이 연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노동부에서는 실직자를 합법적으로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만 내버려 두어도 될 것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위험한 세력을 지금 집단화시켜 갑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력이 편안한 세력입니까? 이 세력이 연대해서 폭발할 때는 이것은 新막가파입니다. 무얼로 이 세력을 막아냅니까. 사회안전망? 처음부터 터져 자빠집니다. 그것 가자고는 안됩니다. 거기다가 소위 우리 사회 안에 최근에 막 늘어나는 조직폭력배라는 사람들이 이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들은 러시아의 신무기로 간단하게 무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력들이 내년 봄 위기 때 어떻게 갈지 정

말로 우려됩니다.

누구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햇별도 좋고 금강산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문제를 걱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영똥한 예산들 다 모아서 社會安保網에 대한 강력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 관계장관님들께 건의드리고 또 安保에 대해서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第2建國問題입니다.

제2건국의 산실, 행자부장관 계시는지 모르지만 행자부 아닙니다. 이 산실이 大統領諮問政策企劃委員會입니다. 이 위원회가 금년도에 여덟 차례 보고서를 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崔章集委員長이고 거기에 간사가 한상진 교수 황태연 교수 이렇게 3인방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께 8회의 보고서를 냈는데 두 번은 직접 냈고 여섯 번은 서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번 금년도 8월7일에 낸 것은 8·15경축사 草案인데 여기에 제2건국의 태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전부 다 제2건국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중에는 제2건국 이론의 작업시안, 제2건국의 기초자료실검프로그램시안, 제2건국의 참여방안, 비전과 전략, 대전환과 개혁방안, 이 대전환과 개혁방안이라는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대전환과 개혁방안에서는 2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地域主義 政黨體制를 극복하고 전국적 국민정당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선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해서 정치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타파하고 이념과 정책에 기반한 전국적 국민정당 및 체제, 경쟁적 정당체계를 갖춘다 이렇게 해서 제2건국의 6대 과제에다가 政治基盤을 만든다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한 지난 9월24일자 새정치국민회의 연수 때 발표하려고 했던 황태연 교수의 논문에 나타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이 논문내용이 제2건국운동과 국민회의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제2건국운동과 政黨名簿式 政黨制度라는 두 개의 무기를 갖대고 해서 內閣制를 방지하고 自民聯 퇴출에 대비해서 제2기 전국정당의 안정세력을 확보하는 등 운동의 사명과 방향을 명

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내에는 제2건국추위를 설치하고 당조직을 총동원하여 국운을 걸고 제2의 창당하는 각오로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건국운동이 무엇인지를 거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 바탕위에서 10월1일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를 대통령자문기구로 만들고 그 대통령령 10조에 의해서 시·군 지방에다가 조례 준칙을 시작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만명의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첫째로 나타나는 것이 大統領諮問政策企劃委員會가 만들어진 이후에 금년 들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제2건국에 대한 리포트를 여덟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제2건국에 대한 대통령자문기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10월1일 만들어진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또 諮問機構입니다. 그러면 제2건국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두 개의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뭘니까? 실질적으로 자문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자문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 기구는 자문기구이고 한 기구는 자문기구를 변장한 推進機構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 사항에 대해서 두 개의 대통령자문기구를 만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법 체계를 변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명백히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행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大統領 諮問政策企劃委員會 崔章集委員長과 간사인 한상진, 위원 황태연, 이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람들인데 崔章集 위원장은 소위 '民族解放戰爭,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누군가 하면 자문위원장으로 長官의 禮遇를 받고 있고 그랜저승용차도 타고 전속기사도 있고 사무실, 업무추진비 또 행자부 공무원들을 직접 데려다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엄연한 공인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공인으로서 상당히 문제되는 발언들을 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런 분이 대통령자문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검증은 받아야 된다고 보고 國務總理가 직접 나서서 검증을 하고 검증결과에 따라서 解任 등의 조치를 大統領께 당연히 건의하는 것이 총리의 임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대통령자문기구가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문기구 하나는 推進機構인데 자문기구는 民間委員들로 구성되어서 싱크 탱크입니다. 하나는 추진기구로서 실질적인 집행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자문기구가 公務員들로 구성된 집행기구를 끌고 가는 아주 이상한, 그러니까 첫 번째 정책자문기구는 제2의 정신적 청와대비서실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구는 그 리모콘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構造調整하느라고 야단인 이 어려운 경제판에 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없애야 되고 없앨 것을 대통령께 당연히 건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豫備費를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만 금년도에 38억2,300만원인가를 썼습니다. 임대비가 약 20억 들어갔고 나머지는 집기, 전화, 사무실 인건비를 썼다고 하는데 앞의 위원회도 약 8억을 썼습니다. 적선동 어디에 있는 빌딩 4, 5층에 같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지 거기다가 내년도 예산을 16억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는 20억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작년도 예비비 38억은 어느 豫備費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내년도 예비비 國會同意에 문제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건국 추진과제 추진기간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는 금년말까지입니다. 조직을 완료한다는 것이고 중기목표는 내년, 장기목표는 2000년 이후로 잡고 있는데 2000년이 바로 16대 선거의 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단기·중기·장기계획이라는 것이 1년, 2년내지 5년, 5년 이상이 장기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하필 이 第2建國運動만은 단기를 금년, 중기를 내년, 장기를 2000년까지로 보아서 3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이것이 2000년 선거와 관련이 없는지 행자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장관은 人事를 총괄하는 주무부장관으로서 법에 근거해야 되는 것을 大統領令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條例를 따와서 전국 조직을 만드는 막대한 기구를 만들었는데 명백히 法律違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 주무부장관으로서 여기에 企劃團長으로 들어가서 전국의 제2건국 운동을 공무원 총동원으로 망라해 나가고 있습니

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에서 이 책에서 밝혔듯이 이것이 제2창당의 준비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자부장관은 제2창당에 대한 실무단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차라리 그것을 하려면 장관을 그만두고 나가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용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地方의 條例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통과가 안 된 지역은 장관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요?

내년도 예산에 推進委의 예산 20억, 一般民間團體支援 예산에 150억 이것은 명세가 밝혀지지 않았고 어디로 갈 돈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액 삭감하시고 그 다음에 대졸자를 고용해서 행정서비스요원으로 활용할 600억 예산도 전액 삭감해서 제가 冒頭에 얘기한 이 나라의 安保網에 쓰는 것이 이 시기에 타당한 豫算運用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재경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업부서도 아닌 예산청에 失業對策 豫備費 1,00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해당부처 예산에 올려주는 것이 예의 같은데, 예산청이 집행기구도 아닌데 거기다가 돈 1,000억을 올려놓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고 아예 해당부처 예산에 올려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地方交付稅制度에 대해서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3.27%를 가져와가지고 그 중 11분의 10은 보통교부세라고 해서 일반용으로 다 쓰고 나머지 11분의 1인 9%는 특별교부세로 보통 육칠천억 되는데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특별교부세 때문에 행자부장관 앞에 가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총괄로 국회심의를 받지 개별적으로 심의를 안 받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施策에 30%, 財政補填에 20%, 災害對策에 10%, 地域開發에 20%, 特定懸案事業에 20%를 배정해서 쓰는데 이 돈은 가져간 다음에 연도별로 쓰기 때문에 국회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가 버립니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고 연말결산에도 총 어디에 썼다는 것은 나오지만 어디에 썼



다는 자세한 내용은 결산에도 나타나지 않는, 국회 심의에서 배제된 돈입니다. 이렇게 돈을 써도 좋은지?

이 중에서 財政補填이라든가 事業施策費로 나가는 돈은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봐들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것은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은 배제시켜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군단체간 전국체전을 한다, 뭐 한다 해서 보전하고자 하는 20%와 또 특정현안을 하기 위한 돈 20%가 있는데 特定懸案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과거에 행자부의 자의로 또 지역구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순시 등 어찌고저찌고 해서 쓴 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부세를 직접 다루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마는 이 돈은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됩니다.

交付稅는 누구 돈입니까? 地方自治團體의 돈 아닙니까? 행자부는 다만 관리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해 줄 사람이 딱 떼어놓고는 적당히 나누어주다 보니까 행자부의 권한만 막강해졌고 또 시·군에 얼마 배정했느냐는 나타나지도 않고 불투명한 豫算運用으로 일관해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들이 이 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언젠가는 행자부에서 다 갚아줄 것 아니냐 하는 막연한 의존심만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예 연초부터 다 드러내 버리고 꼭 필요한 것, 재해가 났을 때 地方費로 부담 못하는 부분 정도의 災害對策費라든가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행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영국과 일본 같은 데도 9%가 아니고 오륙%로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소위원회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特別交付稅가 400억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남긴 사유도 궁급하고 이것을 연말에 어떻게 쓸 것인지, 연말로 넘어가면 지방에서는 전부 다 移越豫算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또 방만한 예산이 되는데 이것을 아예 不用으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蔚珍郡立病院 建立을 위해서 최근에 35억의 특별교부세가 나갔습니다. 이 교부세는 어디서 나갔는지, 도대체 연말에 35억씩 잘라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무슨 근거로 이런 큰 돈을 잘라주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郡립병원은 안 됩니

다. 郡에 의료시설을 주어서 郡이 직접 경영하는 郡립병원을 만들어야 하는지, 수지전망이 있는지, 郡이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의료체계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郡守가 병원 짓겠다고 돈 달라고 하면 막 내주고 대통령과 독대하면 돈을 막 내주고 아직도 원시적인 사고에 의해서 예산운용을 해야 되는지, 행자부는 방만한 예산운용을 계속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병원에 돈이 많이 드는데 기왕에 35억을 주었으면 앞으로 200억이 되든 300억이 되든 총예산을 전부 다 교부세로 주실 것을 간절히 요구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넘겨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趙洪奎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金鎮載 趙洪奎 委員, 말씀하십시오.

○趙洪奎委員 약속 중에 시간약속이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시간약속은 서로 지키기로 하고 저희 黨에서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우리 黨 소속 존경하는 張乙炳 委員님께서 쌀생산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도입문제등을 서면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정부의 경제전망등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속기록에 登載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鎮載 정부측에서는 張乙炳 委員님, 趙洪奎 委員님 두 분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나라당의 朴鍾根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根委員 한나라당 대구 달서 갑지구 朴鍾根 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中期財政計劃과 中期財政의 均衡回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赤字財政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정의 적자가 국공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작년, 금년 합쳐서 구조조정비용으로 거의 예산규모에 맞먹는 80조 정도의 적자요인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적자재정의 굴레에 빠지면 굉장히 장기적이고 만성적으로 회복하기가 어렵고 균형을 유지

하기 어려운 것이 외국의 예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비용이 과연 어느 정도에서 그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도 엄청나게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또 이 비용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크게 봐서 金融機關의 構造調整, 또 금융기관은 기업으로부터 넘어오는 不實의 費用 이것이 200조에 달할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이것보다 훨씬 넘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金融機關의 倒産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년, 금년과 같이 豫算支援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정부가 작은정부실현을 위한 계획을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公企業의 赤字는 굉장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基金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엄청난 負債를 안고 있습니다. 약 25조에 달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투자 출자기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정부출자가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는 정부출자기관이 안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각 기관들이 모두 不實化되고 나면 總體的 政府의 不實化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보면 1985년에 재정적자가 2,119억불에 달해서 국채의존도가 총 재정의 22%를 상회하는 수준에 오른 일이 있습니다. 또 경상수지적자도 국제수지쪽의 이야기입니다, 1,178억불에 달해 가지고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財政均衡法이라는 것을 법제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公債의償還·均衡豫算및緊急赤字管理法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장기계획을 앞으로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中長期財政計劃을 마련하시면서 미국과 같이 공채상환을 정하고 또 균형예산을 회복하는 수단을 명시하고 그리고 국가의 부채를 특별관리하는 관리법을 일괄적으로 만드실 용의가 없는지 이런 법은 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최근에 균형예산을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公企業의 不實한 經營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豫決委를 하루빨리 年中 常設化시켜 가지고 소위원회별로 이것을 구성해서 예산심의나 집행을 事前的으로 간섭하는 것은 당분간 안 한다 하더라도 事後的으로 결산심의만은 심도있게 해서 경영의 문제점을 속속히 밝혀내는 기능을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豫算審議의 死角地帶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의 제도적 장치에 대해 정부에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企業의 또 金融機關의 構造調整 費用을 자유롭게 생기는 대로 정부가 갚아주는 형태로 생각한다면 한정 없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不實化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외국의 일류 상업은행에서 內規로 또 자기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에 의해서 완벽하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금융의 역사가 짧아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시도한 은행에서도 과거에 官治 金融 體制하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企業의 構造調整法이라 하는 것이 꼭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중장기적 재정의 안정적 균형과 그리고 구조조정 비용을 축소시키는 문제 또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문제 국회심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위원장으로 계시는 陳 稔 씨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鎮載 이상 오늘 예정된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정부측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停會하였다가……

○尹鐵相委員 제가 서면질의를 여섯 개 정도 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鎮載尹鐵相 委員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정부측 답변준비를 위해서 停會하였다가 오후 6시30분에 續開하여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鎮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정리가 완료되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국무총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총리께서 답변하실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金鍾泌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밤늦게까지 노고를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에게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관계장관이 대신 답변을 드린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그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朴鍾根 委員께서 정치, 정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언론들의 구조조정이 기업이나 금융같은 민간 부문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부문에 改革을 추진해야 한다는 朴委員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公共部門은 조직 그리고 인원감축, 정년단축, 과도한 퇴직금지급…… 이런 것을 모두 시정을 하고 經營合理化를 기하고 民營化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진행중에 있는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진단결과가 내년 2월 말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정부기능 재조정과 민간전문가 영입 등 경영마인드 도입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정치권과 언론 등의 분야도 能率과 責任原則이 자리잡도록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가적 난국타개를 위해서 이러한 분야에서 좋은 결실이 조속히 맺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모든 정성을 모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기업과 각종 기금의 예산통제와 사후관리가 부실하므로 豫決委의 연중 常設化가 필요하고 감

사원의 회계검사 기능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公共基金의 경우는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회계연도 말에는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기타 기금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주무부처가 승인 그리고 업무감독을 하고 있는데 個別法에 의거해서 결산보고서를 감사원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공기업과 각종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의 주요과제로 생각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豫算決算委員會의 常設化 문제는 그간 장단점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결정을 해주실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監査院의 會計檢査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주 결산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감사원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憲法改正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柳在乾 委員께서 經濟危機 責任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본회의에서도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위기 책임과 관련해서 이미 일부 관계자가 사법처리중에 있고 다음 달에 국회에서 개최될 經濟聽聞會를 통해서 위기발생 원인과 책임이 소상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무총리로서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李麟求 委員께서 大田엑스포紀念財團法 廢止와 관련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전시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大田엑스포紀念財團廢止法律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뒷받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百濟文化圈 開發計劃期間을 2005년까지 연장하

고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충청남도과 전라북도가 사업기간을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연장하고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의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 변경안을 관계부처에 제출해서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의 협의·검토가 끝나는 대로 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國土建設綜合計劃審議會를 개최해서 계획변경안을 심의 확정하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소망스러운 역사재현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源馥 委員께서 정부의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효율성 분석 그리고 사후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財政運用的 效率性を 提高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투자성과를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점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늘릴 부문과 줄일 부문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정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도 낭비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重點管理對象事業을 선정하고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종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다짐을 드립니다.

農漁村構造改善事業資金 42조원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낭비되는 바람에 농가부채는 부채대로 유예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WTO체제 출범에 대비해서 지난 92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과 생산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융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부실시공, 사업비 유용 등의 부작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農漁村投·融資事業의 效率性を 높이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으

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성과 집행과정 등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하고 농업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실경영체를 과감히 퇴출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지원을 위한 보조예산은 단계적으로 용자로 전환하고 사후관리 그리고 평가를 강화해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農漁村 競爭力向上에 직결되어서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長燮 委員께서 조직을 정비해서 실질적인 構造調整을 하고 국민이 바라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이 바라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吳委員님의 말씀에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정부도 이미 公共部門 構造調整을 위해서 조직개편, 인원감축, 정년단축, 민간위탁, 민영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부진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실질적인 개혁이 진행중이며 정부조직에 대한 經營診斷이 끝나는 내년 2월이후에는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도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무보직 공무원의 대기기간 단축 등을 추진해서 공공부문도 국민과 함께 실질적인 고통을 분담하는 構造改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應善 委員께서 政府出捐研究機關을 총리산하로 통합할 경우 주무부처의 의견전달이 곤란하게 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대통령 지시나 총리 지시로 自律性を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연구의 자율성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소속관계를 해소하고 聯合理事會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李委員께서 지적하신 주무부처의 의견반영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안 제정시 주무부처에서 총리실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단단히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이 창의와 열성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出捐研究機關 運營

體制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洙 委員께서 地方財政 運用에 있어서 과다한 부채등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李委員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地方自治團體의 負債가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고있는 부채는 총 18조5,584억원, 98년6월30일 원금기준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런 수준입니다마는 대부분이 장기저리의 우량채무이고 또 많은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자체상환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부채를 줄여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장기저리의 財政融資特別資金을 1조1,000억원으로 증액하고 公共資金管理基金 5,000억원을 신설해서 지원했습니다. 99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地方債 引受資金을 확대 지원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방세수가 감소되고 의존재원 또한 줄어들어서 지방재정 형편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근본적인 地方財政의 擴充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상향조정이나 지방양여금 재원확대 등 국가로부터의 이전수입 증대방안과 지방세목의 신설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李委員께서 地方交付稅率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중앙정부 역시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당장 결론을 내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서 관계부처간에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심도있는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財源配分과 관련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한 재원이전에 앞서서 중앙행정권한, 그리고 기능의 지방이양과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관련 민간전문가들에게 硏究用役을 의뢰하여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확정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國家的 統合성과 地方의 自律性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기 본지침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채발행승인제도

의 운영개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있는 운영, 재정투융자 심사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제고시켜서 아울러 지방재정의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재정분석진단제도의 운영을 강화해서 財政運用의 健全성과 效率性을 확보하고 自治團體의 財政危機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鄭亨根 委員님께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公共部門 改革보다 民間部門에 責任과 義務를 떠맡긴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豫算增加率은 6.2%로서 경상성장률 4.2%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내년에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SOC, 중소기업 그리고 실업대책,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지출 등 불가피한 재정을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構造調整이 금융과 민간부문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부문도 조직개편, 인원감축, 정년단축, 민간위탁, 민영화, 민간전문가 활용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결코 민간에만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2건국의 概念은 무엇이고 제1건국은 언제까지라고 보는가, 제2건국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崔章集 정책기획위원장이라면 이 운동의 목적과 성격은 어떤 것인가, 제2건국 운동이 16대 총선과 장기집권을 대비한 全國 政黨化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대정부 질문시에도 여야 여러 위원들께서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第2의 建國運動은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이겨내고 당당하게 일어나 새로운 세기를 활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國政의 總體的 改革이자 汎國民의 生活改革運動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세간에서는 이 운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제2건국을 50년 전의 정부수립과 對立的인 概念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고 온 국민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그런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다함께 분발하자는 意志의 表現으로서 제2의 건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운동을 일부에서는 정계개편이나 신당창당 등 政治的인 問題와 관련시키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전적으로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운동을 그렇게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누차 강조하신 바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제2의 건국운동을 崔章集 정책기획위원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 중지를 모아서 이 운동을 이렇게 조직을 했으면 해서 내놓은 안입니다.

제2건국위원회는 추진위원회 427명, 상임위원회 59명, 추진기획단 29명이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崔章集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 59명중의 한 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第2建國委의 運營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 상호간의 토론과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국민제안 등 중지를 모아서 착실히 진행시킬 수 있도록 준비들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亨根 委員께서 국민회의가 전국 지구당조직을 가동, 일선 행정기관의 개혁추진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공무원을 감시 감독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違憲的인 行態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당은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행정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노력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정당이 일선 행정기관의 政策執行過程에 직접 관여하거나 감시 감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金台植 委員께서 정부개혁의 의지, 속도 그리고 금융개혁과 5대 재벌 빅딜에 대한 총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委員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金融, 企業, 勞使, 公共部門의 전반적 구조개혁이 절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5대 계열의 소위 빅딜도 7개 중복투자업종의 교환방식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도 기구축소, 인원감축, 정년

단축, 민간위탁, 민영화 등의 방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부문의 구조조정이 미진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가급적 각 부문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금융등 정부의 정책수단을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햇별정책에 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총리 인식에 대해서 말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對北 包容政策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나감으로써 화해 협력 공존 공영의 남북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야말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은 단시일 내에 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우며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간다면 비록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武力挑發 意志를 약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또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해서 確固不動하고 소신있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위원님들 질의에 소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운동은 총체적 국정개혁을 통해서 國難을 극복하고 21세기 국가발전에 대비하자는 先進跳躍運動으로서 21세기 우리가 세계 중심무대에 우뚝 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국민 모두가 동참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부 잘못 인식된 점이나 미흡한 점을 성의껏 보완해 나가면서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各界各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하는 국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朴源弘 委員께서 제2건국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이에 대해 예산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모든 국민운동은 밑으로부터 자발적인 참여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신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인식을 달

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오해나 걱정을 사지 않도록 정부에서 사려깊게 해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또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제2건국운동은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서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해 보자는 범국민적인 개혁운동으로서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호응과 참여없이 계속될 수 없고 또 성공할 수도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어느 국민운동이나 초기단계에는 폭넓은 참여와 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官의 支援과 협력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부도 國民運動이 그 순수성을 잃으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이 본격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推進委員會를 전국적인 체제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 것은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은 물론이지만 지방을 망라하는 범국민적인 추진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民·官을 망라한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설 때 그 성과가 크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운동의 전국적인 지원기구로 이것을 구성한 것이지 위원회가 特權集團化된다는 소위 國政弘報 前衛隊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東周 委員께서 낙동강 수질개선대책과 부산·경남지역의 水資源確保對策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서 총 2조9,633억원을 투자하는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정부는 현재 낙동강수계에 대한 科學的인 基礎調査를 실시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책을 보완·발전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맑은 물로 만들어 놓을 작정입니다.

대책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47개소, 분뇨처리장 7개소 등 98년12월까지 투자실적 1조 3,311억원을 투자해서 전체의 45% 이상 성과를 낼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경남지역의 多角的인 用水供給方案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경남지역 수자원조사를 실시중이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인 용수공급대책을 수립해서 遺漏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京釜高速鐵道 工事區間 調整問題와 부산교통공단 이관문제 그리고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구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金委員께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답변으로 같음할까 합니다.

權琪述 委員께서 農漁村構造改善事業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99년 예산에 제2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역시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劉容泰 委員께서 정부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총리의 견해를 또 물으셨습니다.

최근 經濟的 어려움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과학기술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9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시급한 構造調整, 失業對策 등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연구개발예산을 크게 늘려 나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회복과 함께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에서도 과학기술투자를 크게 늘려나가도록 독려해 나갈 생각입니다.

金光元 委員님께서 근로자, 실업자, 학생 등 소외세력의 연대로 인해 내년에 위기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社會安全網에 대한 대책과 함께 예산확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근로자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이는 構造調整 過程에서의 필연적인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金委員께서는 근로자와 학생들의 연대로 인해서 위기가 우려된다고까지 걱정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들의 勞學連帶 움직임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라고는 지금으로서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차례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적절한 대처로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들 소외세력의 동향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合法的인 集會나 示威는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마는 불법파업이나 폭력시위 등에 대해서는 公權力이 엄정히 대처

할 것입니다.

社會安全網을 위해서 예산은 관계기관에 배정된 관련 예산을 效率的으로 執行해서 社會안전 확보에 차질없이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金光元 委員께서 崔章集 政策企劃委員長에 대해서 총리가 직접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임등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崔教授의 논문내용들을 아마 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총리가 특정인에 대해서 직접 검증하기가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金光元 委員께서 정책기획위원회와 제2건국추진위원회 중 하나의 폐쇄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와 이 조직의 豫備費 使用根據와 내년도 豫算의 增額 要求가 옳은지 물으셨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국가의 중장기 발전목표를 설정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주요 정책에 관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民主主義와 市場經濟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와 같이 두 위원회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관한 諮問機構라는 점에서 서로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문의 대상과 범위가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양 기구가 각각 다른 규정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기관의 사업비를 豫備費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들 기관이 확대 개편, 그리고 신설되었기 때문에 조직운영 그리고 기본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豫備費로 支出하게 된 것입니다.

來年度 豫算을 增額 要求한 것은 조직의 활동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내용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鎮載 權琪述 委員님 말씀하세요.

○權琪述委員 총리께서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농림부장관에게 답

변을 들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예 총리께서는 農業, 農村, 農業人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셨던 것으로 본위원은 항상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때 집권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대통령께서 第2段階 農漁村構造改善事業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리고 또 農家負債도 蕩滅해 주시겠다고 98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9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農林豫算이 7,200억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99년도 예산안에 4,600억씩이나 또 削減이 되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第2段階 農漁村構造改善事業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할 예산은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農民과의 約束을 파기하는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과의 약속도 지켜야 하고 또 농업의 중요성은 총리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정말 농업이 발전하지 않는 나라는 부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 농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미 만이지만 직접 대통령이 외국에 미국 농·축산물을 팔러 다니시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 農業의 重要性을 인식하고 계시는 총리께서는 이 公約事項을 지키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총리께서 소신, 거기에 관계되는 총리의 견해, 구체적인 일반사안이 아니고 중요한 그 말씀을 본위원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농업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소신만 한 마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國務總理 金鍾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당시의 상황과 그후 저희가 처음으로 赤字豫算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는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마는 결코 그렇다고 그래서 農村의 近代化 發展을 위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權琪述委員 그러면 총리 얘기 꼭 믿겠습니다. 農業發展意志를 각 정책에 반영을 좀 시켜주십시오.

○國務總理 金鍾泌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鎮載 全錫洪 委員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全錫洪委員 의사진행 겹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금년까지 연속해서 세 번째 예결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예는 어떻게 되었고 하니 총리님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첫날 질의, 이틀 질의, 3일 질의 총리께 질의한 것은 전부 한 번에 묶어서 마지막 여기에서 오늘과 같이 답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서면답변해 주시라는 것은 장관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이지 총리에 대한 질의를 장관등이 대신 서면답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경우는 두 가지 총리께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第2建國에 대해서 다섯 꼭지를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행자부장관이 양해해 주신다면 하고, 와서 보니까 여기에다가 갖다놓았어요. 답변이 없어요. 어제 밤에 총리에 대한 질의까지 서면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제가 麗川産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총리께 질의해서 그 일부 문제가 해결되어서 총리께 질의했지 장관께 질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는 서면도 없고 답변도 다 빠져 버렸어요.

그래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고 총리께 대한 질의는 종합적으로 마지막 날 오셔서 첫날 한 것까지 전부 합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가 어떻게 하셨는지 전혀 안 되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빠진 부분, 그리고 여기 행자부장관이 서면으로 대신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아마 즉석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은 좀 들으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본회의에서도 그러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총리께서는 第2建國推進委가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政府組織法 제4조 자문기관, 이에 의해서 大統領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자문기관인데 大統領令 제10조, 아까 제2건국위 추진규정입니다.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내려보냈어요. 그것이 되고 하니 도에다 제2건국위추진기구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시·군에는 또 이에 준해서 만들어라. 바로 근거는 政府組織法 제4조 자문기관입니다. 이 근거에 의한 것이 대통령령인데 郡은 그 大統領令 제10조에 의해서 시·도까지 전부 만들어라, 거기에 추진반까지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 諮問機關 아닙니다. 執行機關이에요. 全國化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大統領諮問機關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것이 10조에 大統領令 따로 만들어 가지고 條例로 전국화시키는 것은 법률로 만들어야지 이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합니다 하는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또 지금 각 지역에 공무원들을 보면 구조조정해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시·도에 보면 2000년말까지 7,715명 그 다음에 시·군의 경우에 2만7,335명 물론 이중에는 名譽退職으로 나간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인력이 남아 뚝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6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행정정보조를 두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그만 삭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생산적인 데 돌려쓰자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150억 보조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이나 지금, 나중에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마는……

(「새로 질의를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아니에요.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질의가 아니에요. 얘기하면 가만히 좀 계세요.

(「능들있게 합시다. 뭘 그렇게 길게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계세요.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委員長 金鎮載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全錫洪委員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안 되시면 나중에 해주시고요. 바로 즉석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각 지방에 조직화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麗川 産團問題 이 문제는 저도 지금 자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작년도에 5억원 지원해서 기본설계했습니다. 기본설계했으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 주관부처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질의를 두 번씩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두 번씩이 아니라 안 나와서 그래요. 왜 그래요?

○國務總理 金鍾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자세한

것을 나중에 보고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鎮載 權哲賢 委員, 의사진행입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權哲賢委員 그렇게 바쁘니까? 뭘 간략하게 간략하게 야단들입니까? 국사를 논하는 중요한 시간에 매사를 간략하게 간략하게 정말 참 답답하네요.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재촉하지 마세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한 답변을 하나도 안 하시고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議事進行發言을 얻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전혀 다른 분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바쁘기로 소문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을 3박4일간이나 왔다 간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의 일과 비교해서 무기사찰을 거부한 곳에 클린턴이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인데 북한의 핵무기, 핵시설같은 것을 확인하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햇볕론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전선도 시찰하고 3박4일간이나 머물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그래서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보인 것이 혹시 아니냐 그래서 진정한 클린턴 대통령의, 정말 역사상 처음 있는 3박4일간이나 한국을 방문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나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鄭亨根 委員보다 제가 먼저 질의를 했었는데 당을 통해서 행정기구를 감시·감독하는 문제 이런 것은 북한과 같은 全體主義國家에서나 볼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당 감시체제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에 퇴행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중국의 공산당이나 북한의 노동당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한국과 같은 이런 民主主義國家에서는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국회나 지방의회같은 곳을 통해서 행정부를 감시·감독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있어서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답변은 鄭亨根 委員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답변을 듣는 순간 굉장히 지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께서 정당은 정책을 도출해 가지고 그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행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하는가를 감시·감독하는 기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총리의

견해가 굉장히 위험함을 제가 느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당이 만든 정책을 행정부가 잘 하고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감시·감독하는 기구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를 통해서 지방의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吉昇欽委員 그것이 뭐가 위험해?

○權哲賢委員 누가 그랬어!

○吉昇欽委員 내가 그랬어, 내가!

○權哲賢委員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답변은 총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정당이 행정부를 직접 감시·감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吉昇欽委員 정당이 왜 그것을 못해?

○權哲賢委員 직접 국회를 통해서 지방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예요. 알만 하신 분이 왜 그래요?

○吉昇欽委員 뭐가 위험해요? 정당이 왜 그렇게 그것을 못해!

○權哲賢委員 내가 총리한테 위험하다고 물어본 거예요. 그 쪽에서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吉昇欽委員 당신이 정당을 뭘 알아!

○權哲賢委員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委員長 金鎮載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하세요.

○權哲賢委員 세 번째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9월14일 유종근 전북도지사가 새만금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하는, 극히 일부의 환경론자들은 環境運動을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쌓아 나가는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환경문제를 핑계 삼아서 새만금사업을 저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전북이 아닌 인근 다른 지역사람들로서 전북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地域感情을 어떻게 하든 타파해 가지고 국민화합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차체에 있는데 이 정권의 실세라고 하는 사람이 또 특히 한 도의 도지사가 새만금백지화를 위한 시만위원회가 결성되고 있고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부 정치꾼으로 몰아 붙이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지칭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지역감정을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이런

발언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國務總理 金鍾泌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 것은 원래 중동사태가 그렇게 다급하지 않았을 때, APEC에 참가하고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 나라하고 방문하게끔 되어 있다가 사태가 위급해지니까 방문하기가 어렵겠다 하다가 일단 후세인이 案을 승복을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예정대로 일본, 한국방문을 하겠다 그래서 온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와서 대통령과의 對北問題 하나도 여기에 위화가 있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 이것은 그렇게 소홀히 다룰 수가 없고 아주 엄격하게 진상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을 해서 대처해 나가자 그런 다짐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의견이 달라서 무슨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을 확인하거나 혹은 점검하러 온 그런 성격의 방한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權哲賢委員 총리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후세인의 무기사찰거부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사람인데 북한의 핵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한 클린턴이 특히 核問題에 대해서는 클린턴이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왔는데도 한국을 와서 우리 대통령을 만났는데도 아무런 의견이 전혀 없이 그냥 돌아갔다면 3박4일간 그 말 한 마디하고 돌아갔습니까?

○國務總理 金鍾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그러한 징후가 있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이것이 핵개발을 한다든지 혹은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이제까지 없던 어떤 시설까지 만든다는 그런 확증까지 아직 잡지 않았다는 데서 공동으로 이것을 엄중히 감시하고 대처해 나가자 그랬습니다.

○權哲賢委員 이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인 유화정책을 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지난 번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상당한

액수의 무기를 구입했다고 하는 소문을 미국 쪽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를 언론에 나오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정세 그 다음에 미국쪽에서 더 이상 이렇게 유화정책을 계속하고 북한의 핵시설이 계속 진전된다면 1차적으로는 休戰線에 있는 북한의 포대를 공격하고 2차로는 북한의 폐가를 공격하고 3차로는 평양 근처에까지 공격을 가할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클린턴이 와서 편하게 그 말 한 마디하고 그냥 3박4일 있다가 갔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를 생각할 때 너무 지나친 총리의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國務總理 金鍾泌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와서 異見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이것은 아주 철저히 대응, 대처하자고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黨을 통해서 행정을 감시·감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정당은 責任政治 구현 차원에서 행정의 추진실태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이 一線行政機關에 행정집행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감시·감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權哲賢委員 정당이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행정을 감독 비판하는 기능은 소위 黨政協議會 같은 것을 하는 일반적인 최고 탑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마지막에 하는 것이지 지방에서 어느 당의 하부조직인…… 예를 들어서 사상 갑 국민회의 무슨 지구당이 사상구청을 감시·감독하고 거기에 상시적으로 상주해서 비판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지 않습니까?

○國務總理 金鍾泌 집권당은 행정과 黨政協議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權哲賢委員 아닙니다. 11월22일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민회의 林采正 黨 무슨 개혁추진위원장이 하신 분이 국민회의 黨員을 교육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하는 일을 감시·감독하도록 하겠다고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國務總理 金鍾泌 그것은 아직 듣지를 못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執權黨이 당정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감시·감독하고 이런

것은 정당으로서는 도에 넘치는 일이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權哲賢委員** 예, 없도록 해주십시오.

○**國務總理 金鍾泌**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 전북지사가 아주 망언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듣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만금 간척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제방을 이제 마지막 막을 단계에까지 왔는데……

○**權哲賢委員** 총리님, 그것이 아니고 유종근 지사가 한 말이 새만금을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환경문제를 꺼내는 정치꾼들이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全羅北道 이외의 사람들이다 이래서 아주 地域感情을 조장하는 좋지 못한 발언을 했다 이거예요.

○**國務總理 金鍾泌** 저는 듣지를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를 했다면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알아 보겠습니다.

(장내소란)

○**委員長 金鎮載 李信範 委員**, 간단히 해주십시오.

○**李信範委員** 국감시에도 느꼈는데요. 국회의원이 질의하는데 국무위원이나 총리께 질의하는데 여당 위원들이 자꾸 끼어들면 입법부의 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좀 참으시고 총리께서 답변하시면 되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위원장께서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 23일 월요일 속기록을 보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間諜船 침투사건을 대통령께 능장 보고한 문제와……’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密使疑惑과 관련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총리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총리를 대신한 국무위원이 밝혀달라’ 이랬구요. 끝에 가서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 이랬는데 총리를 대신하는 재경부장관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총리의 답변을 기대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12시간씩이나 늦게 보고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 가능하시다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金鍾泌** 그 문제 그러지 않아도 국회에서 걱정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국방부장관한테 물어보았더니 확정적인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마침 또 그 때 대통령께서 홍콩에서 귀국하시는 비행기상에 계셨고 그래서 실제로 보고드리는 것이 늦었지만 사유는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李信範委員** 수석이 대통령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고를 안 했다면 중요한 내각에서 하는 보고나 장관이 하는 보고를 중간에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총리께서 진상을 잘 조사해서 가지고 報告系統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시겠다고 해야지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임수석의 해임을 총리께서도 건의하실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國務總理 金鍾泌** 대통령께서 국외로 나가 계시는 동안 사실상 國務總理가 代행을 합니다. 저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대통령께서 기상에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제대로 받으실 계제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그러나 총리가 국내에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는 다 점검하고 또 뒤를 쫓고 있었기 때문에 별 간격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李信範委員** 그러면 총리께서는 바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國務總理 金鍾泌** 예,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委員長 金鎮載 鄭亨根 委員** 발언하세요.

○**鄭亨根委員** 총리께서 제가 질의한 제2建國推進委員會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자료가 행정자치부에서 10월26일자 시·도에 내려보낸 지방자치단체 제2건국추진지침이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2건국추진을 위해서 시·도, 구·군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상세한 요령을 내려보냈습니다.

저는 총리께 한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 대통령께서도 이 제2건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민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제2의건국 汎區 또는 郡民推進委員會중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총리께서 한 번 잘 들어 보십시오. 당연직 위원은 구·군의회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그리고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구청 학무과장 등으로 구성하고 또 고문은 구·군의회의 의장, 경찰서장, 교육구청장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게 범국민의 자발적인 국민적 운동이라고 그리고 또 총리께서 21세기를 위해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다른 사람은 좋습니다. 경찰서 경무과장이 관여하고 서장이 관여하고, 이것이 총리께서 온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즉답해 주십시오.

○國務總理 金鍾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기에 있어서 민간주도라고 그러지만 민간인들이 전국적인 그런 민간의 자발적인, 자율적인 운동이라는 것이 최초 발족할 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行政次元에서 支援을 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메카니즘이 정돈이 되었을 때에는 민간이 아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될 수 있게 초기에 지원을 해준다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구상들이 내려 가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절대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도히 개입을 해가지고서 관 주도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鄭亨根委員 총리께서 지금 경찰서 경무과장, 경찰서장 이렇게 전부 당연직으로 관여하는 것은 5년 내에 아니 이게 앞으로 역사에서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金鍾泌 예, 조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鎮載 金東周 委員 발언하십시오.

○金東周委員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총리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많고 보충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국회의 룰을 따라서 또 소위 간사들간의 협의사항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다음에 장관답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與野委員님들, 국회는 국회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을 위원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鎮載 참고로 하겠습니다.

金光元 委員님, 질의에 대한 부분입니까?

○金光元委員 제 답변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총리를 너무 오래 세워두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총리 답변부분에서 대통령자문기획위원회는 대통령께 정책자문을 하는 것이고 제2국민운동추진위원회는 국민운동을 추진한다면서 본위원을 보고 무엇을 잘 모르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제2국민운동의 산실이 최장집이

있는 大統領諮問委員會입니다. 거기서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여덟 번의 보고를 했는데 8월7일 한 8·15경축사 그것도 제2건국 얘기입니다. 전부다가 제2건국에 관한 보고서외에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도 결국 第2建國委員會의 자문역할 밖에 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가 공히 둘다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는 자문위원회가 되고 하나는 추진위원회가 되어서 변태적으로 가고 있다, 합쳐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제질의의 요지였습니다.

총리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金鍾泌 기능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더 좀 잘 검토해서 질의하신 그런 취지에 맞는 기능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尹鐵相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金鎮載 尹鐵相 委員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尹鐵相委員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鎮載 들어가십시오.

○尹鐵相委員 아까 존경하는 權琪述 委員님께서 저희 黨 公約事項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참 500만 농어민의 앞날에 대해서는 누구나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당 대통령후보였던 김대중 후보께서 15대 대통령선거에서 農家負債濺滅이라는 공약을 내걸지를 않았습니까. 輕滅입니다. 남의 당의 공약을 잘 알고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점을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속기록에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국민회의에서 行政府를 監視·監督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갔다고 했는데 여기 저희 당의 간부분들도 몇 분 계시고 저도 매일 간부회의에 참석하는데 그런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 다섯 번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세 번째로 第2建國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고문으로 경찰서장 또 시·군·구의 의장 또 각 시·군교육청의 교육장 등등 해서 참여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허허벌판 위에 새로운 집 짓자면 더 쉽습니다. 그러나 넘어가는 집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집주인이 관리 잘못해서 서까래 썩고 기둥

씩어서, 때로는 변칙운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른 나무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급하다 보면 생나무 가져다가 받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부연설명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과거 平統諮問委員會때 시·군·구 의장들은 평통위원회의 자문위원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에 대해서 시·군·구 의장이 고문으로 참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도 한 번 같이 의견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답변하실 기회가 있다면 행정자치부장관계서는 그런 점들도 같이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여야간에 政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地域感情을 논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金大中 政權이 이 나라 역사의 마지막 배수진이다 하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 모두가 협심 합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위원장, 발언 중지시키세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발언중이에요. 왜 그러세요? 발언중이라니까요.

공약 자체도 잘 모르면서 남의 당 公約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權哲賢委員** 지금 위원간에 틀린 이야기를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尹鐵相委員** 지금 발언중입니다.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權哲賢委員**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尹鐵相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 주셔야 된단니까요. 왜 잘 모르면서 남의 당 공약을 자꾸 얘기하세요. 하지도 않았던 공약을, 그래서 그런 점들을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앞으로 議事進行을 좀 효과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鎮載** 참고말씀으로 하겠습니다.

○**權琪述委員**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鎮載** 權琪述 委員 말씀하세요.

○**權琪述委員** 지금 尹鐵相 委員께서 공약사항이 蕩滅이 아니고 農家負債 輕減인데 탕감이라는 표

현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의 공약이 경감이라면 경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까는 경감이나 탕감이나 다 무게를 낮추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부담을 낮추어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적대적인 의미도 아닌데, 반대의 의미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말꼬리를 잡는 것은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서로 삼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사진행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鎮載**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9시30분에 속개하여 계속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회의중지)

(21시34분 계속개회)

○**委員長 金鎮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짧고 간결하게 요점 위주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는 가급적 11월27일부터 시작되는 部別審査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委員長 陳 稔** 기획예산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심초사 심의하시는 99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포함한 예산수요자 의견수렴에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SOC투자 확대,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보화, 문화 등 미래산업 대비 투자 그리고 저소득 실업자의 기본생계를 보장하여 경제활력을 앞당기는 예산, 동시에 군살을 제거하고 최대한 절약하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GDP 5%의 赤字財政을 심의하여 주시도록 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합니다, 그리고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吳長燮 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만 안 계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李在昌 委員님께서 中期財政計劃을 법제화하는 문제와 2006년 균형예산 가능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그 동안 예산회계법 제16조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해 왔습니다만 계획 내용이 매년도 예산편성과 긴밀하게 연계 운용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中期財政計劃은 재정적자의 효율적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연도별 재정적자 축소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매년 예산편성시에 반영 철저하게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3당 경제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연도별 재정적자 축소목표는 연말까지 작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0년에 경상성장률 7.8%, 2002년에 경상성장률 9%가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2000년에 실질성장률을 4.7% 수준, 2001년 이후부터는 5% 수준의 실질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디플레이터(Deflator)를 감안해서 경상성장률 숫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은 좀더 근본적인 財政制度和 豫算節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때 실현가능한 목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金浩一 委員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盧武鉉 委員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李在善 委員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李聖宰 委員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周 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京釜高速鐵道事業의 調整計劃에 대해서 저와 건설교통부장관께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경부고속철도는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막대한 국민의 세금 낭비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 자문회의인 고속철도평가자문위원회가 기술심의회를 거쳐서 5월부터 7월까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7월 사회간접자본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周委員 알았습니다.

○企劃豫算委員長 陳 稔 金東周 委員님께서 公企業의 民營化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서면질의하시고 구두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시간 절약상 서면으로 상세하게……

○金東周委員 내가 할 얘기를 위원장이 다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앞의 경부고속철도문제는 국민대화합,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답변을 잘 하겠지만 기획예산위원장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여러 가지 건의를 잘 받아가지고 어렵지만 전 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모든 것을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企劃豫算委員長 陳 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權琪述 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權琪述 委員님께서 먼저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農特稅 存置와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재경부장관께서 말씀을 올렸고 저도 입장은 똑같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지속적인 투자지원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해서 농촌이 대외개방으로부터 경쟁력있는 부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權琪述 委員님이 公共勤勞事業費 2조원을 삭감해서 일반국도사업에 반영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갑자기 실업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금년 월동기, 내년 상반기까지의 失業者 對策이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천적인 해결 방법입니다마는 그와 같은 노력을 경주하고도 단기간 내에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을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위원님의 바람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때문에 실업대책비 전체를 조정해서 다른 SOC 사업비로 조정하는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一般國道事業問題는 일반국도가 일반국도와 건설교통부의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국도사업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금년도 추경예산, 추경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 전체가 일반국도와 계속비사업이 2조 8,000억인데 내년도에는 3조원 수준으로 전체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국도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物流費用이나 지방의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고용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

는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노력을 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琪述委員** 그런데 계속사업 기간국도하고 거기보다도 일반국도로 또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배려를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근로사업비 2조원을 일시에 전액을 다 삭감을 못할 경우라도 다소는 삭감을 하고 또 그 집행을 할 때 무엇인가 나라에 남는, 지자체에서 어떤 目的事業을 설정을 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목적사업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성취시키면서 임금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신적인 문제로 보아서도 건전한 정신을 위해서도 좋고 또 단순히 아무 사업없이 그냥 국가에서 공으로 얻어먹는다 하는 구호적인 정신적인 바탕이 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公共勤勞事業豫算을 집행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제 부탁입니다.

○**企劃豫算委員長 陳 稔** 전적으로 權委員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 실업자가 노동연구원 전망에 의하면 약 8% 수준의 실업자, 179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발적 실업자 또 소득이 높은 실업자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이 145만명입니다. 145만명의 인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173만명입니다. 그러면 179만명 중에 남는 145만명을 생보자 대상으로 바로 넣어서 보호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아니면 그래도 공공근로사업을, 물론 제도는 더 보완 발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을 시키면서, 일자리를 주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선택의 문제로 갈 때는 그냥 生保者로 집어넣어서,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느 형태로든지 근로를 시키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고민을 많이 한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琪述委員** 그 문제는 본위원회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냥 생보자 차원에서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주어야 된다. 지자체에서 또 정부에서 무슨 일을 만들든지 일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企劃豫算委員長 陳 稔** 감사합니다.

끝으로 朴鍾根 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에서 국제상환, 균형예산 회복, 국가부채 특별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적자재정에 대한 걱정과 또 철저한 관리를 촉구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각은 特別法을 제정해서라도 재정적자를 미국의 경우나 다른 경우처럼 철저하게 실현하도록 하라는 격려와 촉구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저희가 연말까지 마련하는 중기재정계획 과정에서 財政赤字 縮小問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도적 장치 마련과정에서 협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융 및 企業構造調整 費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비용발생을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빨리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金融機關이 제 역할을 하도록 빠른 시간내에 변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에서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고 부실책임이 있는 주주와 채권자, 경영자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損失分擔原則이 지켜지는 기준에 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鍾根委員** 위원장님, 원칙적인 이야기로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데 옛날에도 銀行監督院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감독의 절차나 업무규정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작동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이 소위 지금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官治金融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과거와 같이 또 일이 제대로 안 될지 또 선진국의 일류금융기관과 같이 철저하게 잘 할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부도가 계속되면 결국은 은행이 떠안게 되고 또 은행이 자빠지게 되면 정부에서 또 물어주어야 되고 또 정부가 물어주는 돈은 국민이 내야 되고 하는 惡循環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떤 법적인 틀을 정해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企業構造調整에 관한特別法도 이미 제출되어 있고 하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대해서는 정부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용하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규정을 정해놓고 하자 하는 의견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委員長 陳 稔**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재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예를 들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cooperate governance)를 포함해가지고 自律과 責任을 제도화시키는 그러한 시스템변화도 현재 마련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이 발의하신 企業構造調整에 관한特別法 問題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鎮載** 李在昌 委員님……

○**李在昌委員** 지금 위원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中長期財政計劃에 대해서 질의한 취지는 우선 현재의 막중한 赤字財政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취지를 강조하면서 자칫 지금 계획되어 있는 중장기재정 계획은 당장 국민에게 그야말로 낙관적인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우리의 赤字財政이라고 하는 심각성을 망각하고 그저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지금 그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국민들하고 같이 인식하면서 정말 긴축적으로 재정도 운용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국민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너무도 이것은 장미빛, 사실상 실현 가능하기 매우 어려운 것을 中長期財政計劃이라고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본위원이 法制化를 할 용의가 없느냐 강조한 것은 사실 中長期財政計劃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 羈束力이 없습니다. 기속력을 가질 때만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적자재정구조를 해소해 나가는 제도가 되는 것이지 단순한 계획으로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만큼 소위 지켜질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뜻에서 가칭 國債管理償還에 관한法律이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법률을 만들어

서 적어도 정부가 적자재정을 해소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법으로다가 해서 매년 예산편성때나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또 가장 그 점을 고려한 그런 예산이 되도록,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때만이 국민이 믿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 國家 信認度에 있어서 설령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적자재정 해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을 국제사회에도 줄 때만이 우리의 현재 떨어진 국가의 신인도 이것이 앞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法律制定의 용의를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 질의의 취지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豫算委員長 陳 稔**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李在昌 委員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3당 정책위의장님과 협의한 내용은 KDI가 모든 노력, 다시 말씀드리자 공공부문, 각종 기금, 특별회계, 중앙정부, 그 다음에 공기업, 정부 산하 기관까지 포함해서 철저한 개혁을 하는 노력을 경주할 때에 2006년에 當該年度 赤字가 없어지고 2015년에 累積赤字가 없어진다 하는 하나의 목표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칫 잘못하면 道德的 解弛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왕에 빛지는 것 12조 빛이면 어떻고 13조 빛이면 어떻고 씹음이 다 쓰자 해버리면 우리는 赤字財政의 미궁에 빠져들고 이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새로운 외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씨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낙관적인 장미빛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선택은 어디냐, 우리 공공부문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리고 部處利己主義를 떠나서 과감한 재정개혁을 해서 실천해야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답을 생각하고, 國債管理에 관해서는 현재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라는 별도의 법률이 꼭 필요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鎮載** 權哲賢 委員님!

○**權哲賢委員**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3년째 소속되어 있어서 한때 우리 노동부장관을 하셔서 저희

들하고 상임위원회를 같이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인상은 陳 稔 당시 장관께서는 당시의 야당이 아무리 고향을 지르고 떠들고 해도 변함없는 신념으로 맞서가지고 상당히 싸우고 그러셨거든요. 그 야당이 여당이 되었는데 요즘은 신념이 동일합니까? 요즘 여당하고는 신념이 맞습니까?

○企劃豫算委員長 陳 稔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國家經營에 도움이 된다면 소신껏 일하겠습니다.

○權哲賢委員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을 드리는가 하면 역시 기획예산위원회가 豫算編成指針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부를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면,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역시 예산편성의 지침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잘 사는 실업자가 아니고 정말 도와주어야 될 어려운 실업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失業對策을 세운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실업대책 방법, 실업자의 추정 가지고는 진짜 어려운 실업자들을 도와 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침을 내리시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好況일 때의 失望失業者는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맞아서 안할 수가 있지만 不況일 때의 실망실업자는 구직을 하려고 해도 안되다 보니까 나중에 포기해 버리는 실망실업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근로자들도 대거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의 실업대책은 그런 종류의 실망실업자나 비상시근로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1차, 제2차 社會安全網에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문제를 陳 稔 勞動部長官 출신 정도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을 위한 지침이 나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企劃豫算委員長 陳 稔 權哲賢 委員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대량실업사태를 경험한 지 불과 1년입니다. 하기 때문에 실업자 측면에서의 勞動行政이나 복지차원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의 이른바 복지·실업 전달체계와 기본적인 조사가 매우 미흡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동부 보건복지부 해가지고 公共勤勞事業에서 상당한 부문에 봉사자 내지는 이러한 사람을 추가 충원을 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조해서 기본적인

인 데이터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아까 權哲賢 委員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망실업자 중에서도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일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生計支援을 해주든지 하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상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權哲賢委員 어쩔 수 없이 현재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는 상당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아내야만 정말 좋은 국민의 정부가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지침을 기획예산위원회가 합의해 주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失業統計 같은 것을 ILO기준에서 OECD 기준으로 바꾸어야 되고 이런 지침을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주지 않는 한 하부의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지침에 따라서 짜기 때문에, 더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豫算委員長 陳 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鎮載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朴相千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吳長燮 委員님께서 변호사에 대해 附加價值稅를 부과하는 데 대하여 본인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吳長燮委員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法務部長官 朴相千 서면으로 드릴까요?

○吳長燮委員 예, 서면……

○法務部長官 朴相千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朴源弘 委員님께서 한국공항공단 비리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수수한 공항경찰은 구속하고, 국민회의 오길록 민원실장이 辯護士法 위반사건으로 200만원을 받은 사안은 불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시고, 변호사법 위반사건의 내용과 오길록 민원실장의 추가 비리를 물으시고 拘束搜查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오길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98년9월21일 略取誘引罪로 경찰에 구속된 자의 석방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구속된 사람의 애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10월31일 다시 100만원을 받으면서 청탁자와 1회 간음한 혐의로 지난 11월24일 수원지검 평택

지청에서 변호사법 위반죄로 不拘束起訴되었습니다. 불구속을 한 이유는 수수금액이 200만원으로서 비교적 경미하고 받은 금액 전액을 다시 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朴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공항공단 非理事事件으로 경찰관을 구속한 것과 비교해 보면 이 공항공단 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45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를 각각 수수한 사람들을 구속해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180만원에서 200만원을 수수한 사안은 아예 立件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기관에 非理通報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는 100만원은 구속하고 오길록씨는 불구속했다는 것은 자료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학로 전 부속실장의 前妻와의 사건은 지난 10월29일 고소인이 명예훼손과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서 公訴權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밖에는 오길록 민원실장에 대한 다른 비리사실은 현재로서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朴源弘委員 변호사법 위반사범은 보통 구속수사하지 않았습니까?

○法務部長官 朴相千 불구속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金映宣委員 법무부장관님, 국민회의는 야당으로서 人權伸張에 기여도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가고 또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 인권신장에 더욱 노력하고 있고 또 여성들의 권익이나 여성들의 參政權 擴大에도 상당히 주장도 하고 실천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여망 특히 여성들의 여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성민원인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민원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性倫理的인 측면을 범했을 때 많은 여성들, 뚜렷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소박하게 우리나라의 가정을 지키는 많은 여성들에게 주는 심각한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法務部長官 朴相千 그 사건은 현재 아직 刑이 확정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준 여자분의 名譽를 위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않겠습니다마는 돈을 받게 되기까지의 제반 경위를 보면 불구속을 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鄭亨根委員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길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鎮載 鄭亨根 委員, 발언하십시오.

○鄭亨根委員 감사합니다.

오길록씨 불구속기소장에는 간음을 한 사실도 범죄가 된다고 그렇게 불기소 犯罪事實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간통한 것도 아니고 강간한 것도 아닌데 왜 간음한 사실이 罪名에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습니까?

○法務部長官 朴相千 辯護士法 위반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金品 響應 其他利益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亨根委員 그러면 내가 나한테 간음을 해주면 잘봐주겠다 이렇게 해서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야 범죄사실이 되지요. 나는 그것이 지나치지 않았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法務部長官 朴相千 지나치게 무겁게 했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입니까?

○鄭亨根委員 그것을 제가 탄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음까지 넣은 것은 지나치지 않았느냐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法務部長官 朴相千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적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映宣委員 法務部長官님! 제가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데 청탁하는 사람은 항상 아쉽게 마련이고 부탁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엄정한 자세를 지켜야 되는데 오길록실장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사실 오길록실장이 陰地에서 일한 많은 부분도 있지만 오길록실장이 속해 있는 여러 조직이나 정당에 나쁜 이미지를 미칠 우려가 있고 對國民的으로도 좋지 않은 사회적 영향을 감안해서 그렇게 완화하는 처분이 결과적으로는 더 나쁘다고 생각이 되지 않나요? 좀 엄정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法務部長官 朴相千 적절하게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200만원 받았다가 돌려주었고 또 방금 鄭亨根委員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판에 회부했기 때문에……

○金映宣委員 그러면 간음한 것은 어떻게 돌려줍니까?

○法務部長官 朴相千 법원이 그 점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朴源弘 委員님께서는 光州 화신신용금고가 부실로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光州南區廳長이 同 금고에서 100억원을 불법대출하였다고 해서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搜

査内容 그리고 不法貸出한 100억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줄 것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光州地方檢察廳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수사 중에 있어서 구증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源弘委員** 지난 두어달 동안 수사 중인 사건이 얼마나 검찰에 의해서 밝혀졌습니까? 이번 경우는 밝혀지지 않는 것입니까?

○**法務部長官 朴相千** 검찰에 의해서 밝혀졌다고 단정하시는 것은 좀 빠릅니다마는……

○**朴源弘委員** 저도 신문기자였지만 기자가 검사나……

○**法務部長官 朴相千** 밝혀진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長官이 이 國會라는 엄숙한 자리에서 또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不法貸出關係 그리고 使用處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대출금액이 빠른시일내에 相互信用金庫로 회수되어서 예금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鎮載** 法務部長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國防部長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 千容宅** 國防部長官입니다.

鄭亨根 委員님께서서는 최근 추가땅굴 발견설에 대한 眞僞與否와 發掘經緯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軍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4개의 땅굴을 발견하였고 최근에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軍에서는 각종 情報 및 諜報를 정밀분석하여 땅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별도로 선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각종 첨단장비와 과학적인 技法 및 專門人力을 투입하여 추가땅굴 발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소요되는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鄭亨根委員**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國防部長官 千容宅** 그렇습니다. 4개 외에는 아직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鄭亨根委員** 지금 장관께서는 있다고는 추정하고 계십니까?

○**國防部長官 千容宅** 지금 의심스러운 지역을 선정해서 시추공을 파면서 탐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鄭亨根 委員님께서서는 생화학무기 공격의 피해와 대비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金東周 委員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生化學戰 威脅에 대비하여 한·미 양국군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韓·美 聯合情報資產을 최대로 활용해서 생화학무기 저장소, 생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적의 生化學武器에 의한 공격기도나 징후가 조기에 포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군은 징후 포착시에 한·미 공군력 등 다양한 무기체계로 적의 기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당국이 무고한 비무장된 동족인 民間人에 대해서 반인류적인 생화학무기에 의한 대량살상을 기도했을 때 우리 軍은 이에 상응한 강력한 응징을 결행할 준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한편 民·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피해방지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화생방전 방호를 위해 여러 주요지역에 대한 별도의 精察 및 除毒計劃을 수립해 놓고 있으며 내년중에 수도권지역에 生化放防護司令部를 창설하여 民·官·軍 통합 화생방전 대비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군에서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등과 협조하여 북한 화생방전 위협에 대한 對國民 弘報와 다기능 방독면 개발 및 국민 방독면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金台植 委員님께서서는 햇별정책 때문에 安保政策이 흔들린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햇별정책은 강력한 안보태세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對北政策이므로 국방정책은 남북교류 확대등 어떠한 외적 상황에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군은 對北包容政策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미 연합 대북감시태세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대남도발 유형별 대응책 및 위기관리태세를 강화하여 국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金東周 委員님께서서는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鎮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鎮載委員長, 吳長燮幹事와 사회교대)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鄭亨根 委員님께서 第2建國運動과 관련하여 많은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제2건국운동은 신관변단체를 만들어 總選에 대비하여 신당 창당을 하기 위한 事前整地作業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제2건국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2건국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오해 소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제2건국운동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新官邊團體가 아니냐, 전국 조직을 하는 것도 政治的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총리께서 개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第2建國運動은 총체적인 國政 改革運動이고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國民運動으로 전개하려는 것입니다.

결단코 新黨 整地作業이거나 관변단체화하려는 의사는 추호도 없다는 것과 그렇게 해서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亨根委員 그렇다면 아까 總理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운동을 한다면 당연직 위원에 區·郡議會 副議長과 常任委員長은 차치하더라도 굳이 경찰서 경무과장이 필요하며 고문에 警察署長이 필요합니까?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제가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조금 답변을 다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면……

또 鄭委員님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2건국 추진지침을 시달한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침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을 망라해서 推進體系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純粹國民運動인가 하는 질의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오해는 아직 제2건국운동이 본격화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추진과정을 보면 해소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통해 자치

단체별로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한 것은 제2건국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은 물론 지방을 망라하는 汎國民的인 추진체계를 갖추 필요가 있어 이를 권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도 改革推進과 관련하여 民間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官에서 추진하고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므로 관이 참여한다 하여 이를 곧바로 官主導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전체 위원중에 민간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民관합동기구인 地方推進委員會를 운영하게 되므로 관주도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金光元委員 장관! 범국민적인 추진의 성공을 위하여…… 이것은 장관께서 분명히 이 단체가 諮問機關이 아닌 推進機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범국민적인 추진성공을 위해서……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아니,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문할 수도 있습니다.

○金光元委員 지금도 이 기구가 자문기구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자문기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諮問機構입니다.

○金光元委員 조금 전에 장관께서 범국민적인 추진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읽지 않으셨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제2건국과 관련해서 자문할 부분도 있고 자치단체장에게 자문할 부분도 있다……

○金光元委員 범국민적인 推進 成功의 諮問을 위해서 그렇게 원고를 안 읽었어요!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그 이야기는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범국민적으로 제2건국운동 추진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역시 大統領에게 제2건국 관련해서 자문할 부분도 있고 地方自治團體長에게 자문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金光元委員 그러면 계속하세요. 지방기구도 전부 자문기구로 할……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전부 자문기구입니다.

○李在昌委員 분위윈도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國民運動중에 초창기부터 官이 직접 추진기구에 또는 자문기구에 참여해 가지고 전

면에 나타나서 국민운동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민간이 주체가 되는데 사실 行政機關에서 경우에 따라서 도와주면서 한 것은 있지만 기구에다 그렇게 넣어가지고 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처음부터 官主導의 國民運動, 말은 국민운동이지만 실제로는 官의 한 조직에 국민이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소위 權力을 가진 사람들 또 국민에게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전부 총집결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뭐래도 아무리 이것이 諮問機構이고 國民運動機構라고 하지만 이것은 官이 앞장서서 처음부터 끌고 간다 말입니다.

또 豫算 支援問題도 자문기구에다 작년에 38억, 금년에 20억 이렇게 집어넣어서 무슨 자문을 그렇게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장관께서 이것은 諮問機構……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在昌委員** 가만히 계세요.

諮問機構이고 또 성격이 범국민운동이라고 하지만 그 실제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왜 하느냐 그것이에요. 그것 좋습니다. 개혁을 이끌기 위해서 國民運動機構를 만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방법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살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과거에 국민운동했던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해서 안된다고 하는 경험칙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고 마치 이것은 하나의 不文律 原則같이 자꾸 장관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점에서 분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편중된 논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國民運動이 民間主導로 시민단체나 국민운동단체 중심으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이런 것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할만한 역량을 갖춘 NGO나 國民運動團體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운동에 불을 지피는 일은 民官이 합동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서 앞으로 추진은 시민단체나 국민운동단체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第2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앙은 대통령의 제2

건국에 대한 자문기구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第2建國과 관련한 諮問機構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2건국과 관련해서 각분야별 제도개혁이나 국민들 의식개혁 생활개혁에 대한 아젠다를 개발하고 그 아젠다에 대한 優先順位를 정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2건국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본격 추진되는 것은 이러한 조직체계가 다 완료되고 나서 아젠다가 정해지면 시민운동단체나 국민운동단체 중심으로 하고 民官이 참여하고 있는 第2建國推進委員會에서는 이 운동을 성공적인 운동으로 추진하는데 民官이 합동으로 뒷받침할 부분을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 名望家들을 참여시키느냐, 이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명망가들이 참여하고 솔선수범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20억원의 豫算部分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이 16억입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는 23억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억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 중에서 民主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는 79억입니다. 자유총연맹은 13억입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9억이고 지난 신한국당 시절의 세계화추진위원회는 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이라는 돈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이렇게 많으나 또 인원이 427명인가 되어서 많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國政의 總體的 改革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기획예산위원회나 행정자치부에서도 改革作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기능이 重複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개혁작업은 개혁작업대로 합니다.

그러나 政府에서 하는 改革作業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더디다 이런 것은 미흡하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이 쪽에서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좀 重點을 두어 달라 이런 것을 더 강도높게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자문할 수가 있고 우리 나라가 21세기에 先進國하고 경쟁할 수 있는 競爭體制를 갖추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나 의식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것대로 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市民團體나 國民運動團體가 앞으로 하나가도록 하고 그때 官이 뒷받침하는 역할은 자치단체가 할 것은 자치단체가 하고 중앙정부가 할 것은 중앙정부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성이 없고 아까 鄭亨根 委員께서 지방경찰서장을 顧問으로 하고 경찰서 경무과장을 當然職 委員으로 위촉토록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2건국이 總體的인 國政改革運動이기 때문에 지금 성폭력문제나 학교주변폭력 등 민생 치안에 관련된 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려고 하면 시민단체만이 그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가 그 운동을 하는데 경찰이, 官이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市民運動, 國民運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운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官만으로서 제대로 안되는 일 민만으로서 제대로 안되는 일을 民官이 합동해서 제대로 하는 그러한 새로운 행태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世界的인 趨勢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源馥委員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본질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관님께서도 지금 정확하게 범국민추진위원회의 무엇을 맡고 계시는 것이지요?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기획단장입니다.

○李源馥委員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기획하시겠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예.

○李源馥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조직이 만들어진 목표라고 할까 이데올로기 이념적 좌표라고 할까, 이것이 제2건국 맞습니까? 아니면 국정의 총체적 개혁운동이 맞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제2건국이라는 것이 국정에 대한 총체적 개혁과 크게 나누어 제도개혁, 의식개혁, 생활개혁을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이 민관이 합동으로……

○李源馥委員 장관님, 제2건국이라는 개념하고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용어가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이렇게 되면 나라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용어가 이 집단, 이 기관이 갖고 있

는 좌표가 우리 나라가 전체적으로 改革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정부도 하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自發性을 올리고 창발성을 올려서 정말 이 나라가 개혁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좌표라면 명칭도 어떻게 왔어야 하느냐 하면 國政改革汎國民推進委員會 이런 형태로 왔어야 됩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용어가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이렇게 되면 불가분 제1건국기는 언제부터냐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주셔야 됩니다. 제1건국기는 언제이고 제2건국기는 언제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周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代理 吳長燮 金東周 委員 말씀하세요.

○金東周委員 방금 존경하는 李源馥 委員께서 제2건국위원회를 얘기하면서 집단이라는 데 집단이 무엇입니까? 집단이라는 것을 그대로 속기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은 李委員의 발언을…… 집단이라는 용어를 나는 잘 안 들어보았거든요.

○李源馥委員 집단이란 사회학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을 추진하는 어떤 팀, 어느 그룹, 어느 집단 그런 개념으로 제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어느 팀이 있다고 치면 이 집단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느냐, 그 目標가 무엇이나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金東周委員 제 얘기는 존경하는 李委員님 말씀 중에서 회의록은 영구보존문서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第2建國委員會를 집단 운운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고,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더욱 매끄럽게 해주세요.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제가 李源馥 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를 가지고 제2건국은 언제냐 이렇게 논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칭을 어떻게 붙이냐 하는 것은 달리 붙일 수 있습니다. 總體的 改革運動입니다.

예를 들면 신한국당에서 과거에 추진한 신한국 창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한국 창조라는 것은 지금 있는 한국을 부인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2건국이 추진하는 방향이나 신한국당에서 추진하던 신한국 창조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같은 뜻입니다.

○李源馥委員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 장관님의 사회과학적 인식에 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노출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가상 新韓國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치면, 저는 문제가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李源馥委員**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는 한국을 조금 더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용어가 상당히 포지티브하고 괜찮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가상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발상으로 생각하시면 그것 안 쓰듯이 第2建國이라는 용어에 문제에 있다면 안 써야 됩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다고 쳐도 그렇다면 동시에 같이 안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우선 이 단체의 명이 제2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신한국이라는 용어하고 대비되어져서 그렇게 간단하게 같은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성격이 아닙니다. 제2건국은 용어상 분명하게 이것은 제1건국의 의미와 제2건국의 의미와 제3건국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리해 주어야만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1건국기가 언제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大統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2건국은 제1건국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 쪽 해오면서 잘 한 것은 繼承하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잘못된 것, 改革할 것은 개혁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자는 그런 자세로 이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2건국이라는 말을 썼고요 굳이 제1건국이 언제냐 하면 우리가 獨立해 가지고 解放 이후 政府를 樹立한 것을 제1건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李源馥委員**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취지로 뭘 하자 그런 것은 저희도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적 언어체계상으로도 보면 우리가 제2건국을 하는 정신으로 뭘 해보자 이런 얘기들은 그렇게 문제있는 용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2건국운동이라든가 제2건국국민운동본부라든가 이런 용어로 정부가 그것을 쓸 때에는, 社會團體가 쓰는 것은 民間들이 알아서, 憲法에도 言語를 만들 자유가 있으니까 團體名을 지을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어떻게 짓든간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니까 그것은 좀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것을 나서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 용어만 놓고 얘기하면 불가분 제1건국기와 제2건국기를 분리해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제3건국은 언제냐 하는 얘기를 또 정리해 주어야 됩니다. 또 이 문제는 이렇게 가게 되면 제1건국에서 만든 각종 國慶日 國歌 國旗 愛國歌 이것은 제1건국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아젠다입니다. 아까 아젠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제1건국에서 제2건국으로 가게 되면, 建國이라는 것은 용어가 그런 것입니다. 건국은 나라를 세운다…… 건국이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휘적 표현 그대로 말하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지요. 말씀해 보세요.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李源馥 委員님, 제가 제2건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吳長燮** 장관,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지금 우선 국가발전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補充質疑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보충질의는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신 다음에 그 이외의 분은 회의진행상 여건에 따라서 제가 發言權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분들이 지금 계속 손을 들고 계신데 제가 발언권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李源馥 委員님께서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李源馥委員** 위원장님,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같은 경우 어제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 많이 밀려서 답변을 안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와서 오늘 답변시간에 어제 답변 못들은 것과 같이 겸사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것은 개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데 왜 제재하십니까?

○**委員長代理 吳長燮** 하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제하고 그저께 제가 司會를 안 봤기 때문에 누가 질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의하신 분부터 우선 補充質疑를 하고 그 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보충질의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發言權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서한샘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代理 吳長燮**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서한샘 委員님 말씀하세요.



○서한샘위원 장관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전국의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IMF체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체제의 危機性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國家의 基本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서한샘위원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게 되어 있는가, 지금 독이 깨져 있습니다. 물이 살살 썩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메꾸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제2의 건국이 아니겠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그렇습니다.

○서한샘위원 제2의 건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두 번째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다시 시작을 해보자, 精神姿勢를 바로 깨우고 이 사회의 구조적인 腐敗와 非理를 改革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그러한 國民運動 아니겠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그렇습니다.

○서한샘위원 그러면 이러한 국민운동을 주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대통령께서 주창을 하시고 그리고 함께 이루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예.

○서한샘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國政指標 일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2의 건국이 지금 존경하는 李源馥 委員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휘상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單純化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건국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2의 새마을운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제2의 바르게 살기운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세워보자, 지금 기강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전부 밑바닥에 떨어진 것을 다시 세워보자, 이제 5,000불, 6,000불로 되어 있는 이 나라의 GNP를 1만불 시대로 다시 세워보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朴正熙 大統領께서 민족중흥의 기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지난 YS 대통령께서는 신한국 창조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金大

中 大統領께서 제2의 건국운동을 펼치시는 것은 정신운동이 아니겠느냐 바로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는 아까 총리께서 지금 우리 서한샘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本會議에서도 하시고 오늘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제2건국운동이라는 개념은 서한샘 委員이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제가 李源馥 委員의 질의에는 충분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吳長燮 全錫洪 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源馥委員 왜 마이크 안 넣는 거예요! 위원이 이야기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왜 마이크 안 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아파서 그러냐 뭐가 아파서 안 넣는 거예요. 얘기하던 중인데 의사 진행발언으로 차단된 것은 차단된 것이고 줄 것은 줘야 될 것이 아니요. 왜 발언을 막아! 마이크 왜 안 넣는 거예요. 도대체……

○委員長代理 吳長燮 마이크 넣어 줘요.

○李源馥委員 아니 이것은 개념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이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 주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얘기까지는 하고 정리해야지요.

저는 조금 아까 議事進行發言과 검사해서 개인 의견을 좀 얘기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서한샘 委員님 말씀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또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 나라에 總體的 改革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근본부터 여러 가지 많이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이 국가 내에, 이 역사 속에 제2건국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뭘 좀 새롭게 해보자는 그 총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사람이고 또 정말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 사회가……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제2건국운동범국민추진위원회라는 公式機關을 만드는 것은 차원을 달리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정부기관의 문제이고 정부가 앞장서는 기관 명칭을 정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을 필요로 하는 문제와 역사에 대한 사려깊은 사태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 제2건국추진국민위원회 이렇게 되어 버리면 불가분 앞으로도 그러면 제3건국 운동은 어떻게 되는 문제냐, 제4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제5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미래의 그런 것에 대한 역사학적인, 사회학적인 그러한 정리도 정부가 책임지고 해줘야 됩니다. 왜냐, 이 정부는 오늘만 있을 정부가 아닙니다. 이 역사는 오늘만 있을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용어만 놓고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오해의 소지도 없게끔 이것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총체적인 國政改革이라고 한다면 용어를 국정개혁범국민추진위원회로 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왔어야 합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국정을 개혁하는데 정부가 애슬테니 국민도 애써 주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런 용어로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2건국 하면 이 용어는 建國은 분명히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吳長燮 李源馥 委員님, 답변을 좀……

○李源馥委員 제2의 建國期가 있어야 하고 제2의 건국기에 대한 규정을 이 단체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民間團體가 아니라 정부가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제1건국기와 제2건국기를 분명히 정리해줘야 되고 제1건국기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아이덴티티가 무엇이고 제2건국기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아이덴티티는 뭐다 어느 政權期까지는 제1건국기이고 어느 정권부터는 제2건국기인데 어느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정권이 올 때까지는 제2건국기이고 그런 성격이 아닐 때는 제3건국기로도 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이런 정리를 사회사학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 해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답변 안 하십니까?

○委員長代理 吳長燮 李源馥 委員님, 장관께서……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吳長燮 답변하세요.

○李源馥委員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읍시다.

第2建國 이렇게 되면 第2建軍 이런 용어도 가능합니까?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저희들이 쓰고 있는 용어는 제2건국입니다.

○李源馥委員 제2건국으로 하는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돼서 다 뒷받침하려면 국방부에서는 제2건국운동을 해야지요. 해야지요. 第2建軍, 이 용어가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李源馥 委員님이 조금 전에 개념정립을 하셨듯이 이것은 제1건국과 제2건국,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李源馥委員 의미가 아니라면 그 용어를 피해야지요.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李源馥 委員님처럼 용어상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견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할 수도 있고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李源馥委員 정부가 하는 일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정부는 어디까지나 이 나라의…… 어느 特定政權의 政府가 아닙니다. 大韓民國 政府입니다.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李源馥 委員님, 자꾸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신다면……

○委員長代理 吳長燮 장관, 거기에 답변하셨습니까?

○李源馥委員 얘기해 보세요. 第2建國運動을 각계가 추진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군인들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第2建軍運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교육관련쪽에서 우리는 그러면 第2教育運動을 하겠다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괜찮습니까? 얘기해 봐 주세요. 더 확대하고 본질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委員長代理 吳長燮 長官!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예.

○委員長代理 吳長燮 議事進行發言, 李聖宰委員……

○李聖宰委員 지금 이 자리가 豫算決算審議를 하는 자리인데 委員 한 개인과 長官이 용어 하나를 놓고 좋다, 나쁘다 같았을 때 질의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길 때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부정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궁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용어를 놓고서 작명을 잘 했다, 작명을 못 했다 이것을 가지고 한없이 시간을 끌게 진행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질의가 산적해 있고 다른 답변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용어에 관해서는 李源馥 委員님께서 서면으로 충분히 질의하시게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長燮 李相洙 委員, 보충질의예요, 의사진행발언이예요?

○李相洙委員 보충질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長官, 현재 야당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 우선 첫째, 그 이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두 번째는 官이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우선 이름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총리께서 적절히 지적했는데 이것은 다시금 우리가 나라를 세운다는 각오로 일을 하기 위해서 불인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과거에도 보면 再建推進國民運動 같은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再建할 때는 국가를 세운다는 그런 이름으로 재건이라는 이름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음에 官이 관여하는 문제인데 지금 第2建國運動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국민적인 모든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절박하게 진행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官도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마치 선사가 달을 보라고 하니 달을 보지 않고 선사의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이 검다, 하얗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뭘니까? 정말 우리는 절박한 상황속에서 이 운동의 내용이 과연 어떠한, 이 운동의 목표가 뭐냐 이런 것을 놓고 따져야 될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정말 형식적으로 官이 주도하는 것이 옳으나, 이름이 무어나,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개항기에 각 번에서 무사계급이 일본 교토에 올라와서 각 번을 대표해서 올라온 사람이지만 일본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니까 조국의 입장을 걱정하면서 막부를 외치면서 개항을 하는 대동단결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지금 야당께서도 이 어려운 국면을 맞이해서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위기를 타개해야 할 텐데 그런 입장은 갖지 않고 형식적으로 官이 참여하는 것이 옳으나, 또 이름을 제2건국이라고 하는 것이 옳으나, 이렇게 접근하고 들어가는데 이 건 정말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金映宣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代理 吳長燮 李相洙 委員 질의에 장관 먼저 답변하시고……

○李源馥委員 제2건국이 되는지 제2교육이 되는지 그걸 답변하고 그 다음으로 가야지요.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사회 보시는 위원장님께서 李相洙 委員 질의에 우선 답변하시라고 하니

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相洙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제2건국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6·25 이래 최대 국난인 IMF를 맞아서 우리가 국가의 총체적인 개혁을 하면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총체적 개혁운동을 국민 합동으로 이것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야겠다 하는 뜻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였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 있는 것은 제2건국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2건국과 관련해서 자문하는 자문기구로 구성된 것입니다. 앞으로 제2건국 범국민운동은 시민단체나 국민운동단체 중심으로 여기에서 개혁과제나 개혁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것은 그런 단체들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할 것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제도개혁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권고를 하면 그것을 제도개혁은 정부 차원에서 해 갈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제도를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해 갈 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長燮 朴源弘 委員 질의하세요.

○朴源弘委員 질의했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반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운동이 장관님께서, 企劃團長께서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셨는데 세계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몰라도 웬만한 중진국치고도 이제 이런 官 주도의 국민 무슨 운동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존경하는 李相洙 委員의 말씀으로는 1854년 페리제독이 일본에 왔을 때 開港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21세기를 불과 2년도 안 남겨 둔 바로 문턱입니다. 144년전 얘기를 왜 하십니까? 한국이 아무리 뒤떨어졌어도 일본보다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았다고요. 캠페인성 활동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힘, 세금 이런 걸 낭비해 가면서, 더구나 지금 적자재정입니다. 하실 필요 없는 것이고, 국민을 얼마나 얹잡아 보길래 그런 운동을 정부가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합니까? 실제로는 집행기구 아닙니까?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집행기구가 아닙니다.

○朴源弘委員 우리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마치 일제 때나 60년대 초, 우리의 民度가 낮을 때, 지금

우리의 문맹률이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때 하던 일을 이제 하려고 할 때는 국민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국민이 똑똑합니다. 시민단체도 똑똑하고요. 돈이 얼마나 나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민주평통에 몇 십억이 나가고 하면서 이견 상대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이걸 자꾸만 합리화하시려고 하면 부작용밖에는 안 따라옵니다.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은 괜히 그런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 운동 때는 꽤 잘 따라왔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민도가 낮았는지 몰라도 그때는 관민이 이 때야말로 새마을운동 할 때다 생각을 했고 지금은 솔직히 재가 실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린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시려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돈 덜 쓰시고 나중에 더 큰 돈 쓰시게 됩니다. 그만 두시는 게 낫겠고 企劃團長으로서 너무 공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民間에서 잘 안 따라옵니다.

○**金元吉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代理 吳長燮** 金元吉 委員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金元吉委員** 저는 정직히 얘기해서 지금 IMF 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급박하고 어렵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2 건국이라는 용어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나라를 세운다는 각오로 전국민이 달려들지 않는다면 이 經濟危機를 구해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論爭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들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찬성이예요. 그래서 국민의 이름을 팔 이유도 없고 위원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간이 한 시간 밖에 안 남았는데 이 명칭 가지고 논쟁해서 오늘 次數變更도 못하고 끝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빨리 진행해주세요.

○**委員長代理 吳長燮**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위원님들의 의지나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27일부터는 部別審査도 있는데, 심도있는 질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발언하신 분부터 발언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李在昌 委員 말씀하세요.

○**李在昌委員** 의사진행 겸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기본입장에 있어 본인이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서 이 문제는 빨리 종결을 짓는 전제하에서 말

씀드립니다.

장관께서는 자꾸 官 주도가 아니고 국민의 운동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는 것에 논리의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나 중앙에나 지방에 있는 기구가 전부 諮問機構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그렇습니다.

○**李在昌委員** 그러면 이 운동의 추진 주체는 대통령과 또 각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요?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아닙니다.

○**李在昌委員** 諮問機構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이 집행 책임자에 대해서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것을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개혁을 하는 주체는 바로 행정책임자다 말합니다. 국정의 책임을 맡으신 대통령께 자문을 해 드리고 또 중앙의 각 부 장관이든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자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동의 주체는 行政機關이라는 논리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在昌委員** 장관께서도 행자부에 諮問委員會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자문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자문을 받아서 그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바로 責任者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 모순이 있어요. 자꾸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자문기구가 아니라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국정의 개혁을 위해서 國民運動을 추진하겠다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推進機構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새마을도 그랬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 국민운동한 것이 전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자문기구라고 하다 보니까 개념의 혼동이 지금 옵니다. 그래서 官 주도라고 하는 것을 왜 문제시하느냐 하는 것을 장관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官 주도라고 하는 이유는 국민운동인데 왜 行政機關이 책임을 지고 豫算 주고 사람 다 들여가지고 끌고 나가느냐? 그러면 그것이 官主導運動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운동이라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견이 감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질의도 했고 또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잘 알겠습니다.

○李在昌委員 그런데 장관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그런 데 대해서 고려의 여지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중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이셔 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李源馥 委員께서 말씀하신 용어문제든 또는 官主導問題를 왜 제기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장관께서 겸허히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답변의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長燮 지금 답변할 장관님들이 열 두 분이 남았습니다. 오늘 솔직히 내일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3당 幹事들이 일정을 조율하면서 오늘만큼은 차수변경하지 않고 또 12시 안에 끝내기 위해서 재경부장관 답변도 제일 마지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3당 간사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루시는 것 좋습니다. 저도 환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行政自治部長官 한 분 모셔놓고 벌써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느 部處도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이 행정자치부장관이 광범위하게 중요한 부분의 업무를 차지하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보충질의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李在昌 委員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27일부터 부처별 심의가 있습니다. 그 때는 집중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나와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行政自治部長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숙지하셔서 속시원하게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듣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해하시고 부처별 심의 때 심층적인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李源馥 委員, 그렇게 이해합니다.

○李源馥委員 정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長燮 마지막으로 李源馥 委員님이……

(장내소란)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는데 제가 李在昌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委員長代理 吳長燮 장관, 가만히 있어요. 사회자가 이야기하면 좀 들으세요.

답변을 장관이 하는데 장관의 답변을 들어야만, 다음 部別審査 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답변을 들으신 후에 질의를 部別審査 때 하는 조건하에 답변을 들도록 하십시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우선 답변을 드리고……

○鄭亨根委員 상임위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냐하면 무슨 경찰서장, 경무과장 넣은 것을 강변을 하면서 性暴力이나 학교에 있는 일 이런 것을 단속한다 그런데 장관이 단단히 알아야 될 것이 경무과장은 性暴力團束과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런 단속을 하려면 검사는 왜 안 넣습니까? 답변해 봐요.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麟求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代理 吳長燮 의사진행발언하세요.

○李麟求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장관, 양해해 주시고 존경하는 野黨 委員님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가 豫算審議를 위한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색깔문제라든가 그러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이 예산심의 자체를 제쳐놓고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리고 與野幹事들 세 분이 위원장하고 같이 얘기해서 오늘은 법상 차수변경이 안돼요. 한 시간 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대로 놓으면 12시까지 이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종결하고 또 질의도 더이상 하지 말고 豫算에 대한 문제를 하더라도 16명의 국무위원이 지금 답변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넷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진행하고 계속해서 발원신청이 나오면 委員長 職權으로 잠깐 정회하고 간사회의를 새로 해요. 그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金映宣委員 위원장, 李麟求 委員이 발언하는 기회는 주면서 왜 저한테는 발언기회를 안 주는 것 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할 얘기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소리를 질러야 發言權을 줍니까?

○委員長代理 吳長燮 사회자를 존경해서 여러분

들께서 말씀을 정말로 쉽게 하시지 마시고 서로 존경해서 합시다.

그 다음에 일부 위원님으로부터 장관님의 답변을 듣는다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3당 간사의 협의사항에 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 말도 좀 들어주시고……

○**金映宣委員** 간단하게 질의를 한다는데 사회자가……

○**李源馥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吳長燮** 지금 **李源馥** 委員도 달라고 하고 **金映宣** 委員도 달라고 하면 누구를 줍니까? 그렇게 하면 사회를 어떻게 봅니까?

장관, 답변하세요.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우선 **李在昌** 委員님과 **鄭亨根** 委員님이 질의를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답변을 충분히 듣고 보충질의를 하면 큰 오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執行機構나 諮問機構나 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데 첫 번째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제2건국과 관련한 大統領諮問機構로, 지방에 있는 추진위원회는 제2건국과 관련한 地方自治團體의 諮問機構로 만들고 시민운동단체나 국민운동단체를 모아가고 네트워크화해서 추진하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민운동본부를 따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보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정말로 실천해 가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참여한 멤버들이 **金壽煥**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사회명망가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의식개혁이나 생활개혁의 실제 캠페인을 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런 명망성을 가지고 제2건국에 먼저 앞장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운동이 국민 속에 더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대통령자문기구에 같이 참여하도록 한 것이 이 분들이 추진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분들입니다.

현재 정부가 제2건국과 관련해서 汎國民運動이 전개되고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리고 일반국민들로부터 改革의 課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각 부처별로도 개혁의 미진한 부분을 전부 취합해가지고 개혁의 우선순위를

를 制度改革 분야, 意識改革 분야, 生活改革 분야로 나누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프로젝트별로 시민단체나 국민운동단체가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해보겠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해서 할 수 있고 어떤 직장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鄭亨根** 委員님께서 경찰서장이나 경무과장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검찰은 없느냐 하셨는데 검찰에서도 제2건국추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性暴力이나 學校周邊暴力問題를 다루는데 왜 경찰서장을 고문으로 하고 경무과장을 넣었느냐 하면 지금 시민단체 중에 바로 성폭력이나 학교주변 폭력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들에게만 이 운동을 맡겨놓았을 때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운동으로 시민단체가 하지만 경찰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줌으로써 이 운동이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2건국운동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을 벗어나서 정부가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는 조직이나 역량면에서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를 이 危機에서 다시 구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競爭力 있고 基本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民官, 與野, 地域, 年齡을 초월해서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데 아까 **朴源弘**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官主導로 이런 운동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색이 있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정치색이 있느냐 없느냐 하려면 한나라당에서도 동참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정치색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감시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한나라당 자치단체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이것을 官主導로 하고 新黨의 모태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분들에게 지시를 하면 그 분들이 따라

오겠습니까?

그리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우리 나라 대부분의 명망가들이 거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모두가 이 단체가 官邊團體가 된다는지 정치색을 띠면 이 운동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長燮 장관, 답변 다 하겠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예.

○金東周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委員長代理 吳長燮 金東周 委員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金東周委員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여야위원 여러분, 우리가 며칠 동안 예결로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有終의 美를 거두어야 합니다. 내일모레부터는 우리가 部別審査에 들어갑니다.

○金映宣委員 위원장님, 발언신청을 아까부터 했는데 왜 나는 발언권을 주지 않고 뒤에 말한 사람한테만 발언권을 주는 것이예요!

○金東周委員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金映宣委員 제가 먼저 신청했잖아요!

○委員長代理 吳長燮 지금 발언 중이니까 좀 주세요.

○金東周委員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李源馥委員 발언권을 왜 안 주는 것이예요!

○委員長代理 吳長燮 李源馥 委員은 오늘 발언 기회를 제일 많이 주었잖아요! 좀 기다리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金東周委員 제가 생각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답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교육부장관에게 질의를 많이 해놓았는데 이 분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部別審査에서 다시 심도있게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여야위원님들께서는 장관의 답변이 다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다시 준비했다가 部別審査 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장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映宣委員 위원장님, 제가 공평하게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사람한테 발언권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長燮 사회자 말 좀 들어보세요.

○金映宣委員 두 번 주는 것도 그런데 세 번, 네

번 주는 게……

○委員長代理 吳長燮 세 번, 네 번 준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자 말을 들으세요. 사회자 말을 안 들으면 저는 회의진행을 안 합니다.

○金映宣委員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委員長代理 吳長燮 그러니까 金映宣 委員과 李源馥 委員 중에 한 분만 말씀하세요.

○李源馥委員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국회의원이야!

○委員長代理 吳長燮 반말하지 마세요.

○李源馥委員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준다는 것은 또 무슨 발상이예요!

○委員長代理 吳長燮 金映宣 委員 발언하세요.

○李源馥委員 金映宣 委員 먼저 發言權 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發言權 주세요. 저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長燮 그것은 사회자 고유권한입니다. 왜 사회자 보고 지명합니까?

○金映宣委員 제2건국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제2건국을 구상하는 사람이 정말 실속있는 것을 진행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제2건국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1건국에 포함된 사람들이 그 생활흐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2건국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장관님 얘기로 하면 신한국운동과도 같은 것이고 새마을운동과도 같은 것이고, 새마을운동과도 같은 것이라면 결국에는 그때 그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동네잔치를 하는 것인데 그런 똑같은 개념 갖고 새롭게 예산을 쓰실 것 같으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第2建國委員會의 기획단장을 맡으셨다고 하는데 金正吉 長官님은 적격은 아니고 이 돈은 낭비예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吳長燮幹事, 金鎮載委員長과 사회교대)

두 번째로는 제2건국이라고 하면 그 전과 비교해서 새로운 지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주체를 갖고 어떤 과제를 갖느냐 실속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회의의 경우에는 勞働者라든지 庶民 또는 소외된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執權을 했는데 현재 수행해야 하는 것은 보다 세련된 자본주의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제2건국에 그 두 가지 흐름 중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어떤 사람을 주류로 할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회의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있어서 좀더 그 시대에 부각되는 주제들을 강력하게 밀고 나오는 추진력으로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이 하는 얘기에 있어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하고 모든 시민 국가 국민들을 다 망라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官邊團體가 아니라고 하는데 市民運動이라고 하는데 시민운동의 주된 핵심은 官과 단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시민운동의 전개는 多樣性과 自律性에 있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관련돼 갖고 모든 주제들을 통괄합니까? 그것은 재벌논리와 같은 것 아니에요? 결국 運動의 財閥論理化인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지금 위원회가 많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도 우리가 제2정무장관을 반대를 했는데 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제2의 정당이고 한편으로 보면 제2의 의회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감시기구일 수도 있고 이런 정체불명의 것들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기능이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고 결국에는 국민의 정부가 이 일 저 일 다 한 것 같지만 아무 일도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그리고 그 책임을 어디서 지게 되느냐 하면 제2건국과 같은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해 보면 제 생각에는 제2건국을 이런 식으로 무모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낭비에 불과하고 무모한 그리고 비난만 사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이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예, 金映宣 委員님, 잘 알겠습니다. 金映宣 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委員長 金鎮載 李源馥 委員님, 그러면 종합 정리하는 차원에서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李源馥委員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國政改革運動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범국민운동이 국민이든 또 일반시민이든 官이든 공무원이든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與野 할 것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정함에 있어서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용어에 대한 것 하나만 저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정개혁운동범국민추진위원회 이래버리면 그래도 비교적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이 개혁되어야 되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이 용어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운동범국민추진위원회 이렇게 되면 리퍼런트가 우선 제2건국입니다 용어자체가. 제2건국은 바로 개혁운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한참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용어만 놓고 얘기하자면 지금 장관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대통령께도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선 제2건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부터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아까 각계 지도층이 많이 참석하셨다 그러셨는데 제가 그 분들한테 사실은 여쭙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들도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제2건국운동이라고 제2건국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2건국운동이라는 용어는 논란도 많고 정치적 오해소지도 많고 또 장차 다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도 누가 정권을 잡든 또 논란의 소지가 있고 그때 제3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야기되는 이것은 대단히 政治的 用語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폐지하시고 하신다면 방법론적으로 또 논란이 있겠습니까마는 용어에서부터는 우선 國政改革運動이라는 용어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2건국운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건의하셔서 안 했으면 좋겠다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鎮載 장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金映宣 委員님, 李源馥 委員님, 위원장으로서 한번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주신 용어선정문제는 지금 行自部長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론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별심사가 있으니까 부별심사 때 답변 듣기로 하고 아직 여러 분의 장관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답변은 조금 유예를 해주시면 부별심사 때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映宣委員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답해 준다면 다음 번에……

○委員長 金鎮載 지금 이 자리는 심도있게 답변



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잠깐 저……

○委員長 金鎮載 장관, 그냥 계세요.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다른 질의도 있습니다.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 또 있습니다.

○委員長 金鎮載 장관, 먼저 들어가 주십시오.

장관, 들어가 주시고 行自部長官, 수고하셨습니다. 李在昌 委員님……

○李在昌委員 위원장께서 지금 사회 잘못하신 것 같은데……

○委員長 金鎮載 제가 잠깐……

○李在昌委員 지금 답변을 듣다가 제2건국운동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외 질의한 사항에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장관께서. 그러니까 들어가시라고 그러지 말고 계속 답변을 하게 하세요. 제2건국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

○委員長 金鎮載 李在昌 委員님, 부별심사 때……

○李在昌委員 아니 아니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을 하게 해주세요.

○委員長 金鎮載 그러면 다른 장관들 조금 진행 하고……

○李在昌委員 아니 아니요. 지금 그 답변 중에 첫 번째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예요.

○委員長 金鎮載 지금 시간이 11시17분이 됐습니다……

○李在昌委員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듣도록……

○委員長 金鎮載 양해 못해 주시겠습니까? 꼭 들으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장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李在昌委員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그것을 왜 다른 장관 답변이 바쁘다고 중요한 답변을 하셔야 될 行自部長官을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委員長 金鎮載 제가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꼭 들으시겠습니까?

○李在昌委員 예, 듣겠습니다.

○委員長 金鎮載 좋습니다. 李在昌 委員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朴鍾根 委員님, 말씀하십시오.

○朴鍾根委員 위원장님 사회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면 간단하게 하든 어떻게 하

든 그것은 좋지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중간에 답변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委員長 金鎮載 지금 제가 계속 사회를 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鍾根委員 밤 11시가 아니라 12시가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위원장, 그렇게 진행시켜 주십시오.

○委員長 金鎮載 저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在昌 委員님께서 特別交付稅를 普通交付稅로 轉換하거나 廢止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를 補填하고 단체간 稅源의 불균형으로 인한 財政力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조정 제도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특별교부세는 각종 재해복구지원 국가단위 행사지원 등 지방의 예기치 못한 특별수요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재원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당장에 규모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법정교부율이 상향조정될 경우에 축소 통합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李在昌委員 장관, 지금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문제는 지금 장관께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11분의 1이라고 하는 6,00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실지 부족한 地方財政을 보충하기보다는 장관께서 물론 재해대책을 위해서도 쓰고 하지만 장관의 재량에 의해서 그것이 집행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좀더 투명성 있는 집행이 되어야 되겠고, 또 6,0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장관의 자의에 의해서 집행되는 財政運用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따라서 執行方法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특별교부세를 꼭 가져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옛날의 내무부장관은 정치장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했지만 지금 行自部長官은 그렇게 정치적인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이제 많이 축소되었고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게 재정이 운용되어야만 어려운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용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차라리 特別交付稅라는 제도를 폐

지하거나, 만약에 재해대책이라든지 지방에 예기치 않은 재정수요가 생길 때에 긴급히 조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적어도 1년에 한 300억 정도를 가지면 응급적인, 나머지는 정부의 豫備費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장관의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사실은 기대를 했는데 앞으로率が 올라가면 개선해 보겠다 이것은 아주 본위원의 질의와는 전혀 초점이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장관은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李在昌 委員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과거에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장관의 재량에 의해서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특별교부세를 배분한 내역을 80% 수준은 공개를 이미 했습니다.

○**李在昌委員** 장관, 80%를 공개하셨다고 했는데 이번 豫決委 자료에 보면 지역에 불공평하기도 해서 발표되면 지역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료를 못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나머지 20%는……

○**李在昌委員** 여기에는 20%고 80%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투명하게 6,000억원 이상 되는 돈을 장관께서 그냥 집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자신있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선 장관의 基本立場을 듣고 싶습니다.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李在昌 委員님의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배분함에 있어서 원칙을 공개를 하고 가능한 한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방을 가신다든지 할 때 쓰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범위를 축소해 나가도록……

○**李在昌委員** 바로 그런 제도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방교부세는 그렇게 쓰라고 하는 돈이 아니지요?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그러나 특별교부세를 배분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李在昌委員** 그러니까 지방재정을 공평하게 기본 재정수요에 못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地方交付稅制인데 그렇게 마치 판공비, 선심성 예산지원으로 운용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의 재정운용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李委員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李在昌 委員님께서 지방채 인수……

○**委員長 金鎮載** 장관, 답변을 아주 요약해서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예, 알겠습니다.

李在昌 委員님께서 地方債 인수용 財特資金에 대한 歲出內譯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저리 자금인 재특자금은 지역기반시설사업이라든지 지역SOC사업의 중요한 재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성격상 종합적으로 계상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자료를 기초로 사업의 중요성,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昌委員** 예산심의중에 調書가 나올 수 있나요? 사실 본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도 요청을 했더니 그때는 예상을 못하였기 때문에 못 내놓는다고 그래서 그냥……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이번에 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李在昌委員** 내년 예산에서는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99년도 예산에도 1조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내년도 것은 지금 자료를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李在昌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조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백지로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장관께서 생각하셔도 좀 무리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은 부별심사 때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그 안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行政自治部長官 金正吉**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鎮載** 행자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長官 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아까 朱鎭吁 委員님께서 韓·日漁業協定 관련 獨島의 國際法的 性格에 관련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마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鎭載 다음은 教育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李海瓚 吳長燮 委員님……

○委員長 金鎭載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教育部長官 李海瓚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李在善 委員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鎭載 다음은 科學技術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部長官 姜昌熙 科學技術부장관입니다.

金浩一 委員님과 劉容泰 委員님께서 최근의 연구개발투자 위축과 이로 인한 연구여건 악화를 우려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金浩一 委員님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劉容泰 委員님께는 양해해 주시면 부별심사 때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鎭載 다음은 文化관광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申樂均 文化관광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鄭亨根 委員님께서 정부 長·次官의 金剛山 觀光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文化관광 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통일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장·차관 고위인사들의 금강산 관광방안을 추진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部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東周 委員님……

○金東周委員 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文化觀光部長官 申樂均 예,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權哲賢委員 어제 부산 컨벤션센터와 부산국제 영화제 추진에 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의견에 동감하시지요?

○文化觀光部長官 申樂均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鎭載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部長官 金成勳 농림부장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吳長燮 委員님과 金浩一 委員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在昌 委員님께서 農振公 農組 統廢合 計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李在昌委員 서면답변 해주세요.

○農林部長官 金成勳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協同組合 統廢合에 대한 질의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權琪述 委員님과 朱鎭吁 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답변들도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鎭載 다음은 保健복지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部長官 金慕妊 保健복지부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浩一 委員님께서 보험료 부과기준 개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마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李聖宰 委員님의 답변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金東周 委員님의 질의도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元裕哲 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趙洪奎 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趙洪奎委員 서면으로 해주세요.

○保健福祉部長官 金慕妊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鎭載 다음은 環境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崔在旭 존경하는 吳長燮 委員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東周 委員님의 질의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鎭載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李起浩** 먼저 李在善 委員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턴 活性化方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李在昌 委員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公共勤勞事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李聖宰 委員님 그리고 朱鎭野 委員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是正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사업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편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공원정비라든지 잠초제거 그런 就勞性格의 事業은 지난 8월에 전부 폐지를 했고 최근에는 사회복지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전산 DB사업이라든지 또는 저수지 준설사업 또는 숲 정비사업 특히 정보화 사업 등으로 전부 개편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참여자의 不適格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나 시·군·구에 취업을 등록한 소위 求職登錄을 한 분들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이 참여자의 道德的 解弛問題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成果給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림가꾸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 1일 작업량을 설정해서 그 작업이 완료된 후에 임금을 지급하고 지하매설물, 정보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물량을 설정해서 그 물량이 완료된 이후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성과급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공공근로사업을 SOC사업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내년 예산에 SOC예산으로 12조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11조5,00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약 50만명이 넘는 1일 노동자의 저소득 실직자의 生活安定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SOC事業은 사업상에 있어서 公共勤勞事業보다 훨씬 높습니다마는 이를 준비하는데만, 가령 기획을 한다든지 설계하는데 1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50만명이 넘는 일일노동자를 흡수하는데는 매우 제한적인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企業의 競爭力 強化를 위한 예산도 많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금융구조를 위한 그러한 사업에 64조원이 투입이 되었고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미 100조원에 가까운 신용보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2조원은 그야말로 50만명의 어려운 일일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정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公共勤勞事業은 과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어서 실업기간에 있어서 또 대공황기에 있어서 많이 사용했던 사업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흔히 뉴딜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TVA를 손꼽고 있습니다마는……

○**委員長 金鎭載** 노동부장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李起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특히 IMF를 경험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급증하는 失業問題를 해결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사업성을 높여서, 그리고 보다 더 효과적인 또 능률적인 사업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元裕哲 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실업예산에 대한……

○**元裕哲委員**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질의에 있어서 노동부장관님하고 보건복지부장관님한테는 서면답변을 요구했거든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勞動部長官 李起浩**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鎭載**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部長官 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浩一 委員님, 鄭亨根 委員님, 李在善 委員님, 金東周 委員님, 元裕哲 委員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6차 회의시에는 全錫洪 委員님께서 다목적댐 관련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선 全錫洪 委員님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全錫洪 委員님께서 97년10월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耽津댐

주민들의 영농보상이 불리하게 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公共事業에 대한 營農補償은 보상 당시 제외되고 있는 작물을 기준하여 보상토록 하여 왔습니다마는 국화, 벼 등도 영농보상 대상이 되도록 95년 공특법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자 고액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벼 등을 심던 논밭에 국화 등을 심는 보상탈법 행위가 龍潭댐 등 일부 댐건설 예정지에 만연하여 97년10월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원래의 영농보상 취지에 맞도록 댐건설 예정지역 제정고시 당시의 작물을 기준으로 보상토록 하여 탈법적인 作物變更行爲를 막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耽津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상제도 변경이 대단히 불만스러울 수 있으나 앞으로 건설하게 될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耽津댐에 관해서 많은 대표들이 와서 직접 제가 어제 낮에 잠깐 의원회관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 이분들에 관해서 최선을 다 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이 통과되면 가급적이면 국고로 주변지역 정리 등 여러 가지 民願事項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全錫洪 委員님께서 麗川産業團地 주변마을 移住對策과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질의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해줄 법적 근거하고 그리고 또 재원을 어떻게 분담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만약 여천산업단지가, 제가 13대 국회의원때부터도 이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移住對策費를 해주었을 경우에 앞으로 여타 산업단지에 과급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國務調整室 主管으로 현재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을 검토를 해서 행정자치부, 환경부, 또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만간 정부 방침이 결정되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되겠습니까?

○全錫洪委員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이야기만 좀 드릴 테니까 참고로 들으시고요.

아까 法的根據 말씀하셨는데 법적 근거란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보조 주어가지고 해도 관계가 없어요. 법적근거, 새로이 법을 만들 필요없이 주더라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들께서는 他 地域 이야기 하셨는데 그 지역을 아마 장관께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공장이 있는 가운데에가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피부병이고 무엇이고 굉장합니다. 폐에 대한 병, 그래서 지금 여기 국민회의 모두 계시지만 야당때 여러 번 거기 갔다 왔습니다.

○建設交通部長官 李廷武 저도 다녀왔습니다.

○全錫洪委員 다녀오셨으면 더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런 지구는, 그러니까 10개 마을중에서 인접한 4개만 1단계로 옮기자 이거예요. 인접한 마을만 우선, 그래서 이제 所管部處가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소관부처가 지금 애매해요. 그래서 작년에 총리께 질의하고 올해 총리께 또 질의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총리실에서 회의하고 건설부 담당지정을 하고 5억원을 特別交付稅를 주어가지고 타당성조사 끝났단 말씀입니다. 그랬으면 이어서 바로 조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보아지고 타지역때문에 못한다 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 재고를 좀 하십시오. 왜냐 하면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部長官 李廷武 예, 알겠습니다.

○全錫洪委員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 얼마 안 들어요. 26억이에요. 이것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확보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建設交通部長官 李廷武 여수시에서 399억원을 요청해 오에 따라서……

○全錫洪委員 우선 26억하고 설계비 조사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또 확보해서 하고 26억 設計費라도 확보해서 조금 주민들 어루만져 주고 그 다음에 또 확보하고 그것이라도 해주세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部長官 李廷武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마는 건설교통부 입장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金浩一 委員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亨根 委員님께서 내년도의 SOC사업의 신규사업선정과 예산배분이 特定地域에 편중되었다고 지적하시며 장관의 견해를 물으시고 釜山圈의 交通

難緩和를 위해 김해 경전철, 부산-울산 복선전철의 조기건설과 광역교통시설지원 범위를 부산권까지 확대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내년도 저희 부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SOC사업은 총 11개 사업입니다. 99년도 예산안 新規事業選定은 교통애로나 물부족 문제, 홍수피해 예방, 서민임대주택 등과 같이 국민의 불편해소와 기업생산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중에서 타당성이 입증되거나 지역개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위주로 선정한 것으로 地域均衡開發政策을 수립하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政治的 또는 地域的 考慮에 의해 신규사업을 선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철도예산중 전라선, 호남선, 충북선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全羅線은 광양항과 광양 여천지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시급한 사업이며 湖南線은 68년도 사업에 착수한 이후에 복선화가 30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어쨌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한 사업이므로 이를 조기완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忠北線 電鐵化事業은 경부선과 중앙선이 전철화 됨에 따라서 두 노선을 연계하여 우회노선을 통해서 경부선 수송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해 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 중앙선 덕소-원주간 전철화사업과 金海 輕量電鐵 建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울산과 덕소-원주사업은 금년말까지 實施設計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용지매수 및 路盤工事を 착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정부 재정 형편상 예산을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김해 경전철은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고지원 범위를 조기 확정된 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과 중앙선 덕소-원주 전철화사업 첫째 사업은 302억원이고 그 다음 사업은 135억원, 김해 경량전철사업의 검토를 위한 20억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추가반영해서 현재 豫決委에 심의 요청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李在善 委員님께서 현재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는 광역도로의 적용범위를……

(「안 계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周 委員께서……

(「서면답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주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元裕哲 委員께서 내년도 SOC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어 무리한 집행과정에서 줄속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똑같은 내용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談合問題하고 低價入札問題하고 不實工事問題하고 특히 SOC사업을 실업대책으로 조기 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새로운 대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해서는 상세히 저희 부에서 하는 계획과 내용들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劉容泰委員 장관님,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택시운전수 월급제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서면으로 질의서를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建設交通部長官 李廷武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劉容泰委員 일체 언급이 없으시니까……

○建設交通部長官 李廷武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을 못 보고 구두로만 메모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劉容泰 委員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월급제에 관해서는 제가 구두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權哲賢委員 새만금공항과 전주공항과 군산공항 작은 면적 범위내에 3개의 空港建設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建設交通部長官 李廷武 어저께 아마 權哲賢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들어와 있는데 새만금 간척지역에 새만금공항계획이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고시한 空港開發 中長期基本計劃에는 새만금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로서는 우리 나라의 공항의 기본계획을 짜는 부서로서는 새만금공항은

계획한 바도 없고 현재 계획해놓은 것도 없습니다.

○**權哲賢委員** 최근에 柳鍾根 知事が 토지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서 그쪽에 新空港計劃을 제출했지요?

○**建設交通部長官 李廷武** 아닙니다. 아직까지 토지이용계획을 우리에게서는 아마 제출하지 않았습니

다.  
○**權哲賢委員**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農振公 새만금개척에 공항계획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建設交通部長官 李廷武** 아닙니다. 그것은 도 단위에서는……

○**權哲賢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애초에 이 계획을 짰을 때에 거기에 신공항 계획부지가 들어가 있었고 아주 최근에 나온 농어촌진흥공사의 업무보고서에도 신공항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저희들한테 나누어 준 홍보자료에도 공항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어요. 전라북도에…… 그런데 최근에 農振公이 불과 2·30일전에 그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공항그림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柳鍾根 知事が 아, 이것 날라가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자기들 계획서에 그것을 넣는, 그 세미나 같은 것을 해서 발표를 했던 말이에요. 이렇게 요청하셨다……

그러면 결국은 農振公 처음 계획에도 있었고 柳鍾根 知事も 그것을 원하고 있고 전주공항은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고 군산공항은 현재 활용중에 있던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建設交通部長官 李廷武** 그런데 공항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지 않으면 공항이 될 수가 없는데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農振公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농림부장관이 내용을 다 아실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현재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로는 새만금공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문서나 구두로 협의를 받은 적도 없고 접수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은 군산에서 3km밖에 안되는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 공항이 생기는 것을 검토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鎮載** 건교부장관, 잠깐만 답변 중지해주세요.

權哲賢 委員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건교부장관

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음 부별심의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權哲賢委員** 아니, 장관님이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얼마나 말씀이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시간 충분히 주십시오.

○**委員長 金鎮載**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全錫洪 委員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全錫洪委員**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아까 질의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일반 댐 만드실 때 제일 전국적으로 문제된 것이 댐 보상비 줄 때 부분적으로 줍니다. 자기 가진 것 토지도 있고 밋도 있는데…… 이러니까 이주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포괄해서 주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建設交通部長官 李廷武** 예. 耽津댐도 지금 603억을 보상했는데 여하튼……

○**委員長 金鎮載** 장관님 그것은 답변 필요없습니다.

權五乙 委員께서는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權五乙委員**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이 왔는데 그 고속도로나 고속국도에 南北軸 위주로 되었는데 東西軸이 많이 부족하다. 그것에 대한 서면답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시행중인 안중-평택에서 청주·상주·전주·함양·대구·포항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중인 평택-음성, 음성-제천·안동-영덕등은 지역균형개발촉진과 高速道路網 連繫性 提高를 위해 가능한한 早期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것 참 애매합니다.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금년도에 뭐 그 設計費를 반영한다든가 기초조사비를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맞는데 조기에 착수하겠다, 올해도 早期고 내년도 조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委員長 金鎮載** 權五乙 委員님, 말씀도중입니다. 마는 오늘은 次數變更이 불가능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乙委員**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교부장관께서 조기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금년도 예산에 基礎調査費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낙후지역에 대한

조기개발을 위해서 개발촉진지구 하는 것 여기에 보면 답변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 사업대상으로 99년도에 검토중임……

○**委員長 金鎮載** 의사진행에 협조 바랍니다.

○**權五乙委員** 그런데 중요한 것은 中央政府豫算이 없어서 돈 투자하기는 어려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99년도에 사업대상으로 검토를 하면 당연히 중앙정부예산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사업대상으로 검토하는데 중앙예산은 돈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1차 2차 3차에 지적한 것도……

○**建設交通部長官 李廷武** 예, 문제가 있습니다.

○**權五乙委員** 중앙정부예산이 계획대로 투자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部長官 李廷武** 특히 재원이 土特會計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土特會計가……

○**權五乙委員** 답변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 점에 대해서 99년도에 사업시행하시고 중앙정부예산도 아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세출삭감요인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을 돌려서라도 투자를 하셔야지요.

○**委員長 金鎮載** 장관은 참고해 주십시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趙洪奎委員** 위원장,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金鎮載** 趙洪奎委員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趙洪奎委員**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國會法상 次數變更이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관행도 그렇고 또 내일 중요한 예산결산하고 관계된, 특히 豫算案하고 관계된 중요한 公聽會가 아침부터 있습니다. 그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자정이 넘으면 자동 散會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가장 중요한 답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복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豫算案을 앞두고 주무 장관인 재정경제부장관이 綜合的인 報告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촉박한 시간에 5분내에 답변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部別審議할 때까지 끌기도 그러니까 서면으로, 지금까지 3일동안 政策質疑한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書面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셔서 내일 公聽會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다시 部別審議부터 심도있게 또 논의

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정식으로 議事進行으로 動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것으로 정부측 답변을 終結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일 공청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위원장께서 재량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鎮載** 趙洪奎委員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통일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예산청장께서는 방금 趙洪奎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성실한 書面答辯書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별심의하는 데 전혀 지장이 오지 않게끔 빠른 시한 안에 答辯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綜合政策質疑를 위해 우리 위원회가 확보한 시간이 오늘 자정까지이므로 불가피하게 정책질의를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받기로 하고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部別審査를 활용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안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綜合政策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豫算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애쓰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이 넉넉치 못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散會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豫算案에 대한 公聽會로서 11월26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3시58분 산회)

○**出席委員**

金 鎮 載	朴 鍾 根	權 琪 述	權 五 乙
權 哲 賢	金 光 元	金 映 宣	金 榮 駟
金 浩 一	羅 午 淵	朴 世 煥	朴 源 弘
朴 憲 基	李 敬 在	李 信 範	李 源 馥
李 應 善	李 在 昌	全 錫 洪	鄭 亨 根



朱鎮吁 崔鉛熙 趙洪奎 吉昇欽  
 金元吉 金台植 盧武鉉 柳在乾  
 서한삼 元裕哲 劉容泰 尹鐵相  
 李相洙 李聖宰 李龍三 張乙炳  
 鄭漢溶 趙漢天 吳長變 金東周  
 金鍾學 魚浚善 李相晚 李麟求  
 李在善 池大燮 韓利憲

産業資源部次官  
 情報通信部次官  
 保健福祉部次官  
 勞動部次官  
 建設交通部次官  
 海洋水産部次官

崔弘健  
 安炳燁  
 崔善政  
 安榮秀  
 崔榮燾  
 全鍾璨  
 全昇圭  
 李建春  
 嚴洛鎔  
 姜最薰  
 李相浩  
 金世鈺  
 剛輔植  
 李秋俊  
 金守錫  
 朴鍾東  
 鄭金煥  
 金大圓  
 尹文英  
 鄭勝東  
 張壽貴  
 安正昊  
 李康男  
 孟廷演  
 金炯柱  
 李永鎮  
 金東來  
 金永哲  
 熙鮮

○委員아닌出席議員

姜賢旭 金範明 金一潤 金宗鎬  
 朴柱千 邊雄田 張永喆 李良熙

關稅廳長  
 關稅廳長  
 調達廳長  
 兵務廳長  
 警察廳長  
 農村振興廳長  
 山林廳長  
 中小企業廳長  
 特許廳長

食品醫藥品安全廳長  
 鐵道廳長  
 海洋警察廳長  
 統計廳長  
 氣象廳長  
 豫算廳次長  
 法制處次長  
 國家報勳處次長  
 國稅廳次長  
 關稅廳次長  
 調達廳次長  
 警察廳次長  
 農村振興廳次長  
 中小企業廳次長  
 特許廳次長  
 食品醫藥品安全廳次長

○出席專門委員及立法審議官

專門委員 張錫準  
 專門委員 全河聲  
 立法審議官 崔滉洙  
 立法審議官 朱永鎮

食品醫藥品安全廳長  
 鐵道廳長  
 海洋警察廳長  
 統計廳長  
 氣象廳長  
 豫算廳次長  
 法制處次長  
 國家報勳處次長  
 國稅廳次長  
 關稅廳次長  
 調達廳次長  
 警察廳次長  
 農村振興廳次長  
 中小企業廳次長  
 特許廳次長  
 食品醫藥品安全廳次長

○出席國務總理及國務委員

國務總理 金鍾泌  
 財政經濟部長官 李揆成  
 統一部長官 康仁德  
 外交通商部長官 洪淳瑛  
 法務部長官 朴相容  
 國防部長官 千金宅  
 行政自治部長官 金正海  
 教育部長官 李昌瓚  
 科學技術部長官 姜昌熙  
 文化觀光部長官 申樂均  
 農林部長官 金成勳  
 情報通信部長官 裴洵勳  
 保健福祉部長官 崔慕妊  
 環境部長官 李在旭  
 勞動部長官 李起浩  
 建設交通部長官 李廷武  
 海洋水産部長官 金善吉

○出席國務總理及國務委員

○出席政府委員

豫算廳長 安炳禹  
 法制處長 金弘大  
 國家報勳處長 金義德  
 財政經濟部次官 鄭德世  
 統一部次官 丁宣峻  
 外交通商部次官 崔慶元  
 法務部次官 石泳哲  
 行政自治部次官 趙宣濟  
 教育部次官 宋鈺煥  
 科學技術部次官 金鈺東  
 農林部次官 金東泰

○法院參席者

行政處長 安邊  
 行政次長 龍在

得承

○監査院參席者

事務總長 安繁

一

○憲法裁判所參席者

事務處長 張朴  
 事務次長 應容

水相

○中央選舉管理委員會參席者

事務總長 孫石  
 事務次長 任左

鎬淳

○企劃豫算委員會參席者

委員長 陳稔

稔

○女性特別委員會參席者

委 員 長	尹 厚 淨
事 務 處 長	車 明 姬

○公正去來委員會參席者

委 員 長	田 允 喆
副 委 員 長	李 南 基

○金融監督委員會參席者

委 員 長	李 憲 宰
副 委 員 長	尹 源 培